PDF 자료집

주체 90(2001)년

반 朝鮮日報



6.15주간 편집부

반조선일보

6.15 주간 편집부



조선일보 그 행적을 알아본다

구국의 소리 방송 / 주체 90년 4월 10~12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오 일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최근 언론권력에 대한 국민의 반란이 시작되었는데요 안티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조선일보 반대운동이 그 한가지라고 봅니다. 그럼 왜 독자들이 특정신문사인 조선일보를 지목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조선일보가 걸어온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으면 합니다. 조선일보에 대한 행적 얘기에 앞서서 요즘 경향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선일보반대운동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오 일 :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일보에 대한 반대목소리가 높이 울려 나오고 있어요. 안티조선이란 이름으로 번지고 있는 조선일보반대운동은 ****. 이제껏 주면 주는 데로 받아보기만 하던 독자들이 지금 언론개혁에 나섰는데요. 서울에서 제주까지, 지식인에서 농민까지, 청소년에서부터 노인 층 등 각계각층 사람들이 언론권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 언론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티조선으로 대표되는 언론권력저지운동은 ** 획기적인 사건으로 됐습니다. 시민단체와 국민 각계각층들의 나온 소리에서만 봐도 조선일보가 걸어온 반민족, 친일행위를 고발한 것으로 일관되고 있는데 매우 정당한 지적이라 하겠습니다.



사회자 : 네, 자고로 언론은 사회의 공기요 **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걸어온 길을 보면 사회의 선구자가 아니라 민족내부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나팔수, 나가서 범죄집단으로 낙인되고 있죠.

오 일 : 네 그래요. 원래 조선일보라는 ************ 거기에 종사하는 언론집단은 분단오물들이 모인 파렴치한들의 반역집단으로 그 명성이 자자했는데요.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을 전도하는 문구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외의 ******하는데 앞장서는 것도 당연히 *******. 최근 조선일보가 시민단체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죠.

사회자 : 독초뿌리에서는 독초밖에 돋아 날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반역의 가두만을 달려 온데는 신문을 경영하는 핵심들부터가 민족반역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회에 조선일보 경영진의 핵심부 내력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오 일 : 네, 아시는 것처럼 조선일보는 1919년 3월 5일 그러니깐 3.1운동이 있은 직후에 창간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노정을 보면 매우 **어요. 특히 8.15광복 때 행적으로만 봐도 흉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혹자들은 마치도 조선일보가 공정성, 보편성이라도 가지고 있는 언론집단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실지로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선 현재 조선일보를 만들고있는 경영진부터가 과거 일제 때 친일매국을 한 자들이거나 광복 후 독재권력의 꼭두각시가 되어 매국배족을 일삼던 그 일가 족속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회자 : 그러니깐 조선일보를 책임지고 있는 방상권, 방우영, 방일영 등 방씨일가 족보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오 일 : 그래요, 지금 조선일보는 사실상 방씨일가 족속들에 의해 경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물급들의 행적이 어떤가 하는건데요. 우선 방일영에 대해 보기로 하죠. 원래 방일영의 고향은 평안북도 **인데 거기서 태어났지요. 일제 때 악질적인 친일주구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일제를 숭상하고 친일을 하는데 발벗고 나선 특등친일족속입니다. 방일영의 이 같은 친일체질은 그가 43년 조선일보사에 근무하면서 여지없이 드러났는데요. 내선일체에 동조하는 등 황국시민화를 열창하는 민족반역자들을 극히 찬양하는 글을 대서특필 한 것도 방일영이었구요, 반일애국투사들을 이적단으로 중상비방한 것도 다름 아닌 이자였어요. 방일영의 행적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5.16쿠테타 후 이후락과 가까이 지내면서 중앙정보부첩자로 전락돼 무고한 시민들과 통일민주애국들을 무참히 학살케 한겁니다.

사회자 : 그런데요. 방일령의 동생이라고 하는 방우영 역시 그런 민족반역자, 인간추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 일 : 콩 심은 밭에 콩 나고, 팥 심은 밭에 팥 난다고 친일족속가문에서 태어난 방우영도 방일영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일제시기 그는 친일주구단체에서 근무하면서 독립운동자, 애국자들을 학살하는데 앞장섰구요, 특히 그의 반역적 체질은 그가 53년부터 조선일보사기자로 그후 54년 동신문사 사장으로 발탁되면서 더욱 노골화되었는데요. 방일영의 연줄로 중앙정보부의 끄나풀이 된 그는 신문을 중앙정보부의 언론지침에 따라 독재정권을 비호하고 북을 헐뜯는 반북반공 모략지로 완전히 전락시켰는데요. 그래서 내외에선 조선일보를 가리켜 명실상부한 언론이 아니라 중앙정보부에서 경영하는 정보부언론으로 낙인했는데 이건 결코 우연치 않다고 봐요.

사회자 :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사 우두머리들이 바로 이런 친일파, 민족반역자, 반북모략의 명수로 이루어졌으니까 신문이 매문지, 모략지로밖에 달리 될 수 없구요, 국민은 물론 언론에 종사하는 언론인들 속에서까지 비난과 배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시각을 조금 달리 해가지구요 실제로 조선일보가 행한 작태를 예를 들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 일 : 네, 조선일보가 걸어온 행적에서 가장 악랄한 건요. 애당초 동족을 동족으로 보지 않고 소멸해야할 원수로 여기면서 악랄하게 헐뜯고 모략행위를 일삼는 것이라고 봐요. 심지어 기회 있을 때마다 이북의 체제까지 걸고들면서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남의 체제야 어떻든 그건 결코 언론이 말할 바가 아니죠. 더욱이 존엄 높은 이북의 체제를 왜곡하다 못해 날조까지 해서 이득을 볼게 무어냐 하는 거예요. 이북이 이남과 손을 맞잡고 대화를 하고 통일논의를 하는 상대로 봤을 때 더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대화대방인 통일을 해야할 상대의 체제까지 왜곡, 날조해서 비방중상하니 이것부터가 반민족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 핏줄을 나눈 동족을 동족으로 대하지 않고 소멸해야 할 적으로 보구요 그들이 의거하고 있는 삶의 보금자리까지 무너뜨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는 자들이야말로 이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수 없는 반역의 무리들이라 그 말입니다.

사회자 : 물론 최근 수년간 이북이 몇 년 동안 계속된 자연피해와 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시련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건 이북이 사회주의로 나가는 과정에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결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반역집단은 같은 핏줄을 나눈 동족이 일시적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데 대해 동정은 해주지 못할망정 그것을 호기로 삼아 가지고 반북모략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마치 놀부의 심보와 같다고 할까요.

오 일 : 예, 고약한 심보라고 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조선일보 반역집단이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바른말을 해야할 거예요. 민족의 한부분인 동족을 질식시키려고 봉쇄정책이나 강압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는 미국이나 제국주의연합을 규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민족적인 것으로 되고 또 애국적인 것으로 될거예요.

사회자 : 그렇죠. 조선일보가 얼마나 흉악한 민족반역집단인가는 것은요, 95년에 있었던 있지도 않은 북의 남침위협소동만 봐도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오 일 : 네,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데요. 조선일보의 허구적 남침위협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를 한다, 산간오지로 피난을 갈 준비를 한다, 난리통에 먹을 식량을 준비한다 어쩐다하며 야단법석이었습니까. 조선일보 반역집단이 있지도 않은 남침용 땅굴작전을 수차에 걸쳐 집요하게 대서특필하다가 그게 들통이 나서 망신만 당한 것도 그렇구요, 특히 94년 7월 이북에서 뜻하지 않은 국상을 입고 상실의 아픔에 통곡할 때 북에 대해 야유, 희롱하는 천추에 용납못할 범죄행위를 감행한 것을 비롯해 조선일보집단이 저지른 반역행위를 꼽자면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봅니다.

사회자 :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건요, 조선일보가 6.15남북공동선언 발표이후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반북모략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오 일 : 네, 그래요. 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고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선언이고 새 세기 자주통일의 이정표, 민족공동의 투쟁강령, 통일애국의 기치예요. 공동선언대로만 하면 통일은 확정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조선일보집단은 선언발표 이후에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역행하는 언동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있구요, 북에서 도망온 자, 인간추물들을 내세워 북을 악랄하게 헐뜯게 하는가 하면 남북사이에 좋게 발전하는 협력과 교류에 대해서도 시비, 중상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분명히 말하건데 조선일보집단은 반민족매국자들만이 서식하는 반역집단인 것입니다. 이런 범죄집단이 언론행세를 하며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야말로 민족의 수치이고 ** 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자 :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반역집단을 그대로 두어서는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이 더 큰 화를 입게 되죠. 우리 국민은 조선일보를 구독하지 말아야 하구요, 아예 폭파해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할겁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이 민족사에 끼친 죄악

지식인 김석학씨 / 구국의 소리 방송 주체 90년 5월 28일~30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이후 우리의 통일운동은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 각계애국민중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자신의 힘으로 하루빨리 성취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지니고 조국통일운동에 총매진해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여 조선일보와 월간조선 등 수구언론은 언론 본연의 사명자체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게 역사를 왜곡하고 통일을 악랄하게 반대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번영과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의 어지러운 행적을 까밝히는 것은 수구언론을 반대하는 각계민중들의 통일운동에 일정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반민족적 죄행을 폭로한다.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을 비롯한 수구언론의 반민족적 행적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조선일보는 조선백성의 신문이기를 포기하고 일본천황의 신문이 되기로 자청한 모양 같았다. 1935년 4월 29일자 사설 말미에 ≪신동아건설의 성업을 수행하여 황조일본의 위강을 빛내이자≫면서 충성맹세를 늘어놓은 뒤 ≪천황의 무강과 황실의 번영을 받들어 축하하면서 우리가 병행하는 이유를 강조하여 쓴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당시 쏟아져 나온 기사들은 모두 친일화제로 일색되었다.

1935년에 창간된 월간조선의 전신인 잡지≪조광≫은 1944년 8월호에 ≪대만의 일어해독자 6할에 비해 조선인의 일어해독자 비율은 26%밖에 되지 않아 황국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한 글이 실렸다. 결국 우리 말과 우리 글을 버리고 일본말과 일본글을 생활화하자는 것이 이 기사의 논지이다. 이 기사의 제목이 이름하여 ≪국어를 사용합시다≫이다. 그때 친일파인 편집장 방응모의 국어는 일어였던 것이다. 실제로 1940년대 들어서는 한글잡지인 ≪조광≫에 일문기사를 게재하는 등 친일잡지로서의 변신을 시도했다.

조선일보는 우리 말은 물론이고 백의민족의 상징인 백의(흰옷)를 자학적으로 비방했던 반민족적 신문이기도 하다. 1927년 12월 17일자 조선일보의 사설을 살펴보자. ≪백의 폐기하자. 꼴사납고 불경죄이요, 외인의 조소조차 받고 있는 백의를 폐기하자. 백의인, 백의민족의 말은 명예나 자랑삼아서 내세울 것이 못된다.≫ 한마디로 우리 말과 우리 옷이 꼴사납고 창피하니 더 이상 쓰지도 입지도 말자는 주장이다. 백의민족의 후예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정작 조선총독부가 ≪백의폐지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조선일보의 그 기사가 나간지 꼭 10년 후인 1937년이다. 그나마 조선총독부는 ≪조선민중의 민족감정차원의 문제로 급격한 폐지는 반발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당시에도 조선일보는 이 정도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안받침한 일등변신신문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자칭 ≪민족지≫, ≪할말을 하는 신문≫ 조선일보의 정체이자 뿌리이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가 일제의 폐간조치를 어떻게 감수했다는 가를 그의 폐간사설을 놓고 보자. 조선일보는 ≪신문통제의 국책과 총독부당국의 통제방침에 순응하여 금일로써 폐간한다. 지나사변 발발이래 본보는 보도국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고 더욱이 동아신질서건설의 위업을 성취하는 데 만의 일이라도 협력하고자 숙야불여한 것은 사회일반이 주지하는 사실이다.≫ 일제의 지상목표인 ≪동아신질서건설≫의 위업을 성취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분발했음을 읍소하며 조선총독부의 방침에 순응해서 폐간조치를 감수하기로 하였다고 지껄인 것이다.

조선일보폐간 이후 방응모가 ≪조광≫을 확대개편한 뒤 천인공노할 기사를 양산해 내면서 노골적인 친일행각에 나선 것은 다음의 기사들에서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

≪한일합방은 조선의 행복을 위한 조약. 매나우치총독은 조선의 대근원기초한 위대한 창업공신. 일제의 30년 조선통치로 문화조선건설이 가능했다. - 1940년 7월호≫

≪신년을 맞이하여 천황폐하, 황후폐하, 의공전하, 시공, 효공, 순공, 천공, 산해, 신왕전하께옵서도어 건강하시옵기를 삼가 비는 바입니다. - 1941년 1월호≫

≪내 손으로 지은 쌀을 내 마음대로 소비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이 구체제라면 내 손으로 지은 쌀, 내 자본으로 만든 물건을 모두 들어 나라에 바치고 그 처분을 바라는 것이 신체제이다. - 1941년 2월

호≫

한일합방이 ≪조선의 행복을 위한 조약≫이라 하는 것은 민족과 역사에 대한 극악한 반역이 아닐 수 없다. 천황폐하와 그 일족의 ≪어 건강≫을 바라는 것은 조선일보에게는 왜놈왕이 임금님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의 쌀과 물건은 모조리 일제에게 바치라고 설교한 건 조선일보가 촉구한데로 우리 민중들은 1941년 당시의 쌀 수확량의 43.1%, 1944년에는 63.8%를 일제에게 수탈 당해야 했다. 덕분에 조선백성들이 초근목피로 겨우 목숨을 부지해야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조광≫편집장 방응모의 친일단체활동경력은 기가 막힐 지경이다. 방응모는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시국가요≫와 ≪황군격려사≫를 제작하고 ≪황군지원≫과 전쟁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전선순회 시국강연단≫을 조직하여(1928년) 전국을 순회하며 중일전쟁에 전 국민이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황군만세!≫를 선창한 놈이다. 또 이자는 자신의 사재를 출자해 고사포를 일본에 기증하여 일본군의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자본을 출자하였다. 사실자료들이 입증해 주고있는 바와 같이 조선일보와 ≪조광≫의 일제시대의 행적은 철저히 반역사적, 반민족적 죄행으로 일관되어 있다.

광복 후 조선일보와 ≪조광≫은 일제 때 범한 반민족적 행위에 대해 민족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놀라운 변신술로 ≪친일≫에서 ≪친미≫로 돌았다. 그리하여 미제의 대한식민지정책에 적극 동조하였고 친미독재세력에 아부굴종하고 그를 미화분식함으로써 반민주적, 반민중적 행로를 계속 걸어왔다.



광복 후 조선일보와 ≪조광≫후신인 월간조선의 50여년 간의 반민족적 행적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다. 여기서는 다만 요즘 나타난 친미사대행위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자고 한다.

지난 2월 19일 경향신문은 콜린 파월 미국 무장관이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가진 첫 한미외무장관회담에서 사실상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것을 특종 보도하였다. 거의 모든 신문이 이것을 즉각 보도했으나 어쩐 일인지 조선일보에서는 단 한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기자들 자체가 미국은 가급적 돕겠다라는 인식이 사내에 팽배해 있다고 한다. 그러니 지금까지 보도태도를 보면 미국에 부정적인 사안은 대체로 침묵하는 경향이였다는 것이다.

미대사관도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우호적 언론≫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을 변수가 아닌 함수로 보고 기사화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은 남북대결과 친미사대를 고취하고 민족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반공반북이데올로기로 이북체제와 동포들을 사정없이 물어뜯고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친북≫, ≪용공≫의 모자를 제 멋대로 씌워 억울한 피해를 입힌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은 동족인 이북에 대한 표기법에서도 삐뚤어진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월간조선은 ≪미북이지 어째서 북미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은 적이 있었다. 당시 대다수언론이 ≪북미≫라고 표기한데 대해 월간조선편집장 조갑제는 ≪반국가단체인 북한당국을 우대하고 피로써 맺어진 우방을 홀대하는 이상한 표기법≫이라고 불만을 터뜨린 적이 있었다.

딴에는 분단상황에서 민족보다 체제, 혹은 이념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지. 그러나 그것은 분단의 원인과 구조에 대한 본질적 사고를 외면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도대체 분단상황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면서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심지어 조선일보는 일반적인 국민정서를 무시한 채 ≪북일≫이 아닌 ≪일북≫표기까지 고집해왔다.

특히 조선일보는 6.15공동선언발표 이후 통일분위기를 깨뜨리는 반민족적 글을 수많이 써냈다. 여기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지 산케이신문과 쌍둥이처럼 논조를 닮고 있는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 족할 것이다.

우선 6.15공동선언 후 약 3개월 동안에 산케이신문에 게재된 이북을 헐뜯는 사설제목을 보자.

≪조일교섭, 우리가 서두를 필요 없다. – 8월 25일≫

≪대북쌀지원, 국민의 이해는 얻지 못했다. – 9월 15일≫

≪북미접근, 대북포위망이라는 발상도 필요 – 10월 25일≫

이번에는 비슷한 시기에 조선일보에 실린 사설제목을 보자.

≪한나라당의 어정쩡한 태도 – 8월 25일≫

≪북에 끌려 다니는 장관급 회담 – 9월 3일≫

≪대북쌀, 왜 어물어물했나 – 9월 27일≫

≪북 핵, 미사일포기. 또 우리가 돈 내나 – 10월 25일≫

≪한완상씨의 북한 퍼주기 비판 – 2월 1일≫

두 신문의 사설제목을 비교해 보면 놀랍게도 논조가 엇비슷하지 않은가.

조선일보와 월간조선 등 수구언론의 반역사적, 반민족적 죄행을 추적하자면 끝이 없을 성싶다.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이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강물에 분노하거나 울분을 토한다 해도 민족사는 자기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다.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 뭔가 잔뜩 못마땅해하는 불편한 심사를 가지고 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과거 어지러운 행적을 국민앞에 사죄하고 언론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민중의 언론, 민족의 언론이 되어 대세의 흐름에 합류해야 할 것이다.

각계애국민중은 이 땅에서 수구언론이 더는 활개를 치지 못하게 수구언론배격투쟁을 전 민중적 차원에서 강도 높게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의 국가안보상업주의 곡필과 오보 10선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분과-

언론운동단체 회원들이 조선일보의 보도와 논조를 비평하는 일에 직접 나섰다. 그들은 첫 번째 작업의 초점을 조선일보의 ≪국가안보상업주의≫에 맞추었다. 한 달간의 긴 작업을 끝낸 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조선일보는 ≪국가안보상업주의≫를 먹고 자란 대표적인 언론사다. 조선일보의 북한, 노동운동, 학생운동 등에 대한 보도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한 기사보다는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일방적인 주장이나 작문성 기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반공≫을 국시처럼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 독재정권은 국가안보를 내세워 정권을 유지했고 보수언론 역시 국가안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마녀사냥도 서슴지 않았다. 조선일보야말로 그런 언론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특히 조선일보의 안보상업주의는 ≪북한 관련 보도는 오보를 해도 괜찮다≫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마치 이 나라의 사상검증을 책임진 ≪전사≫처럼 수없이 현상을 왜곡, 과장해 왔다. 이러한 태도는 ≪체제도 수호하고 신문도 팔자≫는 발상으로 여겨진다.



1. 이승복 어린이 사건 관련 보도 (68년 12월 11일자)

≪공산당이 싫어요≫는 조선일보 기자의 작문이었다

68년 12월 11일자 조선일보 3면에 실린 ≪≪共産黨(공산당)이 싫어요≫ 어린 抗拒(항거) 입 찢어≫라는 제목의 기사는 ≪안보상업주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사는 ≪장남 승원군에 의하면≫이라고 취재원을 밝힌 뒤 ≪열 살난 2남 승복 어린이가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얼굴을 찡그리자……≫라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보도는 오보임이 밝혀졌다.

이 보도가 나간 뒤 당시 중앙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의 조간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공비의 만행을 맹렬히 비난, ≪이승복 신화≫ 만들기를 거들었다. 그러나 정작 이 신문들의 자체 취재기사에는 승복군의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외마디나 항거에 대한 보도가 없었다. 흥미로운 것은 다른 신문들이 이 보도를 인용했는데도 특종보도한 조선일보가 후속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보도가 오보라는 결정적인 근거는 당시 취재원으로 밝혔던 장남 학관군(당시에는 승권으로 불렸다)이 조선일보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기자협회가 발간한 ≪저널리즘≫ 1992년 가을호에 따르면 ≪당시 조선일보의 기사는 승복군의 형으로서, 사건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인 학관씨로부터 얘기를 듣고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학관씨는 조선일보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 기사에서 장남의 이름을 ≪승원≫**으로** 오기한 것도 이 보도가 기자의 작문이었음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증거다.

물론 조선일보는 반공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작문을 하면 좀 어떠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언론이기를 포기한 발상이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글을 쓰는 것은 소설가의 몫이지 언론인의 몫은 아니다.

2. 금강산댐, 평화의 댐 관련 보도 (86년 10월 31일자)

집단적 광신주의 부추겨 세계적 웃음거리 제공

86년 10월 30일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석간신문을 통해 처음 보도된 ≪금강산댐≫ 관련 보도는 정부의 정보조작과 이에 적극 호응한 언론이 만들어 낸 대형오보로 유명하다. 조선일보는 10월 31일 이 건을 처음 보도했는데 ≪조국통일을 뇌까리는≫, ≪**악마의 목적**≫, ≪**악마적 기도**≫, ≪**북괴**≫, ≪**무기화**≫, ≪**물의 남침**≫ **등 어느 신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저속하고 섬뜩한 용어로** 반북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앞장섰다.

보도 첫날부터 ≪대응댐≫ **건설을 주장한 신문도 조선일보뿐이다.** 10월 31일자 사설 ≪가공할 금강산댐, 이독제독(**以毒制毒**)의 적극적 대응책을≫에서는 ≪예컨대, 휴전선으로 갈라진 북한강의 수로를 동해 쪽으로 역류시키기 위한 터널수로를 팔 수도 있을 것이다≫라거나 ≪댐을 건설하여 충분한 저수능력을 갖추는 것도 적극적인 대처방안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등 ≪대응댐≫ **건설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이 ≪권고≫를 받아들인 듯 11월 26일 정부는 대응댐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조선일보는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이른바 ≪평화의 댐≫ 건설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화한 장본인인 셈이다.

더욱이 평화의 댐은 건설이 중단된 상태라 엄청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해 성금모금에 앞장섰던 각 언론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은 당시 학계에서 주장한 ≪정부의 발표 중 댐 높이나 저수량은 과학성과 현실성을 도외시한 채 발전용량을 근거로 무조건 역산출한 것≫이라는 문제제기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또한 12월 25일 북한이 ≪금강산발전소 건설에 관한 백서≫를 통해 남한측에서 주장하는 수공위협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보도되지 않았다. 결국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이 정부의 조작을 용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3. 김일성사망설 관련 보도 (86년 11월 16일~19일자)

≪세계적 오보≫ 제조비법 – 북한 관련 보도는 오보해도 좋다?

86년 11월 16일 조선일보가 세계적 특종으로 보도한 ≪**김일성**피살설≫**은** 18일 **김일성**주석이 몽고주석 영접을 위해 평양공항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틀 만에 오보로 확인되었다.

이를 최초로 보도한 조선일보는 11월 16일자에서 ≪북한 **김일성**이 암살됐다는 소문이 15일 나돌아 동경 외교가를 한동안 긴장시켰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휴간일인 17일 호외까지 발행했다. 18일에는 총 12면 중 7개 면에 걸쳐 사망배경, 국내외 반응, 자사의 특종에 대한 자화자찬 등을 대서특필했으며 이 날부터 다른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반면 이상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는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의 발표나, 확인된 정보가 없으므로 분명해질 때까지 추측하지 않는다는 미 국무성의 브리핑 등 주목할 만한 내용들은 단신으로 처리, 무시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오보로 판명된 후 단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한국 대외신뢰 실추기도 국민불신 조장 등 노린 듯≫이라며 모든 책임을 북측에 떠넘겼다. 특히 ≪그들 수령의 죽음까지 고의로 유포하면서 그 무엇을 노리는 북괴의 작태에 서방언론들은 정말 놀라고 있다. 정상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알린 셈이 되었다≫는 신용석 외신부장의 ≪적반하장≫격 주장은 조선일보의 후안무치를 대표하는 사례라 하겠다.

4. ≪서울 불바다≫ 발언 관련 보도(94년 3월)

선제기습론 제기하며 전쟁위기 부추긴 자칭 민족지

94년 3월 북, 미 핵협상 당시 한미 양국은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등 일련의 강경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며 북한을 위협했다. 북한은 이를 ≪전쟁선언≫이라고 규정하면서 3월 19일 열린 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강경발언을 했다. 물론 이 날 북측 대표의 발언이 강경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언론은 전후관계를 거두절미한 채 ≪서울 불바다≫라는 표현만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런 보도는 마치 북한이 금방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국민들에게 전달되었다. 남북간에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은 물론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 가능성을 가장 앞장서서 보도한 신문은 조선일보다. 특히 3월 22일자 사설 ≪정부에도 문책한다≫에서는 ≪동맹관계보다 민족이 우선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아마추어적이라고 비난하며 강경대응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3월 24일자 1면 머릿기사에서는 불분명한 취재원(평양을 방문했던 중소기업인의 발언과 신화통신기사)을 근거로 ≪주민들에게 폭탄주머니를 차고 다니게 하고 전쟁지도를 지급하는 등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조선일보의 자매지 ≪월간조선≫은 더욱 강경했다. 94년 3월호에서 조갑제기자는 ≪**북한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위적 선제기습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족지≫를 자처하는 조선일보의 이러한 보도태도는 ≪민족≫의 안위보다 신문의 ≪실리≫를 우선한다는 상업주의의 속성을 잘 보여 준다.

5. 김일성사망, 조문논쟁 관련 보도 (94년 7월 9일 이후)

≪조문 용의 없나≫를 ≪조문 주장≫으로 해석한 의도

94년 7월 8일 북한의 **김일성**주석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망했다. 이에 대해 선정성과 냉전이데올로기를 가장 심하게 드러낸 신문은 역시 조선일보였다. 조선일보의 선정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은 **김정일** 비서에 대한 보도라고 할 수 있다. ≪**결벽증이 심하고 잔인**≫**이라거나** ≪≪**난쟁이**

똥자루≫ 스스로 비하≫(7월 12일) 등 공식적인 매체에 담기 어려운 노골적이고 인신공격적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김일성**독살 가능성≫을 주장하고, ≪**부검 왜 했나**, 의혹 무성≫(7월 11일), ≪**홍콩 관측통 ≪자연사 위장 타살≫ 주장**≫(7월 13일) 등 사망경위에 대한 온갖 추측보도를 남발해 조선일보는 다시 오보 가능성을 안게 되었다.

한편 김주석 사망 이후 조선일보의 첫 번째 마녀사냥은 이른바 ≪조문논쟁≫으로 시작되었다. 7월 11일 국회 외무통일위에서 한 이부영 의원의 ≪조문단 파견용의 없나≫라는 대정부 질문이 발단이 되었다. 조선일보는 이를 ≪조문사절 운운≫, ≪**조문 주장≫ 등으로 표현하며 이 의원의 발언을 왜곡했다**. 조선일보는 심지어 7월 20일자 시론 ≪호지명이 죽었을 때≫에서 ≪친북세력 추방≫을 문민정부에 요구하며 매카시즘 광풍을 일으키는 일에 정부도 동참하라고 촉구하였다.

6. 박홍 주사파 발언 관련 보도(94년 7월 19일 이후)

대한민국 검찰은 안 믿어도 박 홍 총장은 믿겠다?

김주석 사망 이후 조선일보의 두 번째 ≪마녀사냥≫은 박 홍 전 서강대 총장의 주사파 발언 보도로 시작되었다. 94년 7월 18일 청와대 오찬에서 당시 서강대 박 홍 총장은 ≪대학 내에 주사파가 생각보다 깊이 침투해 있으며 주사파 뒤에는 사노맹이, 사노맹 뒤에는 사로청, 사로청 뒤에는 **김정일**이 있다≫고 말했다. 사노맹과 사로청의 차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함을 드러낸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각 신문들은 다음날 이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의 ≪박 총장 키워주기≫는 민망할 정도다. 조선일보는 7월 21일 ≪박 홍 총장의 용기……사회가 보호하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부 지식인들의 박 총장 지지를 대서특필했다. 반면 같은 날 시론 ≪끌려 다니는 지식인, 뒷북만 치는 정부, 주사파의 천국—한국대학≫에서는 박 홍 총장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사상이 의심스럽거나 용기없는 지식인이라도 되는 듯이 매도했다. 뿐만 아니라 ≪박 총장 발언의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주사파≫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특히 박 전 총장의 발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검찰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조선일보는 그의 발언을 간접적으로 지지했다.

박 홍 총장의 주사파 발언은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그의 ≪북한장학금≫ 발언으로 성균관대 정현백 교수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중재신청을 했다. 또한 한국통신 노동조합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사파 발언으로 박 총장은 97년 5월 12일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박 총장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했던 조선일보는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7. 성혜림 망명설 관련 보도 (96년 2월 13일 이후)

한국언론 오보사에 영원히 남을 ≪전설적 오보≫

조선일보가 ≪세계적 특종≫이라고 자랑한 ≪**김정일** 본처 서방탈출≫ 보도는 5개월여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기부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안기부 당국자에 의하면 성혜림이 애초 망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확인된 상태였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월간조선≫의 취재내용을 토대로 96년 2월 13일부터 북한 최고권력자 **김정일**의 본처가 망명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그리고 ≪**김정일** 후처들이 괴롭혀 결행≫(2월 13일 3면), ≪**김정일** 여성편력에 가슴앓이≫(2월 14일 2면) 등 선정적인 제목으로 망명의 근거를 설명했다. 더욱이 조선일보는 ≪엄마 보러 모스크바로 갈게요≫(2월 13일), ≪**오지 마**, 나 지금 무슨 계획 있어≫, ≪**평양에는 안 들어가……나 갈데 있어**≫(2월 14일) 등의 표현으로 마치 망명의사를 밝히는 것처럼 긴박하고 현장감 있게 기사를 써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등 상업적인 접근으로 일관했다. 뿐만 아니라 2월 17일자에서는 ≪무너지는 북한……정치권 공안통들의 분석≫이라며 이를 북한붕괴론으로 이어갔다.

≪성혜림 망명≫ 오보는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이용하여 상업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대표적인 오보 사례로 한국언론사의 오보란에 영원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

8. 황장엽 망명 관련 오보 (97년 4월)

김현철 비리사건을 한방에 잠재운 황장엽 특종?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의 망명과 관련 조선일보는 ≪평화통일 위해 몸바치겠다≫(97년 4월 21일자)는 한 탈북자의 의지를 안보상업주의에 악용했다.



조선일보는 4월 22일자 1면 머릿기사에서 ≪황씨 논문 ≪조선문제≫ 단독입수≫라고 밝힌 뒤 ≪북핵, 화학, 로켓무기로 남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긴 제목을 먹컷으로 뽑았다. 또한 조선일보가 뽑아 놓은≪무력통일 의심하면 머저리 중 상머저리≫, ≪개방유도땐 오히려 우환……붕괴시켜야≫ 등의 제목을 보면 황씨가 진심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망명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실제로 이 논문과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서 해외언론은 의혹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4월 23일 한국발로 황씨가 내밀한 군사정보를 알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는 것과 조선일보가 어떤 경위로 논문을 입수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선 당시 황장엽씨 보도로 인해 김현철씨의 비리보도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황장엽 리스트≫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정부 내 친북세력 색출 시사≫, **≪권 부총리 ≪황씨가 알고 있을 것≫**≫(4월 23일자)이라며 거의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황장엽 리스트는 결국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정치권은 물론 국제엠네스티도 ≪황장엽 리스트 악용 반대≫의 입장을 폈다.(**≪인권하루소식**≫ 97년 7월 25일자) 결국 조선일보는 ≪주사파 리스트≫에서 범한 우를 다시 한번 반복한 셈이다.

9. 이석현의원 명함파동 관련 보도(97년 8월)

이성적 논의 원천봉쇄한 색깔선동의 노림수

이석현 의원 명함파동은 색깔론을 앞세운 언론의 무차별 공세 앞에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증명해 준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석현 의원은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일어, 아랍어, 중국어 등 7개 국어로 명함을 제작했고 현지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어로는 서울(한성), 중국어로는 한국(남조선)을 나란히 써 놓았다고 한다. 실제 중국에서는 남조선이란 단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8월 20일자 사회면에서 ≪남조선 국회의원≫으로 제목을 뽑는 등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같은 날 사설 ≪남조선 국회의원≫에서도 ≪국회는 마땅히 이런 무자격 의원의 제명도 불사하는 단호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다≫라고 마녀사냥을 선동했다. 사안의 본질이나 당사자의 의도, 행적 등에 대한 설명없이 여론을 오도하고 감정적인 단죄를 내린 것이다. 이 의원의 해명에 의하면 조선일보에 첫 보도가 나간 뒤 기사와 사설을 쓴 기자와 논설위원에게 전후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본인들도 잘 알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김대중 후보의 비서 출신이었던 이 의원은 다음날부터 ≪빨갱이 의원≫으로 낙인찍혀야 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이석현 의원의 명함파동은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주도한 정치공작이었다고 한다. 이른바 ≪레드 콤플렉스≫를 이용해 사회의 이성적 논의를 원천봉쇄한 조선일보의 한 인간에 대한 전횡은 희비극과도 같은 한국분단사의 일그러진 편린이다.

10. ≪양심수 사면≫ ≪전향제 폐지≫관련 보도 (97년 12월/98년 7월)

이회창이 하면 인권옹호고 김대중이 하면 용공발언?

15대 대선을 앞둔 97년 10월 31일 광주 TV토론에서 김대중 후보는 ≪우리가 집권하면 조국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이들 중에서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을 사면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조선일보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포문을 열었다. 11월 1일자 1면에 ≪DJ 집권하면 양심수 사면……검찰 안기부 긴급회의≫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한 데 이어 11월 2일 ≪양심수 사면 파문 확산……공안사범 사법판단 부정한 셈≫이라고 보도하면서 이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기 위해 애썼다. 조선일보는 11월 2일 ≪디제이 양심수론≫과 6일의 ≪양심수 재론≫ 등 연속적인 사설을 통해 ≪양심수 논란에 전국민이 참여해서 끝까지 논쟁할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당시 여당후보였던 이회창씨의 ≪양심수 사면≫ 발언에 대해서는 침묵의 관용(?)을 베풀었다. 당시 이회창 후보는 11월 2일 평화방송 대담에서 ≪진정한 의미의 양심수라면 정치인 사면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조선일보가 차별적인(?) 보도를 한 진짜 목적은 딴 데 있었던 셈이다.

최근 정부가 ≪전향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우리 체제를 수호하는데 그 어떤 역작용과 부작용을 끼치지는 않겠느냐≫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양심수 몇 명이 사면된다고 해서 현 체제가 곧 무너지기라도 할 것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의식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다. 도리어 그런 즉자적 접근이야말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론분열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도 있는 것은 아닐까.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는 외부에 대한 적대감을 고양해 내부의 단결을 꾀하려는 부정적 방식으로 결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더욱이 외부에 대한 적대감을 고양하기 위해서라면 내부의

일부가 인권침해를 당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발상은 너무나 위험하다. 그런 내부의 분열과 갈등에서 필연적으로 빚어지는 감정의 폭발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더욱더 위험하다. 우리가 조선일보의 보도와 논조에서 드런난 ≪**국가안보상업주의**≫ **경향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과 원칙을 내부에서부터 합리적으로 그러나 강력하게 실천하는 긍정적 방식을 통할 때 진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조선일보가 민족대단결과 민족재도약의 깃발 아래 21세기를 향해 힘겨운 길을 떠나야 하는 7천만 겨레의 벗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

지금도 계속되는 조선일보의 ≪국가안보상업주의≫

70%의 국민들에게 ≪입 다물라≫ 호통친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지난 7월 1일 ≪만물상≫에서 ≪우리 정부와 사회의 일각에는 최근 남북간에 ≪금강산 관광≫ 합의가 이뤄지며 북한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봄이 온 양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 글의 말미에서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스꽝스럽지나 않겠는데……≫라는 거친 표현을 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좋을 ≪착각≫ 사례 중 하나로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에 대해) 어느 인사는 소련이 사라진 지금, 첨단장비가 부족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간첩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으며 이번 사건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지 요란스럽게 떠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는 대목을 제시했다.

조선일보가 ≪어느 인사≫가 누구인지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한겨레신문 6월 27일자 ≪더불어 생각하며≫에 글을 쓴 손장래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원(전 안기부 2차장)을 가리킨 듯하다. ≪**먼저 주고 나중에 받자**≫**라는 이 글에는 실제로** ≪**특히 남한처럼 미국의 인공위성 등 과학적 정보수집 수단의 긴밀한 협조를 받고 있지 못한 북한의 처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라거나** ≪**문제는 이런 사실을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상대방에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고 각종 침투와 도발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수립하면 된다**≫**는 등의 대목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글 전체를 읽어 보면 손씨가 잠수정 침투사건 자체를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는 동서냉전이 극심하던 60년 미국의 U-2첩보기가 옛 소련 영공에서 격추되어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사과했던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어느 나라든 불가피하게 첩보전을 벌이고 있다는 객관적 현실을 설명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국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잠수정 침투사건을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정주영 회장의 소몰이 방북으로 성사된 금강산 관광이라는 모처럼의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손씨의 글 중에서, 조선일보가 ≪요란스럽게 떠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폍쳤다≫라고 표현한, 그래서 조선일보의 심기를 건드렸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북의 행동과정을 놓고 북의** ≪**이중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다.** 당연하다. 그러나 화해와 통일은 한두 가지의 성과나 사건으로 이뤄지거나 훼손되는 것이 아니고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백 수천만 장의 벽돌을 하나하나 꾸준히 쌓아올리는 것이라고 본다. 어떤 단편적인 사건, 대응, 대응조치 등에 조건반사적으로 행동할 게 아니라…….≫

안기부 2차장이라면 해외정보 업무를 관장하는 직책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런 직책에 있었던 사람의 의견을 ≪착각≫이라고 간단하게 무시했다. 조선일보는 북한의 잠수정 침투행위와 관련한 용어사용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다. 즉 ≪무력도발≫과 ≪시체≫라는 용어가 적절한데도 정부가 ≪침투도발≫과 ≪시신≫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이다. 이어 조선일보는 금강산 관광 수익금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조선일보가 무슨 대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다.

조선일보는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스꽝스럽지나 않겠는데≫라는 독선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어찌 보면 본질적인 것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는 ≪시신≫이니 ≪시체≫니 하는 등의 용어에 대해서는 장광설을 늘어놓으며 비판했던 조선일보가 말이다. 정부에 신중한 용어 사용을 촉구했던 조선일보가 스스로의 용어 선택에서는 이렇듯 거리낌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나 조선일보의 주장은 국민 여론을 무시한 것이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월 4일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적이 있다. 7월 1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햇볕정책이 북한을 개방시키는 데 얼마나 성과를 거둘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70%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금강산 관광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절반이 훨씬 넘는** 59%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던 바로 그 날 조선일보는 대다수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의견에 대해 ≪입을 다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조선일보와 생각이 다른 다수의 국민이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조선일보가 다수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정지환 기자 /월간 ≪말≫

집중분석-조선일보 인권, 노동, 사회 관련 왜곡, 편파보도 사례

조선일보 편집국에 기자윤리는 있는가

≪전태일 분신 사건≫ 유일하게 보도 안 한 조선일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분과-

한국언론에 늘 따라붙는 말이 있다. ≪왜곡보도≫와 ≪편파보도≫라는 오명이 바로 그것이다. 언론의 왜곡, 편파보도는 사실을 왜곡하고 곧 역사를 왜곡한다. 뿐만 아니라 왜곡, 편파보도 속에서 인권유린은 은폐되거나 정당화된다. 겉으로는 정론직필과 불편부당을 내세우고도 실제로는 왜곡, 편파보도를 일삼은 한국언론. 그 대열의 선봉에는 항상 조선일보가 있었다. 민언연 신문모니터팀이 조선일보 보도비평을 마친 뒤 내린 결론이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외부에 대한 적대감을 고양해 내부의 단결을 꾀하려는 부정적 방식으로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외부에 대한 적대감을 고양하기 위해서라면 내부의 일부가 인권침해를 당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발상은 너무나 위험하다. 그런 내부의 분열과 갈등에서 필연적으로 빚어지는 감정의 폭발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더욱더 위험하다≫

우리가 지난호에서 조선일보의 국가안보상업주의를 비판하며 했던 말이다(여기에서 ≪외부≫는 북한을, **≪내부≫는 남한을 가리킨다**). 이번 호에는 조선일보의 ≪남한판 국가안보상업주의≫에 해당되는 사례를 찾아보았다.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와 대치되는 현상이나 인물에 대해서는 주관적 잣대를 들이대고 주저없이 매도하였다. 이런 조선일보의 공세와 횡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항한 목소리는 거의 모든 언론에서 묵살 당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과정과 현상이 조선일보의 오만을 키워 온 배경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사실 우리는 그간의 모니터 경험을 통해 조선일보의 이념적 공세와 횡포가 상습적(?)이라는 점과 그 오만함이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지금부터 기술하려는 내용은 그런 고민 속에서 진행된 작업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1. 전태일 분신 사건 관련 보도(70년 11월)

≪전태일 분신 사건≫
유일하게 보도 안 한 조선일보

70년대의 서막은 한 청년 노동자의 죽음과 함께 올랐다. 70년 11월 13일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전태일(당시 22세)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했다. 그는 화염에 휩싸인 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절규하다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는 끝내 숨을 거두었다. 그것은 한 노동자가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항거해야 할만큼 당시의 노동조



건이 얼마나 열악하고 처참했는가를 만천하에 드러낸 역사적 사건이었다.

사건 다음날인 11월 14일 대부분의 일간지들이 이 사건을 사회면에서 다루었고 16일에는 사설을 내보냈다. (일요일이었던 15일 대부분의 일간지는 휴간했다.) 하지만 그 이후 신문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언론은 이 사건이 지닌 의미와 사회적 파장을 축소, 묵살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한 술 더 떴다. 동아, 조선, 중앙, 한국 등 4대 중앙일간지 중에서 조선일보만이 이 사건을 ≪유일하게≫ 보도하지 않은 것이다. 조선일보는 일요일인 15일 ≪유일하게≫ 신문을 발간하고도 침묵을 지켰다. 다른 신문들이 사설을 내보낸 16일에도 조선일보는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다. 17일에야 ≪한 청년 직공의 참화가 말해 주는 것≫이라는 사설을 실었을 뿐이다. 마지못해 뒤늦게 사설을 내보낸 혐의가 짙다.

조선일보는 이 사설에서 ≪짙은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진심이라면 조선일보는 당연히 사건 보도를 했어야 옳다. 아침 8

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4시간을 일하고도 한달 월급이 1천5백원밖에 되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몫이었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1단 기사 하나 내지 않은 조선일보가 과연 사설에서 ≪우리 사회에 노동운동은 건재하고 있는가≫라며 노동운동을 탓할 자격이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구체적으로 노총의 존재 의의와 사명을 묻고 싶은 것이다≫라는 대목에서는 악덕기업주보다는 노동운동에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느껴졌다.**

2.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보도(86년 7월)

기사는 검찰발표문으로, 사설은 ≪정치적 비화 안된다≫

지난 86년 6월 발생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부도덕성을 드러낸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로 꼽힌다. 이 사건은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의 횡포와 부도덕성이 폭로되어 5공화국의 종말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 언론은 이 사건을 다루며 인권과 진실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인권단체와 시민단체가 언론을 향해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지만 언론들은 검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와 군사정권의 ≪보도지침≫만을 금과옥조로 여겼다.

이 과정에서 촌지도 오고 간 것으로 밝혀졌다. 89년 1월 13일자 ≪기자협회보≫**는 이 사건을 ≪촌지로 얼룩진 언론왜곡의 전형≫으로 규정했다.** ≪기자협회보≫**는 ≪대변인 봉투 건네며 ≪오늘은 좀 많습니다≫≫ ≪취재기자의 고뇌……≪저는 기자도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등의 생생한 증언을 전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보도한 조선일보의 제목과 기사들은 피해자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예컨대 86년 7월 17일자 사회면 머릿기사에서 ≪≪성적모욕≫ 없고 폭언, 폭행만 했다≫라는 검찰의 발표문을 제목으로 뽑아 검찰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했으며 ≪운동권, 공권력 무력화 책동≫이라는 적반하장격의 제목까지 달았다. 또한 ≪≪부천서 사건≫ 공안당국 분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급진세력의 투쟁전략, 전술 일환 혁명 위해 ≪성≫까지 도구화 한 사건≫이라는 검찰 발표 내용을 제목으로 뽑아 권인숙씨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았다. 결국 이 기사는 ≪검찰 발표 전문은 꼭 실어 줄 것≫이라는 독재정권의 보도지침에 충실하게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설에서도 이 사건을 보는 조선일보의 ≪삐딱한≫ 시각이 읽혀진다. 예컨대 조선일보는 7월 18일자 사설 ≪≪부천서 사건≫에서 얻는 것≫에서 **≪성고문≫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채 ≪인권상황의 전환점을 마련하길 바란다≫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비켜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진심≫은 ≪정치적으로 비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이 사설의 결론에서 솔직하게 드러났다.

3. 전교조 결성 관련 보도 (89년 5월)

조선일보의 ≪전교조 빨갱이 만들기≫ 입체작전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미복직 교사들이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전교조가 결성된 지 10년만의 일이니 사필귀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전교조는 비인간적인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을 개선하자는 교사들의 순수한 열망 속에서 탄생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교조의 노선과 성격이 ≪급진≫과 ≪과격≫이 아니라 ≪온건≫과 ≪합리≫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는 상식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던 시대였다.

그런 비상식을 조장한 장본인은 언론이었다. 언론은 마치 교사들의 불평과 불만 때문에 전교조가 만들어진 것처럼 왜곡했다. 동시에 일부 학부모들의 우려와 전교조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의 이견을 부각하는 일에 적극성을 보였다. 그런 와중에서도 많은 신문들은 작은 지면이나마 할애하여 윤영규 전교협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싣는 등 나름대로 형평성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유독 조선일보만은 전교조의 정당한 주장을 전혀 기사화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갔다. 조선일보의 전매특허(?)인 색깔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조선일보는 일부 운동권 교사들이 이념교육을 하기 위해 전교조를 결성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매도했다. 조선일보는 색깔론을 전개할 때면 거침이 없어진다. 예컨대 89년 5월 26일자 ≪학부모들의 우려≫라는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교원노조 문제는 단순히 노동3권을 보장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리고 일부 학교의 어머니회가 제기한 우려를 열거한 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체제를 옹호하는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그렇다고 전교조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했다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 것도 아니다). 결국 조선일보는 ≪골치 아픈≫

이론논쟁보다는 ≪손쉬운≫ 사상논쟁을 택한 셈이다.

이러한 태도는 이날 자 사회면 ≪기사 배치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조선일보 편집자는 ≪전교협 회장, 사무처장 검거령≫**이라는 제목의 기사 중간에 ≪평양학생축전 포스터 단국대에 대량 내붙여≫라는 설명이 붙은 사진을 배치했다.** 뿐만 아니라 사진 바로 오른쪽에는 ≪어젯밤 연대서 교육악법철폐대회≫라는 작은 제목을 달았다. ≪**어수룩한**≫ **독자라면 그 사진이 전교조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조선일보는 부인하겠지만 그런 오해를 살 만한 ≪교묘한≫ 편집이라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5월 28일자 ≪≪교원노조≫, 이해와 걱정≫이라는 제목의 류근일 칼럼은 더욱 교묘했다. 류근일 논설위원은 ≪우리가 직면한 교육현실의 고질적인 현안들에 대한 근본적인 조명과 타개에 의해서만 그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이라고 말문을 열어 마치 전교조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전향적인 제스처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성동격서(?) 전법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다음 대목에서 곧 드러난다. 그는 ≪일부 교사들이 혹시나 그 어떤 치우친 시각에서 자기 자녀들의 역사관과 현실인식을 사뭇 급진으로 몰아가고 물들이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비비꼰 말투로 자신의 ≪본심≫을 내보였다. 사상논쟁으로 귀결시킨 것이다.

전교조 결성 이후 조선일보는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5월 30일자 사설 ≪학교가 싸움판 안돼야—전교조 결성의 파문≫에서 ≪그러나 그것(법의 규제)을 모를 리 없는 교육자들이 희생을 각오하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중시되어야 한다≫며 ≪불법성≫을 강조하였다. 조선일보는 이어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어기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교사들의 방식을 최선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 ≪법≫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4. 유서대필 의혹 조장 관련 보도(91년 5월)

진상규명 필요 없다 마녀사냥이 최고다?

지난 91년 5월 8일 김기설씨의 자살로 야기된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에서는 세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유서대필 여부, 수첩조작 여부, 김기설씨의 여자친구인 홍성은씨의 엇갈린 진술의 진위 여부가 바로 그것이었다. 특히 유서대필 여부는 이 사건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언론은 검찰과 강기훈씨의 주장이 대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필한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갔다. 특히 조선일보는 교묘하게 지면을 구성하여 대필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검찰의 발표는 사회면 머릿기사나 적어도 6단 정도로 ≪크게≫ 기사화한 반면 강기훈씨를 대변한 전민련의 발표는 2~3단으로 ≪작게≫ 취급하였다.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조선일보의 마음은 이미 콩밭(?)에 가 있었던 셈이다. 5월 9일 조선일보는 김기설씨의 분신 보도를 중심으로 아래에는 ≪분신현장 2~3명 있었다≫라는 제목의 검찰발표를 실었고 왼쪽에는 ≪죽음을 선동하는 세력 있다≫는 제목으로 박홍 전 서강대 총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5단에 걸쳐 실었다. 이들 기사의 제목과 지면 구성은 김기설씨의 죽음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분위기를 조장하기에 충분했다.



조선일보는 5월 19일자에서도 검찰발표를 인용해 ≪≪김기설씨 유서 필적 다르다≫ 검찰-대필 용의 20대 전민련 간부 추적≫이라는 제목으로 뽑아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 기사는 김씨가 10년 전 조카의 생일에 보냈던 축하카드 글씨와 유서 글씨를 같이 실어 대필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다. 한편 조선일보는 6월 15일자 사설 ≪천주교측의 정당한 결정≫에서도 ≪대필한 사실이 없다면 떳떳이 나와서 수사에 응할 일이지…수사는 고사하고 일체의 국가행위 자체를 무시하는 듯 버티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강씨를 몰아붙였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당시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은 많은 이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담당자인 김형영씨는 80년, 92년, 98년 세 번에 걸쳐 허위감정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따라서 불충분한 증거로 유서대필을 기정사실화하고 한 청년의 인격과 명예를 무참하게 짓밟았던 조선일보는 이 사건 후유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에게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이 조선일보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지만.

5. 철도, 지하철 파업 관련 보도(94년 6월)

≪가장 부적절한 파업≫은 ≪가장 부적절한 사설≫

파업은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

해 동원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선일보의 인식은 철저히 도식화된 것이었다. 우선 조선일보는 파업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강조하면서 노동자들을 ≪폭력과격집단≫으로 매도하였다. 한편으로는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나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강조하여 노동자들에게 반대하는 여론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반응은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이나 집단행동이 있을 때마다 그대로 반복되었는데 지난 94년 6월 철도, 지하철 연대파업에 대한 보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조선일보는 정부의 공권력 투입과 그에 대한 반발로 예정보다 앞당겨 진행된 파업과 관련하여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이와 달리 파업을 촉발시킨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 도리어 사설을 동원해 공권력 투입의 정당성을 제공하였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법인데 조선일보는 아예 ≪때리는 시누이≫로 나선 셈이다.**

조선일보는 6월 17일자 사설 ≪가장 부적절한 파업≫과 6월 24일자 사설 ≪불법과는 타협 없다≫ 등을 동원해 노동악법 조항을 근거로 노동자단체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일에 급급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계 내부의 헤게모니 투쟁으로 파업이 발생한 것처럼 보도해 본질을 희석시키는가 하면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강조하였다.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며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훈수한 셈이다. 아울러 철도파업과 함께 진행된 일부 사업장의 연대파업에 대해서도 공권력 투입을 정당화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파업자에 단호한 조치를≫**(6월 28일자 사설 제목) 취할 것을 정부에게 요구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파업 발생 당일 ≪교통대란≫ ≪정치투쟁≫ ≪국민이 인질인가≫ 등의 용어를 동원해 파업에 대해 비난하고 매도하는 기사도 대대적으로 내보냈다. 그 이후에도 조선일보는 ≪검찰 본격 수사≫, ≪**수출 지체 하루** 2백억≫ ≪대정부 선전포고≫ ≪전직기관사-시민 ≪한마음 운행≫≫ 등의 제목을 동원해 파업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강조하였다. 사용자의 입장만 옹호하는 한편 정부의 강경대응을 유도한 셈이다.

6. 연세대 사건 관련 보도 (96년 8월)

경찰에게 강경진압 촉구한 조선일보의 정신상태

지난 96년 8월 발생한 연세대 사건에 대해 한국 언론은 객관성을 상실한 채 왜곡, 편파보도로 일관했다. 당시 언론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검찰의 입장만을 사실인 양 보도함으로써 ≪객관보도≫라는 보도의 기본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특히 조선일보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서슴지 않았다. 이 사건을 1면 혹은 머릿기사로 가장 많이 다룬 신문도, ≪**한총련**, 연대 과학관 ≪불모≫ 대치 ≪산소통 터뜨리겠다≫ 협박≫ ≪주사파가 장악…폭력투쟁 선동≫ 등 선정적인 제목을 애용한 신문도 조선일보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금언을 잘못 이해한 것일까. 조선일보는 호전성(?)을 유감없이 노출시켰다. 8월 20일자 1면 기사 ≪필요하면 총기사용≫과 8월 28일자 39면 기사 ≪폭력시위 ≪고무총탄≫ 쏜다≫에서 알 수 있듯 경찰발표를 부각시켜 보도한 것이다. 물론 총기를 사용하겠다는 경찰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인 논평은 전혀 없었다. 조선일보는 학생들에 대한 발포마저 고려되는 극히 위험한 상황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이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강경진압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혹시 조선일보는 8월 23일자 사설 ≪경찰진압의 문제≫도 있지 않냐고 반박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독자들은 그 제목에 현혹되면 안된다. 여기서 조선일보가 비판한 것은 결코 경찰의 강경진압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리어 조선일보는 ≪무엇보다 경찰의 의지와 의욕의 부재가 큰 문제다≫라면서 ≪경찰을 이대로 나 둬서는 안되겠다≫고 호통을 쳤다. 더욱 강경한 진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이 대목에서 우리는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말의 의미를 실감하게 된다. 그것은 동시에 펜을 함부로 휘두르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경고한다). 실제로 격렬한 시위의 원인이 경찰의 무리한 강경진압에 있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지만 조선일보는 이런 여론을 철저히 무시했다.

한편 조선일보에서 두드러진 것은 역시 ≪색깔론≫ 공세였다. 조선일보는 14일자 ≪≪신촌사태≫의 본질≫에서 한총련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한 패거리가 돼 쇠파이프와 육탄공세식으로 밀고 들어오는 집단≫이라고 규정한 뒤 ≪친북세력의 이런 밀어붙이기는 지금 착실히 성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일부 학생들의 친북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우려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한총련 소속 학생 전체를 친북으로 단정하는 조선일보의 마녀사냥식 재판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는 그 동안 학생운동이 통일논의를 대중화하고 진전시키는 데 기여한 점을 전면 부정한 것이기도 하다.

연세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한총련 학생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이 역시 조선일보가

가장 심했다. 조선일보도 8월 20일자 47면에서 인정했듯이 ≪대학생들은 1백여 명이 탈진상태……경찰봉쇄로 음식물 공급이 끊기자……≫와 같이 생명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엄마≫ 작전≫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동원해 혹시라도 생겨날지 모를 학생들에 대한 국민들의 동정심을 차단하려 했다. ≪**다분히 정서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웬 갑작스런 엄마타령인지……**눈물짜기 작전≫이라는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학생들의 처지를 비아냥거리는 언론의 횡포에 비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7. 북한 식량지원 관련 보도(97년 3월~5월)

굶어 죽는 소말리아는 도와도 북한동포는 안된다?

지난 97년 봄과 여름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다. 당시 북한은 수해와 가뭄 등 계속된 자연재해로 사상 초유의 식량난을 겪고 있던 터였다. 뼈만 남은 앙상한 팔다리의 북한 어린이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풀뿌리와 나무껍질을 먹는다는 북한의 참상이 알려지면서 북한동포돕기운동의 물결이 이어졌다. 김수환 추기경의 말처럼 굶어 죽는 사람을 두고 보는 것은 ≪동포애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조선일보가 나섰다. ≪**동포애**≫**를** ≪**전도된** 대북지원 논리≫로, ≪**인간의 도리**≫**를** ≪**감상적**≫**이라고** 폄하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97년 3월 31일 정부의 쌀지원 허용 발표 이후 사설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분배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지원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의 절박성을 고려할 때 조선일보가 형식적 논리를 내세운 ≪심사≫가 무엇인지 읽혀진 셈이다. 이는 다음의 대목에서 보다 분명해진다. 조선일보는 민간차원의 북한동포돕기운동에 대해 ≪감상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애꿎은 죄의식만 짜내려는 전도된 대북 지원논리≫라고 몰아붙였다.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비난한 것이다.

물론 솔직하게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북한의 태도에도 문제는 있다. 그러나 북한 어린이들이 영양결핍으로 키가 자라지 않고 두뇌발달이 정지됐다거나, 심지어 굶어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전해지는 데도 굳이 ≪실상이 과장되어 있고 과장법을 통해 군량미를 챙기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도리는 아닌 듯하다. 이는 목숨을 담보로 흥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7년 5월 말 지정기탁제도의 합의로 투명성이 확보되고 북한군 식량탈취가 오보로 확인된 이후에도 조선일보에서 ≪지원하자≫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동포의 굶주림을 방치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쌀을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북의 태도가 변한 다음에≫라는 토를 달았다. 심지어 ≪북의 추락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싣기도 했다. 정부도 부정한 대북정책인 ≪**흡수통일**≫**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조선일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북한동포돕기운동에 대해 ≪휘몰이하는 식≫이라거나 ≪감상적≫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비판했다.

당시 1년에 8조원을 음식쓰레기로 버리는 남한과 먹을 것이 없어 참혹하게 죽어 가는 북한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과연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감상적인지 자명해진다. 조선일보는 급기야 4월 14일자 사설 ≪북 기아 우리 탓이라고?≫**에서** ≪**따지고 보면 우리도** 식량자급율이 27%밖에 안되고 외채가 1천억달러에 이른 빚더미에 앉아 있다≫며 구차한 변명까지 늘어놓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 고베 지진 때나 아프리카 난민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자고 했던 때와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적이다.

조선일보의 ≪남한판 국가안보상업주의≫는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6월 29일자 칼럼 ≪≪금강산행≫의 조건≫에서 조선일보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기대로 남쪽이 달궈지는 것≫을 못마땅해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시대적 흐름이 바뀔 수는 없다. 최근 잠수정사건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소가 북한으로 가고 금강산 관광도 목전으로 다가왔다. 통일독일의 한 국회위원은 조선일보의 지면을 빌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통일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그러나 통일 뒤에 얻는 기쁨은 희생과 고통보다 크다≫라고. 조선일보가 경청해야 할 고언이 아닐 수 없다. .

정지환 기자 /월간 ≪말≫







수구언론 청산돼야

김기철 / 구국전선 주체90년 5월 21일

역사적인 남북정상들의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 이후 우리의 통일운동은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맞고 있다.

6.15공동선언발표와 그의 이행을 위한 남북간의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여러갈래의 회담들이 성과리에 진행되어 왔고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어 외세에 의해 강요됐던 분단의 역사를 끝장내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려는 각계 애국민중에게 벅찬 감동과 커다란 고무를 주고 있다.

그러나 세상돌아가는 것에 대해 뭔가 잔뜩 못마땅해 하는 심사를 가지고 있는 ≪월간조선≫은 언론의 본연의 사명, 자세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게 반민족적, 반민중적 수구언론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의 죄악상을 보면 그 과거사는 그만두고서라도 6.15남북공동선언을 놓고 세계가 경하하고 온 민족이 흥분과 기쁨으로 들먹이고 있을 때에 통일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반민족적인 글을 얼마나 많이 게재하였는가.

하기에 이 매문지들이 각계 민중의 강한 규탄과 항의를 받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작년 8월 7일 학계, 문인, 종교계, 시민운동권 등 사회 각분야의 150여명 인사들이 ≪조선일보≫에 대한 기고, 인터뷰를 거부하는 의식을 가진 후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조선일보≫는 스스로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보수임을 자처하지만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불순세력으로 매도하는 등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수구언론≫이라며 앞으로 ≪조선일보≫취재, 인터뷰, 기고거부, ≪조선일보≫집중기획감시, ≪조선일보≫항의전화, 항의방문, ≪조선일보≫허위왜곡보도전시회, ≪조선일보≫의 수구언론인 퇴치운동, ≪조선일보≫시민강좌 등의 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6일에는 전국 1백 26개 대학신문사의 대학생기자 1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이 ≪조선일보≫에 대한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전대기련은 이날 ≪조선일보≫반대와 언론개혁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현시기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것은 삐뚤어진 반쪽짜리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며 민족자주와 민족화해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시대의 역사적 소망≫이라며 앞으로 ≪조선일보≫평생구독거부운동을 통해 ≪조선일보≫의 죄악을 공개하는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대기련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양심있는 대학언론인으로서 ≪조선일보≫반대와 언론개혁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조선일보≫뿐아니라 보수적 여론을 조장하는 다른 신문들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사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언론개혁운동의 흐름을 대학사회에 확산시키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대기련은 계속하여 ≪조선일보≫는 여론에 미치는 막강한 힘을 이용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오도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번영과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며 대학신문기자들이 젊은 세대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투쟁을 구체적으로 벌여나간다면 대학사회 뿐아니라 전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전대기련은 앞으로 ≪조선일보≫평생거부서명운동, ≪조선일보≫허위, 왜곡보도사례전시전, 각 대학신문에 ≪조선일보≫반대고정란 신설 등의 사업을 통해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형성해간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들이 사회각계의 비난과 규탄, 조소와 냉대를 받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것은 반자주, 반민주, 반통일적 매문지로서 피할 수 없는 귀결이다.

세계도 변하고 한반도정세도 변하고 있다.

남북간에는 화해와 협력, 통일의 기운이 높아가고 있고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실현하려는 것은 시대적 흐름으로 되고 있다.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이 거세찬 시대적 급류를 거슬러 그릇된 여론몰이를 계속한다면 자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노동자 모욕하는 조선일보 박살내자

구국의 소리 방송 / 주체 90년 7월 2일



지금 우리 노동대중은 생존권 쟁취를 위한 노동계의 6월 총력 투쟁을 거짓과 편파보도로 매도한 조선일보구독중지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2일 조선일보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쟁취 투쟁을 집단이기주의, 졸속, 폭력 등의 단어를 써가며 그야말로 악에 차서 왜곡비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투쟁을 객관적으로 성실하게 전하지 않고 모든 책임과 잘못이 노동자에 있는 듯이 거짓과 기만, 편파보도로 매도했습니다.

이는 1,300만 노동자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욕이고 또 반민족, 반통일 매문집단으로서 각계민중의 규탄을 받아온 조선일보의 반노동자적 정체를 다시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대중은 각계민중의 조선일보 반대투쟁에 자기들의 힘과 목소리를 더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 25일 조선일보구독중지운동을 선언하고 총연맹과 산별연맹지역본부에 조선일보구독중지를 권고한데 이어 26일에는 조선일보사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구독중지통보서를 조선일보사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8일부터는 민주노총 소속 1,500여 단위노조에 60만여명의 조합원과 가족, 이웃, 친인척을 상대로 조선일보구독중지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구독중지뿐 아니라 소속 모든 조직에 조선일보기자의 노조사무실 출입과 취재를 거부하고 조선일보에 글을 싣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집회와 시위는 물론 사이버공간에서도 조선일보 거부운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노총은 조선일보반대투쟁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고조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정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노동자들의 처지는 매우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미국과 악덕재벌이 몰아넣은 아이엠에프신탁통치의 3년간, 수백만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되었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가정이 파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경제화에 따른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인해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 8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미치는 기아임금을 받으며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앞날의 희망을 잃고 *****. 자기들의 처지를 호소도 하고, 탄원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란 없고 이 땅은 노동자의 더 큰 희생과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노동자들이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노동자의 생존권은 노동자자신의 힘으로, 투쟁으로써만 쟁취할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에 1,300만 노동자가 나선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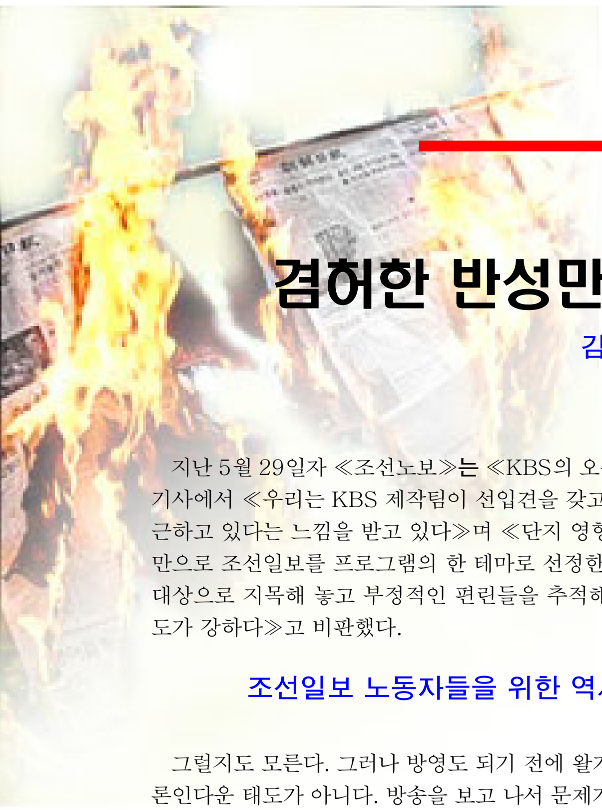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의 이같이 정당한 투쟁을 두고 입에 담지 못할 소리로 악의에 차 왜곡비방중상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매문가들을 어찌 용서할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 노동자의 **과 권리, 정당한 투쟁이 거세되고 왜곡되는 걸 허용할수 없습니다.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노동자적 행위만을 일삼는 조선일보를 더 이상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노동운동가들은 이미 결의한데로 조선일보 반대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우선 조선일보가 우리 민족과 노동대중에게 저지른 죄악의 행적을 낱낱이 들춰내서 고발, 단죄하기 위한 대민홍보활동을 적극 벌여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구독중지운동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다양하게 벌여나가며 농민, 청년학생, 언론인 등 각계민중과 굳게 연대해서 범국민적인 조선일보반대투쟁을 과감히 벌여나가야 합니다.

노동자의 무쇠주먹으로 반노동자적인 매문집단 조선일보를 단호히 박살내야 할겁니다.





겸허한 반성만이 조선일보 명예를 지키는 일

김동민 / 한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난 5월 29일자 ≪조선노보≫는 ≪KBS의 오류를 경계한다≫는 기사에서 ≪우리는 KBS 제작팀이 선입견을 갖고 문제에 거꾸로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단지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조선일보를 프로그램의 한 테마로 선정한 것이나 미리 청산 대상으로 지목해 놓고 부정적인 편린들을 추적해 들어가겠다는 의도가 강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노동자들을 위한 역사공부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방영도 되기 전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언론인다운 태도가 아니다. 방송을 보고 나서 문제가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순리다. 조선일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 왔고 따라서 그러한 측면을 지적하겠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이 선입견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따질 일이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프로그램의 한 테마로 선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고도 남으며 조선일보가 끼친 부정적인 행태는 사소한 편린이 아니라 중차대한 문제다.

≪조선노보≫**는 또한 ≪조선일보의 과거와 현재를 이런 부정적이고 고정적인 시각으로 재단하려는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음해성 비판에 대해 사원들의 명예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 거의 협박이요 공갈이다. 언론민주화를 기치로 들고 출범했던 노동조합이 어찌 이리도 수준 이하의 얘기를 하는가? 조선일보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그렇게도 자랑스럽고 떳떳한가? 한 발 객관적으로 물러나서 역사공부를 한 번쯤 해보는 건 어떨까. 그리하고도 떳떳하다면 KBS가 무어라 하건 상관하지 말고 국내 최대의 발행부수를 활용하여 조선일보를 홍보하는 것이 양식있는 태도라고 믿는다.



역사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선일보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한꺼풀만 벗겨보도록 하겠다.

조선일보는 1920년 3월 5일 친일 상공인단체인 대정실업친목회의 주도로 창간되었다. 당시 총독부는 친일인사이거나 총독부에 우호적인 인사들에게 조선인 신문을 허가하였다. 대정실업친목회는 총독부의 협조 없이는 사업이 곤란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였다. 신문의 논조와 방향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친일신문으로 대중에게 인식된 조선일보는 독자가 늘지 않아 경영이 어려웠고 따라서 경영진이 자주 바뀌었다. 그러던 중 1932년 광산으로 벼락부자가 된 방응모씨가 인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선일보는 1929년 말부터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는 표어를 내세우고서 문맹퇴치와 농촌계몽, 체육대회, 음악회 등 문화운동을 펼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민족의 해방과 독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접어두고 기업의 생존과 영향력의 확대에만 열을 올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맹퇴치를 위한 한글보급운동의 내면적 목적은 잠재적인 독자의 수를 늘리는 데 있었다. 이같은 문화운동에 대해 단재 신채호 선생은 다음과 같이 통렬히 논박하였다.

≪강도의 비위에 거슬리지 아니할 만한 언론이나 주창하여 이것을 문화발전의 과정으로 본다면 그 문화발전이 도리어 조선의 불행인가 하노라.≫

광주시민은 불순폭도, 전두환은 애국자라고?

1932년 1월에 터진 이봉창 의사의 일왕에 대한 폭탄투척사건에 대해 조선일보는 1월 10일자 신문에 이렇게 보도하였다.

> 천황폐하께옵서 륙군관병식행으로부터 환행하시는 어료차에 노부가 앵전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어경위 사고가 발생하였다……전방 약 18간에 수류탄과 같은 물건을 던진 자가 있어서 궁내대신 마차의 좌후부 차륜 부근에 떨어지어 차체 바닥에 엄지손가락 만한 손상 두셋을 나게 하였으나 어료거 기타에 이상이 없이 오전 11시 50분에 무사히 궁성에 환행하시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지 않은가. 이봉창이라는 흉악무도한 자가 폭탄을 투척하였으나 폐하께서는 천만다행히도 무사하시었다니 조선일보는 조선의 신문이 맞는가? 지나사변 이후 일제가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조선인을 대상으로 지원병을 모집하기로 하자 조선일보는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나섰다. 조선인 청년들로 하여금 일군에 지원하도록 독려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설을 수 차례에 걸쳐 게재하였다.

> 요컨대 금번 지원병제도의 실시는 위정 당국에서 위로 일시동인의 성려를 봉체하고 아래로 반도민중의 애국열성을 보아서 내선일체의 대정신으로 종래 조선민중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던 병역의무의 제일단계를 실현케 하는 것이다. 황국신민된 사람으로 그 누가 감격치 아니하며 그 누가 감사치 아니하랴.(1938년 6월 15일자)

차마 낯뜨거워 제정신으로는 읽을 수도 없는 내용이다. 일신의 안위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동포를 사지로 몰아넣는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건 감추거나 지워 버릴 수 없는 엄연한 조선일보의 과거요 우리의 역사다. 조선일보는 저널리즘 정신에 입각하여 민족을 위해 봉사하면서 시대적 사명을 감수한 적이 거의 없다. 큰소리 칠 일이 아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굳이 들추는 것은, 반성은 없고 오히려 막강한 매체력을 이용하여 현실을 호도하고 왜곡하기 때문이다.

역사를 건너뛰어 1980년대로 와서 보자. 조선일보는 쿠데타에 의해 권력을 쥔 전두환씨를 마치 구국의 영웅이라도 되는 듯 화려하게 부각시키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찬양해마지 않았다. 피로 얼룩진 정





권에 없는 정통성을 조작해 바쳤다. 광주민중항쟁 때에는 광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하였다. 그 후 대통령선거 때에는 노태우,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여당의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보도를 하여 킹 메이커 노릇을 톡톡히 했으며 정권과의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임 대통령들을 하이에나처럼 사정없이 물어뜯었다.

1988년 국회 언론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문공부의 ≪언론인 개별 접촉 보고서≫가 폭로되었다. 정부가 언론의 보도를 통제하기 위해 언론인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던 기록들이다. 이것을 보면 다른 언론사 간부와 기자들은 문공부 관리의 주문을 경청하고 약간의 의사표시를 한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시위 기사 쓰며 문공부에 문의하고 싶은 심정?

그러나 조선일보 기자들은 한 발 앞서 매우 적극적으로 시국에 대한 훈수를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몇 대목만 짚어 보자.

통민당 ≪**통일정강**≫ **문제에 대해 인보길 부국장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함**. ≪**이 사건은 단적으로 김일성**의 적화통일전략의 마수가 김영삼과 제1야당 내부에까지 뻗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나는 이미 4~5일 전 편집회의에서도 통민당이 정강정책에 표방하고 있는 통일론이 **김일성**의 ≪남반부 적화통일≫을 위한 대남 전략전술의 덫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1987년 5월15일 인보길 편집부국장과의 오찬)

국민운동본부가 계획하고 있는 6, 10대회와 관련 6월 10일자 조간이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으로 계도적인 편집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 조연흥 부장은 조선일보는 반공과 반폭력 혁명을 사시로 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4대지 중에서 조선이 가장 안정과 대화를 추구하는 논조를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함.(1987년 6월 9일 조연흥 사회부장, 고학용 차장 등과의 오찬)

강상대 기자는 6월 11일 야근중 명동시위에 초강경 대처한다는 검, 경 긴급회의 관련기사를 취급함에 있어서 사회부에서 넘어온 기사만 읽어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두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제목을 만드는 데 애를 먹었다고 말하면서 정책실(당시 문공부의 홍보정책실을 말함-필자 주)에 문의해 보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농섞인 진심을 토로하였음.(1987년 6월 13일 김진석 편집부장 등과의 만찬)



홍형강 차장은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총재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하며 김영삼이 당선되는 경우 장면정권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군사쿠데타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1987년 11월 5일 김진석 편집부장, 홍형강 차장과의 오찬)

정권에 대한 아부와 야당에 대한 매도, 그리고 극우적 성향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터무니 없는 작문을 한 인보길 당시 부국장에 대해 접촉결과 보고서를 쓴 문공부 관리 박성수는 ≪온건하고 논리적으로 무장된 언론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가 막힐 따름이다. 조선일보는 이런 식으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면서 노태우와 김영삼을 차례로 대통령으로 만들고 또 차례로 물어뜯기를 반복했다. 조선일보는 김영삼씨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과 술수를 부리더니 나중에는 한 마디 반성도 없이 모든 책임을 그에게 뒤집어 씌웠다. 작년 대선에서는 김대중씨를 떨어뜨리고 이회창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지금은 반성과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때

이런 추악한 과거를 알고 접근하는데도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단순히 편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자기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조선일보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번에는 반개혁 보수반동의 기치를 높이 들고 김대중정부를 실패한 정권으로 만들기 위해 곡필을 일삼고 있다. ≪≪**정치**≫**가 주무르는** 빅딜≫**이라는 지난** 6월 12일자 사설을 한번 보자.

이런 판에 정당 총재가 나서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는 꼴이니 경제가 산으로 올라갈지 바다로 흘러갈지 극도의 혼미와 불확실성이 빚어지는 실정이다……정치권이 구조조정의 참된 목적을 인식하지 못한 채 빅딜만이 살 길이라고 정치선전에 열을 올리는 것은 자칫 경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 빅딜은 재계의 이해가 맞아떨어질 때 이루어지는 법이다.

경제는 경제논리에 의해 움직여야지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된단다. 지금 구조조정이 경제논리에 의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직한 표현이 아니다. 되지 않을 일을 된다고 우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계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날이 언제나 오겠는가? 나라가 정말 거덜나고 난 후에? 조선일보와 재계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 불행이라면 불행이다. 경제위기를 가져오게 한 책임의 일단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조선일보가 경제위기를 다시 오게 할 수 있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김대중의 사상을 의심해 온 조선일보는 아직까지도 전의를 거두지 않고 있다. 같은 날짜 2면에는 ≪대북제재 해제≫ DJ 진의 뭐였나≫라는 제목에 ≪미 언론 ≪전면해제 요청을 클린턴이 거부≫≫라는 소제목을 뽑은 기사가 실렸다. 내용에 비해 제목이 고약하기 짝이 없다. 독자들로 하여금 DJ의 사상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말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게 아닐까?

조선일보는 과거고 현재고 부끄러운 기록이 훨씬 더 많다. 지금은 반성과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때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비판에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런 부끄러운 과거와 편협함을 가지고 누구를 비판한다는 것인가. 무엇이 진정으로 명예를 지키는 일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조선일보를 미국법정에서 심판하겠다

문명자 / Julie Moon, 유에스 아시안 뉴스 주필

필자는 지난 94년 11월 조선일보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 고소했다. 그리고 장장 4년여의 법정투쟁 끝에 지난 6월 23일 한국의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어이없는 일이다.

사건은 ≪월간조선≫ 94년 9월호가 필자에 대해 조작, 날조된 기사를 실으면서 시작됐다. 이 잡지는 94년 7월 **김일성**장례식에 참석했던 한 재일교포에게서 취재했다면서 ≪**김일성**장례식은 희대의 비극적 코미디였다≫(필자 김연광 기자)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 중 ≪문명자의 충성 서약≫이라는 중간제목 하의 단락에 따르면 94년 7월 20일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해외교포 위로연에 참석한 필자가 갑자기 나서서 마이크를 잡더니 ≪도쿄에서 김주석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울었다. 카터 전 대통령에게 서거 소식을 알려 주자 그도 울었다. 이제 우리 7천만 인민은 기러기떼처럼 **김정일**동지를 뒤따라가는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목란관 연회에서 어떠한 발언도 한 일이 없다. 발언은커녕 당시 몸이 아파 연회 중간에 나와 숙소로 돌아와서 쉬었다. 그러나 김연광 기자는 나에게 사실확인도 전혀 하지 않고 위와 같은 터무니없는 내용을 기사화했다.

사실적 북한보도 막으려는 조선일보의 언론테러

게다가 문제의 위 기사에 실명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김일성**, **김정일**, 오진우 등 북한측 고위 인사를 제외하면 오직 나 하나뿐이다. 필자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도 모자라 고딕활자로 중간제목을 ≪문명자의 충성서약≫이라 박아 놓았다.

이는 분명 필자에 대한 고의적인 음해였다. 필자를 북한에 충성서약이나 하고 다니는 신뢰성 없는 언론인으로 몰아붙이려는 의도였다. 왜 그 시점에서 ≪조선일보≫는 필자를 겨냥했을까. 필자는 94년 4월 **김일성**주석과 단독인터뷰를 가지고 그 기사를 월간 ≪말≫에 독점 게재했다. 그 이전까지 한국언론에게 북한보도는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염려가 없는 선정적 보도의 황금어장이었다. 그리고 대 북한 추측 왜곡 편파 날조 보도의 선두주자는 단연 ≪조선일보≫였다. 94년 사망하기 전까지 **김일성**주석은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났으며 북한의 핵무기는 몇 번이나 개발됐다가 다시 플루토늄 상태로 돌아갔다. 그러나 북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필자의 방북취재활동이 시작됨으로써 그 황금어장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북한보도 경쟁력 상실을 우려한 ≪조선일보≫는 필자를 ≪이북 앞잡이≫로 몰아 필자의 북한보도의 신뢰성과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언론인의 지상임무라 믿는 필자에게 ≪조선일보≫의 이 같은 행위는 하나의 도전이었다. 필자는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허위날조 행위를 일삼은 ≪조선일보≫를 한국의 사법부에 제소했던 것이다.

96년 8월 22일 2년여의 지루한 재판과정을 거쳐 서울지방법원은 문제의 ≪월간조선≫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하고 조선일보사는 필자에게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공개사과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조선일보측이 문제된 기사의 취재원도 밝히지 못했고, 그 기사가 사실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패소하자 조선일보사는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사건 후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김진경이라는 재미교포의 증언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그는 북한의 나진 선봉 지구 내에 건설된 나진 호텔에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자다. 이는 미국법 위반이다. 여하튼 그는 법정에 제출한 서면증언서에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문명자씨가 목란관 연회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고등법원 판사들은 우선 김진경씨와 **≪조선일보≫의 관계에 주목했어야 했다**. 문제의 기사를 쓴 김연광 기자는 김진경씨를 인터뷰해 이미 ≪월간조선≫에 장문의 기사를 쓴 바 있다. 그리고 김진경씨는 북한동포돕기를 한다며 북한을 드나들면서 취득한 정보를 ≪조선일보≫와 ≪월간조선≫ 등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긴 김씨가 서울 조계사에서 신도들을 모아 놓고 ≪흡수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동포에게 쌀을 갖다줘야 한다≫고 강연하더라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다. 흡수통일이라는 신념에서는 양자가 일치하는 셈이다.

하여간 ≪조선일보≫ 특히 ≪월간조선≫ 김연광 기자와 이처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김진경씨가 무엇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난 후에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하는 토를 달아 조선일보사측 증인이 되었는지에 대해 고등법원 판사들은 대체 어떤 판단을 내린 것일까. 필자는 이에 맞서 목란관 연회에 참석했던 두 사람의 재미교포로부터 ≪문명자씨는 목란관 연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증언한 서면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고등법원은 그 같은 허위망언을 한 김진경씨와 필자를 법정에서 대질시키는 절차도 없이 ≪월간조선≫이 필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월간조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도 기자**, 편집진 그리고 발행인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했다면 이 기사의 작성, 기재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자가 자신의 취재원이 ≪신뢰성≫이 있다고 믿는 한 취재원이 한 진술의 진실 여부를 필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그것을 보도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등법원의 판결이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 판결은 언론계 종사자들로 하여금 ≪취재원



이 신뢰성이 있다고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작성하는 한≫ 어떤 기사를 써도 명예훼손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엇이든지 조작해도 좋다는 면허증을 준 셈이다. 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행위는 기사작성 당사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취재원의 신뢰성 역시 주관적 해석에 따르는 것이므로 어떤 기자가 ≪나는 나의 취재원이 신뢰성이 있다고 믿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기사를 썼다≫고 주장하는 한 그가 쓴 기사가 허위라 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에 허위날조권 준 대법원

필자는 이 같은 부당한 판결에 승복할 수 없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돈희, 최종영, 이임수, 서 성 등 제 대법관은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참으로 놀라운 판결을 내려 필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판과정을 끝나게 했다.

필자는 ≪월간조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까지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월간조선≫의 허위날조 보도를 사실이라고 규정하고 따라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법원은 문제의 보도가 허위날조임을 밝혔고 고등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라는 말로써 역시 ≪월간조선≫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은 오히려 허위날조를 사실로 규정해 버린 것이다.



필자의 고소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판결의 부당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한국의 한 월간지가 사회지도층의 타락부패상을 고발한다는 특집기사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었다.

≪**조선일보사는 얼마 전 각계각층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초청해 연회를 베풀었다**. 여기에는 서성, 이돈희, 최종영 및 이임수 네 명의 대법관도 참석했다. 연회의 1부 순서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주최측은 미리 마련했던 스트립쇼를 제공했다. 전라의 젊은 무희들은 무대 위에서 관능적으로 춤추며 흥을 돋우다 차례차례 홀로 내려와 연회 손님들을 하나씩 찾아가 몸을 흔들어댔다. 그러자 여러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희들을 끌어안고 같이 춤을 추었는데 흥분에 못 이긴 네 명의 대법관들도 따라 일어나 무희들을 하나씩 끌어안고 몸을 놀리기 시작했다. 한바탕 놀고 난 후 이들은 마이크 앞에 가서 ≪인생이 이렇게 흥겨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익명의 한 소식통은 위와 같은 얘기를 전해 준 후 ≪그 날밤 그 주지육림의 광경은 참으로 국가의 앞날을 암담케 하는 호화판 비극이었다≫라고 비통한 평을 했다.≫

이 기사가 나가자 네 대법관들의 즉각 파면과 전면적인 사법부 사정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이 들끓었다. 법무장관은 그 대법관들에게 사표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초청에 따라 그 연회에 참석하긴 했지만 좌석에서 일어나 본 적도 없는 네 명의 대법관들에게 이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독재정권 치하 때처럼 그 월간지를 마음대로 폐간시킬 수도, 그 발행자와 관계자들을 구속할 수도 없어 공동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연회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의 증언서를 제출해 그 기사의 허위조작성을 밝혔다.

그러자 지방법원에서는 그 기사가 허위조작이므로 대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그래서 월간지측에게 사과문을 싣고 대법관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월간지의 항소를 받은 고등법원은 ≪그 특집기사의 작성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사건 기사가 네 대법관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도 위 기사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보여지고, 설사 기사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기사의 작성 경위,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취재원에 대한 신뢰 정도, 사건이 행해진 장소, 평소 네 대법관들의 행태 등을 종합하면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로서는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기자가 네 대법관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썼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아니다≫(이상은 필자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인용한 것임)라면서 지방법원 판결을 뒤집어 버렸다.

법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하는데 거꾸로 공공의 이익이란 명분으로 사실이 부정되고 인권이 유린돼야 한다는 이 그릇된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네 대법관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자 대법원은 ≪사실이 아니라 할 지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네 대법관들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므로 월간지 보도가 명예훼손이라 할 수 없다≫라는 참으로 놀라운 판결을 내려 버렸다.

이런 경우 네 대법관들은 과연 어떻게 짓밟힌 자신의 명예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것인가. 나는 그 방법을 그들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다.

하급법원의 오류를 시정해야할 대법원이 오히려 이렇게 사리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는 데는 조선일보측으로부터의 어떤 회유나 협박, 뒷거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금할 수 없다.

필자의 이 같은 의심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면 한 예로 ≪조선일보≫가 특종기사라고 떠들어댔던 ≪성혜림 망명기사≫를 살펴보자. 이 사건은 ≪조선일보≫가 한국사회에서 초법적 기관으로 얼마나 횡포를 부리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망명한다던 성혜림이 망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기사의 필자인 ≪월간조선≫ 우종창 기자는 후에 ≪성혜림이 중간에 망명의사를 바꿨다≫고 말했다. 그 말대로라면 ≪**조선일보≫의** 성혜림 망명기사로 인해 성혜림과 그의 언니 성혜랑 자매의 한국 망명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성혜랑의 아들 이한영도 살해됐다고 할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가 국가안보에 위기를 초래하고 살인사건을 이끄는 데까지 미칠 수는 없다. 이 기사를 통해 ≪조선일보≫는 그들이 민주화세력에 대해 걸핏하면 뒤집어씌우는 ≪이적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이 같은 엄청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안기관은 왜 이 기사의 취재기자, 기밀누설자, 편집인, 발행인에 대한 기소는커녕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일까.

민주주의 사회가 전체주의정권, 과두정권, 독재정권과 다른 것은 무엇보다도 법이 공평하게 시행됨을 국민이 믿고, 국민이 법을 준수하는 데 있다. 이 같은 판결을 놓고 볼 때 한국사회에서 법질서의 공정성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북한이 안 망한다고 하면 친북 성향?

고등법원 판사들은 판결문에서 필자가 북한 현실에 대한 사실보도를 하는 것이



공공이익을 위하지 않는 것인 양 시사했다. 필자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취재원의 말을 ≪월간조선≫이 믿은 이유 중의 하나가 ≪평소 필자가 가진 편향적인 시각과 행태≫ **때문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필자를 음해한 문제의 기사가 실린 ≪월간조선≫ 94년 9월호에도 어김없이 ≪체제의 총붕괴가 임박했다≫는 이른바 ≪북한붕괴론≫ 기사가 실려 있다. **≪조선일보≫의 이런** 류의 주장은 이전에는 물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필자는 당시에도 월간 ≪말≫을 통해 ≪북한붕괴론은 맞지 않다. 북한체제는 안정돼 있다≫라고 누차에 걸쳐 강조했다. 그 후 4년이 흘렀다. 중병환자에다 군부를 장악하지 못해 권력승계도 못 하고 군부의 쿠데타나 민중봉기로 축출된다고 ≪조선일보≫가 지긋지긋하게 되풀이 방송하던 **김정일**비서는 97년 총비서 취임에 이어 이제 주석 취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도대체 누가 사실을 보도했는가. 그저 북한이 망한다고만 하면 객관적 보도이고 북한이 안 망한다고 하면 편향적인 시각이고 친북인사인가? 망하지도 않는 북한을 망한다고 하는 것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남측의 긴장을 풀게 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아닌가?

고등법원 판사들은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힘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는 것과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선정적인 보도로 독자 수를 늘리는 것 중 어느 것이 ≪공공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는 것인지 궁금하다.

2차대전 당시 일본이 패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군벌들이 정세를 사실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정보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고문을 통해서!

민사재판은 이단과 정통을 가리는 중세기의 종교재판이 아니다. 사실과 거짓을 가려내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려서 사회정의를 세우는 제도다.

안기부 문서 베끼는 것도 언론인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월간조선≫ 8월호는 **≪친북 성향 문명자의 제보에 안기부가 뛰었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해 필자에 대한** ≪친북≫ **음해를 다시 시작했다**.

히틀러의 선전상 괴벨스는 **≪거짓을 되풀이하면 사실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선일보사 일부 인사들과 ≪월간조선≫ 조갑제씨는 이 같은** 괴벨스의 선전철학을 신봉,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

위 기사에서 ≪월간조선≫은 필자를 ≪친북 성향≫은 물론이고 미국에 망명하기 전에는 중앙정보부의 끄나풀로, 현재는 ≪미 CIA의 첩자≫로 만들었다. 필자가 미국 망명 전에 김대중씨의 주미 동향을 한국 중앙정보부에 제보했다는 것이다.

좋다. 그렇다면 안기부에 한번 물어 보자. 지난 71년 한국대통령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김대중 후보 부부가 선거운동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필자는 그들을 포드 부통령, 험프리 상원의원 등 워싱턴 정가의 유력인사들과 만나게 했다. 아울러 닉슨 대통령 부인 패트리셔 닉슨과 이희호 여사의 백악관 비밀회동을 주선함으로써 닉슨이 박정희가 아니라 한국의 야당후보 김대중에게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 필자는 이 사실의 일부를 월간 ≪말≫ 98년 6월호에 26년 만에 비로소 공개했다. 내가 중앙정보부의 끄나풀로서 김대중씨의 주미 동향을 그들에게 제보했다면 가장 먼저 고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가 바로 패트리셔 닉슨 여사와 이희호 여사의 비밀회동 배경이었을 것이다. 필자는 이른바 ≪안기부 존안카드≫ 관리자에게 공개질의한다. 안기부는 이 회동에 대해 월간 ≪말≫에 공개된 이상의 대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월간조선≫ 8월호 기사의 의도는 분명하다. 이제 ≪친북≫**만으로 부족해서 민주화운동** 30년 동지인 김대통령과 필자를 이간질하고 ≪CIA 첩자≫로 몰아 우리 민족과 필자를 이간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보고 필자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했다. 분단 상황에서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는 것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말하는 것만큼의 각오가 필요한 일이라고.

한완상 전 부총리나 김정남 전 청와대 수석의 경우처럼 ≪조선일보≫의 언론테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필자에 대한 이번 음해는 한국의 사법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 대법원으로부터 허위날조로 한 인간을 매도해도 좋다는 면허증을 받은 ≪조선일보≫가 이제 ≪공공의 이익≫이란 간판을 내걸고 아예 필자를 매장하러 나선 것이다.

이 사태 앞에서 필자는 2차대전 이후 나치독일의 전범들을 심판하기 위해 진행됐던 뉴렌버그 군사재판의 한 장면을 상기한다. 뉴렌버그 군재에서는 나치독일의 최고재판관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유린한 그의 판결이 독일의 법질서를 무너뜨려 결국 히틀러의 무자비한 대학살이란 잔악한 처사를 합법화시키는 데 이르렀다는 이유였다.

필자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한 이번 판결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필자는 ≪조선일보≫를 미국 법정에 세워 시비를 가릴 것이다. 필자가 한국 중앙정보부의 끄나풀이었는지 여부는 주미 한국 중정요원들이 외교관 신분 이상의 일을 해도 되는지를 다시 한번 엄격하게 체크하는 FBI가 가려 줄 것이며 필자가 미 CIA첩자인지는 CIA 등 관련기관들이 입증해줄 것이다.

미국식 언론자유에는 사실보도라는 책임이 따른다. 존안카드라는 내부문서에다 허무맹랑한 소리들을 정보라고 적어 놓은 안기부도 한심하지만 안기부 문서라고 해서 사실확인도 없이 대서특필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매체가 과연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를 필자는 이번 기회에 ≪조선일보≫에 똑똑히 가르쳐 줄 생각이다. 그런 언론을 가지고는 대한민국은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한 철인은 ≪과거를 잊은 자는 지난 잘못을 되풀이하게 마련이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자는 기만의 올가미에 목을 매게 된다≫는 격언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 1천3백여명 설문조사 – 조선일보 평생 구독거부 동참 36.4%

전대기련 · Unews, 대학생 1천3백여명 설문

언론, 제역할 못한다 76.4% 조선일보 평생 구독거부 동참 36.4%

각계 각층에서 언론개혁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언론의 참 역할을 찾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들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또한 ≪사회악≫적인 언론이라며 조선일보라는 특정 언론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대학생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조선일보반대운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에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에서는 지난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전국 9개 지역(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 연세대, 경희대, 한양대, 부산대, 전북대, 경기대, 영남대, 충북대 등 전국 42개 4년제 대학에서 추출한 2001년도 재학생 2천 3백명에 대해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방법은 1대1 면접 방식을 택했으며 이 중 실제 수거량 1천 3백여부에 대해 SAS 방식을 이용해 통계 처리했고, 최대 오차는 ±5%이다.



김국방위원장 적극 환영 67.1%, 환영행사 나가겠다 23.8%

대학생 신문 선택 기준 ≪정보≫

우리 나라 대학생들이 신문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절반이 넘는 55.4%의 학우들이 ≪정보력≫에 의해 신문을 선택한다고 답했고, ≪신뢰도≫가 기준이라는 학생도 25.8%에 달했다. 반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신문을 선택하는 대학생은 6.8%인 93명에 불과했다. 이는 현재 각 신문별로 정치적 성향이 획일화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대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사회 제반 현상에 대한 관점 및 해석 등을 기성 언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에 각종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과 그의 신뢰도를 기준으로 신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 제역할 못한다 76.4%

이러한 학우들의 판단은 한국사회에서의 언론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진다. 한국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76.4%의 학생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5.8%만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언론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변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한 학생이 10.2% 뿐이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현재 한국 언론이 국민들의 정치적 의견을 수용·반영하는 언론 매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대학생들의 판단을 보여준다.

언론개혁 1순위 ≪독과점 체제 해제≫

그리고 언론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는 ≪언론 재벌형성과 그 횡포(43.7%)≫, ≫권력과 언론 유착(32.7%)≫, ≪국민대변지의 부재(12.9%)≫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76% 가량의 학우들이 제 역할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횡포와 권력≫을 꼽았음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 대학생들은 ≪언론의 권력화≫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언론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권력의 2부대로서 정책결정에 한 몫 한다(28.3%)≫, ≪**정권마저 압박할 수 있는 절대권력**(14.3%)≫**라고 평가했고**, 현재 언론에서 가장 개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독과점 체제해체(36.2%)≫, ≫**경영권과 편집권의 분리**(29.9%)≫**등의 ≪권력해체≫ 부분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언론사 세무조사, ≪필요하나 일방적이다≫ 50.2%

그렇다면 이러한 언론을 개혁하겠다는 지금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25.4%의 학우들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문고시와 언론사 세무조사가 ≪신문언론을 개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판단하는 반면, 50.2%의 학우들은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는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답해, 정부의 정책이 언론개혁을 온전히 시행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었다. 그러나 ≪언론탄압≫이라고 보고 있는 학우는 11.6%에 지나지 않아 대표적인 기성 언론사들의 공세적 보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6.4% ≪조선일보 평생구독 거부운동 동참하겠다≫

한편, 각 시민사회단체의 조선일보반대운동(안티조선운동)이 보다 확산되고 있는 지금, 대학생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높은 관심과 참여도를 보이고 있었다.

조선일보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6.0%)≫,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34.6%)≫**등**, 절반이 넘는 50.6%의 학우들이 조선일보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신뢰도≫를 바탕으로 신문을 선택하는 학우들이 25.8%였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일보에 대한 학우들의 가치판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56.6%의 학우들이 조선일보의 과거 친일행각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중 ≪민족정신말살(39.7%)≫**이 가장 큰 일이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대표적 편파, 오보사례로는 ≪이승복 어린이 보도조작(25.1%)≫, ≪**금강산 댐 관련 보도조작**(18.9%)≫**등을 꼽았다.** 그리고 이러한 조선일보의 과거 행적에 대해 36.4%가 피해 보상 및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22.8%의 학우들은 ≪이를 위해 불매운동 등의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67.8%의 대학생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조선일보 반대운동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고, 46.6%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각 지역별 분포를 볼 때는 서울, 경인지역 및 광주전남 지역에서 70-80%의 학우들이 반대운동을 인지하고 50-60%가 동의한다고 밝혀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반대운동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동의하는 학우들의 비율도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는 조선일보 반대운동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조선일보 반대운동의 당위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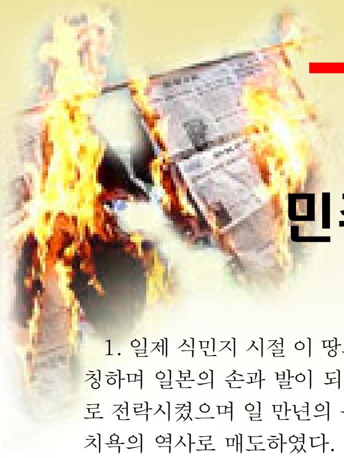


또한 이러한 조선일보 반대운동을 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 ≪특정 정권과 자사이익을 앞세운 반민주적 행각(42.2%)≫, ≪**과거의 친일행각**(14.7%)≫, ≪**언론 재벌로써의 횡포**(11.6%)≫, ≫**반통일적 행각**(11%)≫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20.5%의 학우들은 ≪위 사례 모두≫라고 답하기도 했다.

현재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장: 고윤정, 부산대 신문사 편집국장, 이하 전대기련)에서 추진하는 ≪조선일보 평생구독거부운동≫에 대해 36.4%인 4백 68명의 학생들이 ≪동참하겠다≫고 밝히는 등, 조선일보 반대운동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는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Unews
2001-05-12 16:43:00





진정한 언론개혁으로 민주와 통일 시대 참 언론을 일으키자

- 언론개혁 6월 선언 -

1. 일제 식민지 시절 이 땅의 언론은 ≪민족언론≫을 사칭하며 일본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 민족을 일본의 노예로 전락시켰으며 일 만년의 유구하고 자랑찬 우리 역사를 치욕의 역사로 매도하였다. 민주주의가 철저히 억압당하던 독재정권시절, 우리 언론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 언론은 정권에 아부, 굴종하며 독재자를 찬양하고 독재를 정당화시키는 일을 수행하였다. 독재자의 나팔수 역할을 당당히 진행한 것이다. 그리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민족의 미래를 가로막고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일등공신 역할도 자임하였다.

2. 현재 언론의 모습은 어떠한가. 모든 언론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일본과 미국에 아부하고, 독재에 빌붙어 부와 권력을 쌓고, 그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이 이 땅 언론의 슬픈 자화상이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주와 통일의 길을 방해하면서 그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웠으며, 자기들의 거짓과 왜곡을 정당화하기 위해 ≪언론 자유≫를 들먹였다. 그것은 언론 자유가 아니라 언론 말살이며 민주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었다.



3. 이 땅 언론의 추악한 모습은 비단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언론사 세무 조사를 통해 온 세상에 널리 드러난 것처럼 그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탈세와 불법 자금 도피 등 국민의 상상을 초월하는 중대 범죄를 일삼았다. 겉으로는 온갖 미사여구로 세금 포탈과 자금 도피 등을 비판하던 그들이 사실은 이 땅에서 가장 더러운 경제 범죄자들이었던 것이다.

4. 탈세는 국민들의 피와 땀을 빼앗는 가장 극악한 범죄이며 자금 해외 도피는 나라의 재산을 가로채는 참을 수 없는 죄악이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이 때, 잘못을 시인하고 참회하기는커녕 언론들은 그 뻔뻔한 입을 벌려 온갖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반국민적이고, 반개혁적인 자기들의 본 모습을 스스로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5. 이 땅 언론이 오늘의 추한 몰골에 이른 까닭은 언론재벌, 재벌 언론의 탐욕에 있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 입을 이용하여 분단과 권력을 유지하려는 반통일, 반민주 세력의 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언론 개혁은 언론의 거짓과 부패를 차단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언론을 향한 반통일, 반민주 세력의 지배, 개입 구조를 청산하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언론사들 스스로 자기들의 범죄를 공개하고 참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 당국의 세무조사가 처음에서 끝까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힘주어 촉구한다. 지나온 과오를 모두 씻어 내고, 진정한 언론의 모습을 회복하는 언론, 민주주의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 땀흘려 일하는 언론을 온 국민은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우리는 바른 언론, 깨끗한 언론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진정한 언론 개혁과 올바른 언론 자유가 실현되는 그 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1년 6월 27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반통일세력의 망언과 준동을 규탄하는 성명서

서울서부지역통일연대(준)

민족의 이름으로 6.15선언시대 역사의 재판장에서 반통일세력들을 심판하자!!

새삼스러운 이야기이지만 남북공동선언 발표이후 통일을 향한 많은 사회적 전환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탄압받으며 어두운 그늘에서 힘겹게 투쟁을 해야만 했던 통일운동은 이제 당당하게 역사의 무대앞에서 합법적인 대중운동으로 펼쳐나가게 된 장이 열리게 되었다. 바야흐로 자주의 시대, 통일의 시대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에서도 이제 6.15선언 시대의 봄을 맞아 활짝 통일을 피우고 있는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수구세력들은 이런 역사의 봄을 거부한 채 어떻게 해서든 모든 것을 되돌려 보려고 발악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민족앞에, 역사앞에 저지른 죄과를 어떻게 해서든 모면해 보기위해서 필사적으로 공동선언 이행의 길을 막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해방이후 이들은 분단상황을 이용해서 외세에 아부하고, 민중을 수탈하며 남한사회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장악하면서 자신들만의 질서와 체계를 구축해 놓았다. 그들만의 세계는 이제 그 밑바닥부터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김영삼,이회창과 한나라당,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 그리고 주적론을 고수하는 자들이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얼마전 ≪6.15선언 1주년을 맞아 레임덕에 빠져 **김정일**국방위원장 방한에 매달리는 김대중씨는 정상회담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며 또한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을 묵인하고 비호하고 있다고 하면서 김대중정부에 대한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또한 최근 **김정일**국방위원장 방한에 대해서도 태도를 바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해댔다.

이회창총재와 한나라당도 공동선언이행의 길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넘어들고 있다. 최근 이북상선이 영해로 들어온 것과 관련해서 이들은 이를 영해침범으로 규정하고 국방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정치공세를 퍼부었다. 그 이후 같은 영해에서 이북민간선박에 총격전이 벌어졌을 때엔 역시나 ≪잘한일≫**이라며 극찬하는 반통일적 행각을 일삼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도데체 무엇을 하자는 말인가? 전쟁이라도 하자는 말인가?



이들의 행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비리언론을 두둔하며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도 국가안보를 운운하며 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자들이 제1야당이라는 간판으로 국민들과 민족을 우롱하며 이 사회에 기생하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조선, 중앙, 동아를 비롯한 각종 신문매체와 방송언론 또한 구태의연한 민족대결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공동선언의의를 훼손시키며 화해와 협력분위기를 막아나서고 있다. 이들은 언론매체를 장악하고 새로운 시대와 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나선다. 실상 이들을 파헤쳐보면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부정부패의 온상이었음을 우린 확인하였고 이들이 부르짖는 역사관과 사회정의가 결국 자가당착이며 자기모순이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이들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한다.

이들을 그대로 두고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들의 반통일적 행각에 엄중히 규탄하며 이들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이남의 민족민주세력들에게 가슴 절절히 호소한다.

– 민족의 이름으로 반통일행각과 망발만 일삼는 김영삼을 분노로서 규탄한다!

– 이회창과 한나라당은 6.15남북공동선언 역행하는 모든 정치적 술수를 즉각 중단하며 민족과 역사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 부정부패의 온상, 썩은 언론은 이제 필요없다. 남북대결여론에 나팔수가 되어왔던 수구반통일 언론들을 이 사회에서 몰아내자!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통일연대 (준)

(서부지역 노점상연합,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서울서부지구 총학생회연합, 나라사랑청년회, 서부청년회(준), 서강청년동우회,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명지청년동우회, 우리마당)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해 7월 2일



조선일보 반대를 위한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경기인천지부 성명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중을 유린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불순한 분자를 조국과 민족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이다.

조/선/일/보, 너는 이제, 조국과 민족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었다.

조/선/일/보 네가 얼룩져 논 지난 현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려하니 잘 들어보기 바란다.

1930년! 너는 이제에 분명 군림하였다. ≪천황폐하≫라는 호칭을 쓰며, 그를 숭배했을 뿐만아니라, 일제의 모든 정치를 찬양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1950년! 반공이데올로기 유포, 집단 학살 정당화 등! 넌 미 군부에 편승하면서, 분단을 고착화하는데 핵심적 일조대상으로 자리잡았다.

1970년! 학살과 폭력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 속에서, 학살의 정당성을 대변하는 등, 파쇼정권의 도구로서 너는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이러한 가슴아픈 역사 속에서 너는 투쟁하는 우리 민족과 민중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가?

간고한 투쟁으로 목숨을 바쳤던 우리 애국민중을 ≪범인≫으로 ≪폭도≫로 몰아세우며 우리의 조국과 민중의 ≪한≫을 더욱 달아오르게 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너는, 숭고한 투쟁으로 일궈낸 우리 민족과 민중의 염원인 ≪조국통일≫의 이정표 ≪6.15 공동선언≫을 먹칠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래! 이해할 수 있다. 50년 넘게 지켜온 네 본질인 반 통일성이 드디어 까발려 지려는 지금 상황에서 한편으론 역사의 정방향을 가리우려하는 너의 마지막 발악을 이해할 수 있겠다. 앞으로 벌어질 우리 민족과 민중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게 여겨지겠느냐!

조/선/일/보! 잘 들어라.

너는 우리 민중이 고통과 소름으로 넋을 잃어갈 때 영혼과 육체를 앗아간 장본인 중 장본인이다.

≪할 말하는 신문≫으로 포장하고, 또 포장하려 하지만, 넌 이미 생을 다한, 이젠 갉아 부서져야 할 대상이 되었다

신문작업에, 불의와의 투쟁의 현장 속에, 언제나 하얀 밤을 지새며 살아가는 우리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경기인천지부 소속 대학신문 기자들은 반 통일성과 반 민중성으로 모아지는 너의 역사를 대대적으로 폭로할 것이다. 또한 내 스스로가 진심 어린 사죄와 부끄러워 스스로 없어질 줄 아는 용기를 갖는 그날까지, 청년기자다운 양심을 갖고 너와 싸울 것이다.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 언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반미의 성지 불패의 선전꾼
경기인천지부 기자 일동





≪부문별 선언문≫



개신교 : 언론사가 공적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사유화되어 지난 6월 20일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비리와 부정의 온상으로 비쳐짐으로 온 국민들에게 큰실망 감을 가져다주었다. 우리는 언론사가 하루속히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어냐 하는 책임성 등 개혁과제를 잘 이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인권증진 나아가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이루어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란다.

천주교 : 모든 언론사들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반했던 역사적 과오와 함께 지금까지 드러난 불법 ,탈법과 비리들을 자진공개하고 국민 앞에 겸허히 반성해야한다. 그리고 다시는 공익에 앞서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세우지 말 것이며 사회의 공기로서 우리 사회의 진실된 모습과 참 여론의 전달을 사명으로 할 것과 모든 언론 행위에 대한 편집권의 독립과 편집자율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여성 : 언론사의 불투명경영과 혼탁한 신문시장은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6월 21일 국세청 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세무조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를 보면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공기인 언론사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 부동산 위장전입, 가짜신용카드 영수증 발급 등의 비리가 행해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 97년부터 계열사 광고 자사무료 게재, 기업어음저리매입, 진성어음 제공 등의 방법으로 부당내부거래를 해 온 것이 드러났다. 이는 그동안 언론이 비판하던 악덕재벌의 부정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이지만,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 언론은 극히 일부분이었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인권과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위해 언론이 개혁되어야함을 천 명하는 바이다.



환경 : 우리 환경운동단체들은 시민 · 사회 · 노동 · 종교단체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한 언론, 공정하고 약자들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반영되는 언론, 권력과 재벌로부터 자유로운 참 언론의 실현을 위해 언론개혁운동을 힘껏 펼쳐 나갈 것이다.

학계 :언론은 이제 구조적으로 제도의 변화를 통해 개혁되어야 한다. 우선 현장을 경험하는 언론인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양심에 따라서 소신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편집권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편집권 의 독립은 외부압력으로부터는 물론 내부의 간섭으로부터도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론사의 소유구조도 족벌지배체제로부터 벗어나 소유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소수 의견을 반영하는 다양한 언론이 존재할 수 있도록 자본력에 좌우되지 않는 건전한 언론 시장의 형성이 필요하다.

문화예술 : 정부여당은 ≪언론개혁≫이라는 전사회적 열망과 민족사적 과제를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세무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탈법과 비리로 얼룩진 언론을 단죄하는데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번 세무조사가 일부 수구세력의 주장대로 언론을 장악하려는 음모로 치부되어 그 빛이 바랠 것이다. 빛바랜 언론개혁의 의지는 결국 국민적 저항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어둡고 혼란한 정권말기 증후군으로 목을 죄어 올 것이다. 이 자명한 수순 앞에서 한치의 흔들림조차 어리석을 뿐이다. 정부여당은 또한, 국회 내에 언론발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고, 편집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정기간행물법개정을 서두르는 등 언론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한다. 이러한 온 국민적 열망을 등에 지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다시 한번 언론개혁을 힘주어 주장한다.**≪공정하고 공익적인 언론구조 창출 을 위한 언 · 론 · 개 · 혁≫만이 우리의 살길이다**.

노동 :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때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을 외치는 모습에서는 육군인 경찰병력보다 먼저 파업을 폭격하는 자본의 폭격기가 바로 언론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이다. 가뭄이라 안되고, 고임금 파업이라 안되고, 시민불편주니 안되고, 외국인 투자 내쫓고 경제에 주름살 주니 안되고, 불법이라 안되고 …오직 파업은 안된다는 이야기일 뿐 ,왜 파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 파업이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한 기본권리라는 소박한 진리조차 묻어버렸다. 언론을 제대로 바로 잡지 않고 노동정책을 포함해 그 무엇 올바로 세울 수 있단 말인가. 소박한 진리를 뼈저리게 확인했던 2001년 6월이었다. 이제 노동자들도 언론개혁운동에 적극 나서겠다. 이 가뭄에 웬 연대파업이냐 더니 이 가뭄에 세금도둑질을 수천억씩 해먹고 있는 언론, 족벌재벌손아귀에서 자본의 폭격기가 돼버린 언론을 바로 세우는데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힘쓰겠다. 이미 시작한 조선일보거부운동부터 비상한 각오로 끈질기게 실제 힘이 되도록 애쓰겠다.

농민 : 민중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과 야합하여 자기들만의 세계를 탄탄히 구축해 왔던 언론재벌, 재벌언론, 족벌언론은 이제라도 국민들의 참뜻을 받아 안고 민중의 삶을 대변하는 언론, 공정한 언론, 공익을 위한 언론, 깨끗한 언론으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빈민 : 우리 도시빈민은 언론족벌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언론개혁은 이제 그 당위성을 넘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개혁이 우선시 되어 고통받고 탄압 받는 현실을 제대로 알려 낼 때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때문에 도시빈민은 이 사회의 민주언론을 쟁취하기 위하여 힘써 싸워나갈 것이다

통일 : 이 땅 언론이 오늘의 추한 몰골에 이른 까닭은 언론재벌, 재벌언론의 탐욕에 있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 입을 이용하여 분단과 권력을 유지하려는 반통일, 반민주세력의 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언론개혁은 언론의 거짓과 부패를 차단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언론을 향한 반통일, 반민주세력의 지배, 개입구조를 청산하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언론사들 스스로 자기들의 범죄를 공개하고 참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당국의 세무조사가 처음에서 끝까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힘주어 촉구한다. 지나온 과오를 모두 씻어 내고, 진정





한 언론의 모습을 회복하는 언론, 민주주의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언론을 온 국민은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학생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로 대표되는 수구보수언론이 탈세와 불공정거래 언론의 1순위를 앞다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번 탈세조사는 거대자본이자 권력화 된 수구보수언론이 영리를 위한 부정과 비리의 파렴치한 생존방식을 공개 처벌하는 일이자 사대매국 반통일세력의 나팔수로 민중의 역사를 도둑질한 중죄를 처벌하는 일이다. 오늘 우리는 칼보다 강한 펜의 위력을 가진 자들에게 고스란히 받치고 그들 스스로 민족과 민중위에 군림해 온 역사의 이단아들을 심판하는데 손을 잡았다. 언론개혁 없이 더 이상의 사회발전은 없다. 그들의 곡필 속에 고통받고 죽어간 민중의 목소리, 자주민주통일의 역사를 되찾아야 한다. 이에 우리 청년학생들은 언론개혁의 맨 앞장에 설 것을 4천만 민중 앞에 다짐한다.

교육 : 언론은 ≪이익≫을 앞세우는 좁은 시야를 버리고, **≪옳고 그름≫의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고 천명합니다.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이익≫에 집착하여 혼란스러워진 ≪말의 질서≫를 언론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육≫의 미래를 여는 전망을 올바른 ≪말의 질서≫에 터전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사회적 부익부 빈익빈을 넘어서기 위해, 국민의 교육기본권과 교육평등권을 지키는 역할을 언론이 맡아야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백년지대계가 바로 세워짐을 선언합니다.



신문개혁국민행동 부산본부 외 참가지역 :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신문시장의 독과점, 여론독과점, 언론사의 족벌세습체제, 편집권 예속, 지나친 상업주의 등을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 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야의원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언론개혁을 위한 총체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철저히 실행해야 한다. 또한 편집권의 독립과 언론시장의 독과점을 타파하기 위해 정기간행물 법 을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다른 지역과 연대하여 언론개혁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법조계 : 우리 법조인들은, 일부 언론사들이 강변하는 언론의 자유가 실은 초법적인 언론사 소유경영권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는 무관함을 밝히는 바이다.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는 언론개혁운동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일부 언론의 횡포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이다. 극단적으로 이익집단화한 일부 언론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일부 언론과 그 사주에 의하여 국민의 의사가 더 이상 호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언론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절실한 과제이다. 이에 일부 언론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을 근절하고, 그럼으로써 참다운 언론의 자유를 꽃피우기 위한 언론개혁운동에 법조인들도 동참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바른지역언론연대 : 왜곡된 언론현실을 만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집단은 거듭 반성하라. 또한 국회는 하루 빨리 정간법을 비롯한 언론개혁법(가칭)을 제 · 개정하라. 이제 자유언론말살의 공범인 재벌언론과 언론재벌의 언론독점과 횡포는 역사의 대하 뒤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우리 바른지역언론연대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각종 언론관련법과 제도의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고 기득권 언론에 독점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각종 지원정책을 바른언론을 개척하고 있는 지역언론에도 동등하게 부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민사회단체 : 스스로 ≪밤의 대통령≫을 자임하고 선거때면 ≪대통령 만들기≫를 꾀 할 정도로 거대해진 언론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여론을 왜곡시키며, 부당한 권력행사를 즐기는 족벌언론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사회적 흉기≫이다. 이 처럼 **≪사회적 흉기≫가 된 족벌언론이 국정운영의 방향을 좌지우지하고**, 국민의 눈을 가리며, 부당한 사적이익챙기기를 하는 것을 시민사회단체들은 더 이상 방관 할 수가 없다.

동아언론자유투쟁위원회 :1987년 6월 항쟁 뒤 시민적 자유가 확대되면서 언론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시민의 저항과 항쟁에 의해 시민적 자유, 언론의 자유도 확대 됐다. 그것은 언론인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치열한 항쟁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었다. 이 넓어진 언론자유의 공간에서, 군부독재정권에 야합하고 굴종했던 수구족벌신문들은 권언유착으로 축적한 거대자본의 힘을 바탕으로 거대한 권력집단이 되었고, 언론사주들은 언론황제가 되었으며, 밤의 대통령이 되었다. 바로 그들이 이제는 언론자유를 농락하고 짓밟고 있으며, 사회적 공기라는 언론을 사유화한 세력들이다. 우리는 이들 언어폭력의 집단, 언론을 사유화한 언론황제들, 정치권력 보다 더 큰 권력 을 가지고 있다고 오만을 떠는 밤의 황제 무리들을 언론의 현장에서 청산하고, 그 자리에 민족, 민주, 민중을 위한 참언론이 설 수 있도록 하는 시민적 투쟁에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우리도 그 거룩한 싸움에 한 부분이 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엄숙하게 선언하는 바이다.

현직언론인 : 우리는 비록 부끄러움과 참담함에 한없이 빠져드는 현실일지라도 새로운 희망 을 싹틔울 책임과 의무 또한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는다. 누를 길 없는 자괴감을 밑거름 삼고 독재권력에 맞선 수십 년의 언론민주화투쟁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제 국민 속에 존재하는 참언론의 새벽을 여는 횃불을 높이 치켜든다.

박정미 기자 josuna@unews.co.kr
유뉴스 2001-06-29 www.unews.co.kr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을 선언하며



우리 사회의 온전한 민주화와 민족통일의 대세를 지키는 지킴이로서, 지난해 9월 정식으로 출범했던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는 오늘 이 시각부터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그 동안 조선일보가 우리 민족사에 저질렀던 죄악을 스스로 참회하고, 역사와 민족 앞에 사죄한 뒤에 참언론으로 거듭날 것을 수차 촉구한바 있다.

3차에 걸쳐 800여명이 참여했던 ≪조선일보거부 지식인선언≫이 그러했고, 시민들과 사회단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조선일보 반대 1인 시위≫, ≪국토종단≫, ≪조선일보 허위왜곡 보도전시회≫, ≪국사교과서 개정 서명운동≫등이 전개되었으며,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모임이 각 지역과 대학별로 속속 결성되면서 조선일보의 각성과 언론개혁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로지 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개혁의 고비마다 발목을 잡고 또 민족화해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구시대의 유물인 냉전과 군사독재의 망령을 되살리는데 골몰 해왔을 뿐이다. 또한 정당한 노동운동을 악의적으로 매도하는가하면 교육 현실을 왜곡하는데도 앞장서왔다. 그에 따라 조선일보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자 불안을 느낀 나머지 구태의연하게 음모론을 흘리거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이니, 정권의 홍위병이니 하는 식으로 매도해버리고 말았다.



조선일보의 기만술은 최근 국세청의 언론사세무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한층 극에 달하고 있다. 그들의 사주 방씨 일가가 희대의 세금도둑이었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는데도 언론탄압이라는 참으로 가당치 않은 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마치 권력의 희생양이라도 되는 양 여론을 일방적으로 오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기자라면 정직과 양심을 생명으로 삼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기자들은 일개 사주의 마름으로 전락하여 파렴치한 범법자를 옹호하고, 언론개혁이라는 사안의 본질은 철저히 외면한 채 ,억측과 왜곡기사로 연일 지면을 도배질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이것은 조선일보의 족벌사주인 방씨 일가와 바로 그들을 위해서라면 정권도 없애버릴 수 있다는 일부 조선일보 종사자들의 오만이요, 이들의 작태는 가히 ≪밤의 대통령≫,≪신문권력 ≫이라는 말을 새삼 실감케 한다. 이에 우리는 조선일보의 대변화를 위하여 방상훈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구독거부운동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사실 우리 독자들은 신문구독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어 있었다. 5공화국의 언론말살정책으로 족벌언론들에 의한 독과점 체제가 굳어졌고, 정권의 나팔수에 지나지 않았던 신문들은 보도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일보와 같은 족벌언론사의 차별적인 경품제공과 무가지 살포에 선택권이 좌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독자들에게 선택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한 신문, 거짓말과 왜곡을 일삼는 신문, 시대가 요청하는 변화의 소명을 외면하는 신문, 냉전과 독재자의 망령에 사로 잡혀 국민들의 사고와 가치관을 혼란에 빠뜨리는 신문, 곧 조선일보는 국민들로부터 마땅히 거부되고 말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완성과 민족의 평화적 자주통일로 나아가는 노정에서 언론개혁은 이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참으로 도도한 역사적 흐름이다. 정녕 언론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도 통일도 멀고 먼 이야기가 되고 말 것이다. 또한 법과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해서 언론개혁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오, 구체적이고 분명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을 언론개혁의 실천방안으로 삼았으며, 이는 신문의 주인이 곧 독자라는 주권 선언이기도 하다. 조선일보의 실상과 해악을 온 국민들에게 알린 다면 신문에 대한 선택은 분명 달라 질 것이다.

우리는 조선일보가 과거를 진실로 반성하고 국민과 민족 앞에 사죄할 때까지 전국의 모든 연대단체, 그리고 시민학생들과 더불어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을 실제적이고 공개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2001년 7월 10일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국제민주연대, 대구희망의시민포럼, 인터넷 웹진≪대자보≫,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한민국독립유공자유족회, 매체비평 우리스스로, 문화개혁시민연대 매체문화개혁위원회, 미디어세상 열린사람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사회운동연합, 민족정기수호협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 불교언론대책위원회, 4월혁명회,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안티조선≪우리모두≫, 언론정보학회,5 · 18 광주민중항쟁서울 · 경기동지회, 울산민주시민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인물과 사상 독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대기련, 전국대학신문기자연석회의, 전영기련, 전북민언련,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4 · 3연구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된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언론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규명위원회,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반민특위, 한총련 학부모회 (이상 59개 단체)



민교협 성명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부 수구언론의 반개혁적 왜곡편파보도와 논조를 접하면서 사회민주화와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는 조선일보에 대한 구독거부 운동에 동참할 것임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민주화에 역행하는 언론들의 보도 행태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매우 지체시키고 있음을 심각하게 느끼고, 사안별로 그 오류를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왜곡 편파 보도가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문제가 아님을 다시 인식하고 수구언론을 선도하고 있는 조선일보에 대한 구독거부 운동을 벌이고자 한다.

우리는 조선일보가 일제 강점기 시절 창간된 이후 특정 시기에 조선일보 기자들의 노력에 의해 사회에 기여한 역사가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그들의 숭고한 투쟁을 지켜나가기는커녕, 방응모 씨가 인수한 이후 지속적으로 권력과 야합해왔다.

일제 강점기 말기에 보여준 친일행태, 박정희정권의 압력에 굴복해 민주화 운동을 하는 기자들을 해직시킨 사건,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해 보여준 왜곡보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에 대해 보여준 치욕적인 칭송 보도 행태, 반공을 빌미로 국가혼란을 야기시켰던 평화의 댐 보도사건, 정치권력을 창출한다고 보여주었던 왜곡된 선거 보도행태 등은 조선일보라는 신문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명백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21세기를 맞이하여 조선일보가 과거의 왜곡보도와 논조를 반성하고 우리 나라의 미래 발전을 위해 새로 태어난다면 화해와 용서의 차원에서 과거를 묵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최근까지 보여주고 있는 조선일보의 행태이다. 민교협은 지금까지도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최근 현안들에 대한 수구언론의 보도태도를 접하면서 참담함을 느끼지 안을 수 없다.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계의 파업은 물론, 민주화에 질곡으로 작용했던 국가보안법개폐운동을 비롯한 각종인권운동, 우리 사회의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인 사학비리를 해결하려는 사립학교법개정운동,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국립대발전계획에 대한 반대운동 등에 대해 일부 언론은 철저히 반개혁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본질을 벗어나 결과만을 가지고 왜곡하거나, 반개혁적 집단의 주장만을 전달하고 개혁적 요구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의 성숙된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요인이 언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또한 최근 언론사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수구언론의 후안무치한 반응은 언론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다. 자신들의 명백한 탈법행위조차도 신성한 ≪언론자유≫의 이름을 빌려 방어하고 있는 수구 언론을 보면서, 그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기능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는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언론이 아닌 다른 집단이 그들과 같은 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은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묻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왜곡보도의 선두에 있는 조선일보의 구독을 거부하는 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동시에 구조와 제도적 대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언론개혁운동에도 동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언론들이 사회발전에 역행하는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언론종사자들이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이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교협 1500여 회원들은,

첫째, 조선일보 기고 · 취재 · 인터뷰 거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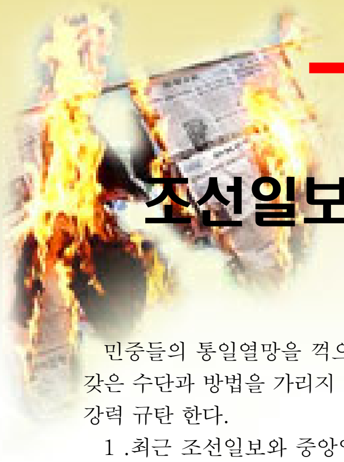
둘째, 조선일보 구독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을 권유해나갈 것이다.

셋째, 언론개혁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국민적 의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각종 공론의 장에서 언론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해나갈 것이다.

넷째, 개강 이후 이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과 언론개혁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해나갈 것이다.

2001년 7월 30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조선일보등 수구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민중들의 통일열망을 꺽으면서 기득권을 유지키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을 강력 규탄 한다.

1 .최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등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반통일적 국론분열행위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수 없다.

2. 통일대축전추진본부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통일부장관이 조건부 방북결정사실을 범민련을 통해 알리도록 해, 정부가 범민련을 공식창구로 사용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다. 또한 조선일보는 방북단은 물론 민족통일대축전남측행사에서 왜곡보도를 통해 매도하려 하고 있다. 15일 통일대축전행사중 신촌에서의 마무리집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선모형을 3대헌장기념탑을 모형화한 것이라며 매도하여 대중적으로 벌어진 통일행사를 불순세력의 음모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3. 한나라당은 최근 대변인논평을 통해 방북대표단의 북측에서의 교류를 ≪평양광란극≫ ≪친북광란극≫등으로 호도하는가 하면 이적용공단체 범민련이 통일부의 남북간 연락창구로 활약했다는 중앙일보의 왜곡된 보도를 인용하여 거짓을 확대 포장하였다.

4.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등 수구보수언론은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방북대표단의 행보와 관련해서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보도에는 관심없이 방북단을 비하하기 위해 심지어는 왜곡 보도까지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없다. 또한 한나라당은 ≪건강한 보수≫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면서 실상은 분단으로 인해 유지해왔던 자신의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해 민중들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5. 민중연대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이 계속 국론분열을 일삼고 통일을 가로막아 나선다면 민중들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것과 제 민중 진영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수구보수 반통일세력들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덧붙여 범민련 간부 및 강정구 교수를 즉 각방하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하루빨리 철폐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년 8월 28일
민족자주 · 민주주의 ·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 (준)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를 발족하며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 / 9/21



시대가 요청하는 변화의 소명

지금 우리는 분단과 독재의 오랜 질곡을 넘어 민주와 통일의 새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냉전에서 평화공존으로, 독재에서 민주로, 독점에서 평등으로, 갈등에서 화합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에 서있는 것이다. 그러나 희망의 미래는 노력 없이 얻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우리는 암울했던 지난 시대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 교육 전반에 걸쳐 드리워놓은 무거운 그림자를 아직도 극복하지 못 하고 있다. 이 그림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깊은 각성을 통해 근본적으로 변화하려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완전한 민주화와 통일의 희망에 찬 미래 사회의 건설은 국민의 정신 깊은 곳까지 뿌리내리고 있는 구시대적인 해악을 걷어내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반세기에 걸친 분단 시기를 살아오면서 각기 모순의 재생산 회로 안에 갇혀 있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자기 사회의 모순을 이겨내고 민주화와 평화의 한반도 시대를 맞기 위한 내부개혁작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은 의식 개혁을 통한 가치관의 변화이다. 불신과 증오의 냉전적 가치관에서 화해와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통일의 가치관으로, 독재와 독점에서 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적 가치관으로, 외세의존에서 민족자주의 가치관으로의 전환 없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예비할 수 없다.

이러한 전환의 시대적 소명 앞에서 우리는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국민의 의식변화는 민의를 정직하게 담아내고 시대의 변화에 걸맞도록 이끌어줄 언론의 존재 없이 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한 사회의 거울이며 미래사회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언론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언론은 시대의 요청을 담아내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는커녕, 자사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언론은 바로 조선일보이다. 조선일보는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의 언론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대신, 냉전과 독재의 구시대적 가치를 되살려 그 위에 기생하는 것을 생존전략으로 삼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조선일보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지 않고는 의식변화를 요청하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우리는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우리가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이유

첫째, 우리는 조선일보가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와 지식인 선언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정확한 사실보도이다. 특히 통일문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다룸에 있어 언론은 더더욱 사실 보도라는 언론의 정도를 지켜야 한다. 언론사가 사주와 자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보도의 원칙을 외면하고 왜곡보도를 일삼을 때, 그 언론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조선일보는 통일과 민주화의 대세를 부정하고 시대를 역행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왜곡 및 흠집내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이미 최장집 교수 사상 재단, 지역갈등 조장 보도, 노사갈등을 부추기는 보도 태도, 총선 연대 흠집 내기를 통한 시민운동 폄하, 개혁세력에 대한 음해보도, 남북화해에 딴지 걸기 등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우리는 자사의 이익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실보도라는 언론의 기본적 의무마저 저버리는 조선일보를 공정한 언론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둘째, 우리는 조선일보의 후안무치한 역사왜곡에 주목한다. 조선일보는 틈만 나면 스스로 민족정론지임을 내세운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조선일보는 대동아 공영론을 주장, 일제의 조선침략을 정당화했고, 광주학생 사건 등 민족항쟁을 테러로 매도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황민화 기사≫로 일본 천황에게 복종하고 충성할 것을 선동했으며, 일제의 내선일체론을 미화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에 조선 청년 동원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1940년 8월11일 폐간된 후 조선일보는 더욱 노골적인 친일행각 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부 독재시대에 철저하게 권력과 야합, 민주화를 부르짖는 국민의 소망을 외면하고 군부독재를 미화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독재권력에 대한 낯뜨거운 아부를 통해 독재권력 시절 급성장한 조선일보는 이제 1등 신문을 자임하며 무소불위의 언론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92년 대선 당시 조선일보는 최근 **김정일**위원장 답방 반대서명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영삼 전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그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는 조선일보가 언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이다. 독재권력 시절 북한관련 보도에서는 오보를 일삼으며 남북적대적 관계를 부추기기에 급급했던 조선일보는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최근까지도 북한의 대남전략 운운하며 안보상업주의를 버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선일보는 민족지도 아니며, 민주주의적인 신문도 아니다. 조선일보는 친일친독재, 반통일수구 신문이다. 우리는 그러한 조선일보를 반대한다.

셋째, 우리는... 라고 주장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위장에 반대한다. 조선일보는 남북화해의 대세를 드러내놓고 반대할 수 없게 되자, 교묘한 논리를 앞세우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남북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조선일보는 왜 이토록 집요하게 민족의 염원인 남북화해를 방해하는가. 조선일보가 원하는 사회는 민주와 통일의 평화시대가 아니라 냉전과 독재의 과거인가, 조선일보는 냉전이데올로기에 젖은 필진을 동원, 개혁과정의 문제점을 좌우이념대립의 낡은 틀에 꿰어 맞춰 사상공세를 펴는 등 ≪문필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걸핏하면 사상논쟁을 벌여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 으로 매도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모든 목소리를 구시대적인 사상검증을 통해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보수임을 자처한다. 보수는 지켜야 마땅한 가치를 지키려는 합리적 세계관이다. 우리는 언론이 최소한으로 지켜야할 본연의 의무마저 저버리고 과거회귀의 논리로 ≪자신 이외의 모든 생각≫을 ≪극좌≫로 매도하는 조선일보을 건전한 보수언론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조선일보는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수구언론일 뿐이다. 이외에도, 방씨 일가의 부끄러운 여러 가지 행적, 조선일보 내 수구적 필진의 수치스러운 행태, 금전을 이용한 사회 전분야와의 야합 등의 문제 등도 우리로 하여금 조선일보에 반대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우리는 지난 8월 7일 조선일보를 거부하는 1차 지식인 명단을 발표했다. 오늘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를 출범시키며 2차 지식인 명단을 함께 발표한다. 많은 분들이 동참의 뜻을 밝혀 왔다. 개중에는 공식적으로 이름 밝히기를 꺼려한 분들도 많이 있다. 공개되는 숫자 뒤에 더 많은 지지자들이 있음을 밝혀두며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를 변화를 요청하는 새 시대의 물결 위에 진수시킨다. 오늘 태어나는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는 지난 98년 결성되었던 조선일보의 연장이며 부활이다. 과거 조선공대위는 조선일보의 오만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일부분 후퇴한 운동이었다. 그러나 오늘 결성되는 시민연대는 조선일보의 영향력을 그에 걸맞게 축소시켜 통일과 민주화의 대세를 지키는 지킴이가 되고자 한다. 우리는 국민여러분과 함께 조선 일보의 허위와 왜곡, 오만과 위선에 맞서 끈질기게 싸워나갈 것임을 단호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
(상임대표 김동민, 문규현, 오종렬, 홍근수,
이하 : 안티조선연대)
2000.9.20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와 지식인 선언

지식인들의 조선일보거부선언이 사회각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방송 / 주체 90년 3월 8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조선일보거부선언이 사회각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갖고 각계인사 400여명이 참여한 조선일보거부 3차 지식인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문을 통해 김진균 서울대학교 교수는 조선일보가 남북관계에 대한 음해와 왜곡 등 구시대적인 행위를 해오고 있다면서 조선일보의 진실한 변화를 이끌어 낼 때까지 반대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각계인사들은 서울 태평로에 있는 조선일보 앞에서 조선일보친일행위 사죄촉구 시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3차 지식인 선언은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참여지식인은 700여명으로 늘어났으며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교조 등 5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거부선언이 사회각계각층에 확산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개밥의 도토리신세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은 정의와 양심을 대변하는 것을 자기의 중요한 사명으로 해야 합니다. 민족분열의 치욕사가 반세기이상 지속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언론의 중요한 사명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위해 복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런 언론의 자세에서 벗어나 영구분열을 획책하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방해하는 추악한 **매문지 *****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조선일보는 4월 합의서가 나왔을 때부터 이 소리, 저 소리 배아픈 소리를 하다가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을 공격하고 통일애국세력들을 헐뜯다 못해 6.15공동선언을 걸고들고 북을 모략하고 북에 *****는 악행을 자행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남북공동선언 발표 후 남북관계가 여러 측면에서 좋게 발전하고 우리 민족 속에서 통일열기가 어느때보다 더욱 높아가고 있는 현실에 낯을 돌리고 무엇이 그리도 배가 아픈지 공동선언 이행에 제동을 거는 행동을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북의 요구데로 국보법을 폐지해서는 안된다느니, 비전향장기수들을 북송한 **에서 북이 국군포로들을 보내야 한다느니, 당국이 현대를 통해 대북지원을 한다느니, 경의선 복원 후 **** 보다 이남의 *** ***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남북관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민중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기 전에도 대북비방에 앞장섰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조선일보사를 폭파해 버리고 *** *** *** 하자는 항의의 목소리가 거세게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예나 지금이나 남북관계개선에 훼방을 놓는 못된 짓만 했으니 어찌 국민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사회각계층이 벌이고 있는 조선일보 거부투쟁은 시대와 민의를 반영한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회각계에서는 조선일보를 이념적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시대의 **젖어있고 시대적으로 본다면 ****** 왔으며 사회적으로 본다면 누구도 곁을 안주는 **한 존재이고 민족적 견지에서 본다면 남과 북의 ****이고 공동선언 이행의 견지에서 본다면 암적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개선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러 온 조선일보의 존재는 더 이상 계속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각계민중은 반민족 반통일언론매문지인 조선일보의 죄악에 대해 똑똑히 알고 조선일보 거부투쟁을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조선일보는 나라와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러온데 대해 심각히 반성하고 남북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 온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와 지식인 선언

조선일보거부 3차 지식인 선언문

조선일보는 친일행위를 사죄하고 국민의 언론으로 거듭나야 한다

- 조선일보거부 3차 지식인 선언 명단을 공개하며 -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가 활동을 시작한 지 반 년이 흘렀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참으로 본질적인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남북정상회담이후 역사는 우리에게 냉전과 분단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개혁≫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개혁의 역사적 당위를 실현해 나가면서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일제잔재청산의 문제이다. 해마다 3. 1절, 8.15 광복절 등 민족기념일이 되면 일제잔재 청산이 화두로 떠오르지만, 우리는 한번도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한 적이 없다. 국민은 친일행위를 했던 인사들의 면면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명예조차 바쳐왔다. 뿐만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 친일파 박정희기념관의 건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실은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일제잔재 청산을 희화화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왜곡된 상황은 조선일보처럼 적극적으로 친일행위를 하며 민족을 고통속으로 몰아넣었던 집단이 감히 ≪민족정론≫을 참칭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어째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일에 이토록 무심한 것인가.

명백하게 잘못된 과거조차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안에서 개혁의 길은 더더욱 험난해질 수밖에 없다. 냉전적 사회질서에서 통일과 평화 공존적 사회질서로의 이행, 차별적 질서에서 민주와 평등의 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은 과거로부터 과감히 단절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려는 결단과 용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낡은 질서에서 새 질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과거 기득권집단의 저항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이로 인해 사회는 일시적으로 ≪전환기의 아노미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폭풍전야의 긴장으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에 휩싸일 수도 있다. 특히 선언화된 개혁이 실질적인 성과 없이 표류하게 될 때 전환기는 총체적 위기로 치닫게 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에 냉전과 분단이 낳은 갖가지 추악한 오물이 더해져 민족실종, 개혁실종, 신뢰실종의 나락에 떨어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언론의 역할에 주목하게 된다. 언론은 한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의 갈래를 잡아 한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과거사 청산은 물론 한반도에 진정한 통일과 민주의 새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국민여론을 이끌어 가는 막중한 소임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의 모습은 어떠한가. 권력화한 언론은 민주와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기는커녕 기득권세력에 편승해 구시대적 질서를 옹호하고 있다. 언론개혁에 대한 전 사회적 열망을 ≪언론탄압, 언론길들이기≫**로** 폄하하며 자신의 ≪구악≫**을 현정부의 실정에 얹어 희석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그 중심에 있는 조선일보는 **김정일**위원장 답방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고 또다시 한완상 부총리에 대해 사상검증시비를 시도하는 등 상투적인 수법으로 통일과 민주화의 도도한 강물을 역류시켜 과거 냉전시대로 역사를 후퇴시키려 는 헛된 노력을 일삼고 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총체적 난국의 가장 큰 책임이 언론에 있음을, 그리고 조선일보에 있음을 다시금 전국민 앞에 선언하고자 한다. 우리는 1,2차 지식인 선언을 통해 국민들에게는 벌거벗겨진 조선일보의 진실에 대해 눈뜨기를, 조선일보에는 시대적 변화의 소명에 부응해 거듭나기를 촉구한 바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주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낀다. 많은 국민들이 조선일보의 친일행적에 분노하며 조선일보반대운동에 동참할 뜻을 밝혀 왔고 미미하기는 하지만 조선일보의 변화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다 많은 국민이 조선일보 반대를 통한 일제잔재, 권위주의 시대 청산작업에 동참하여 민주화와 통일의 주체로서 조선일보의 진실한 변화를 견인해내는 날까지 우리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오늘은 조선일보가 태어난 날이다. 조선일보는 자신의 친일행위를 철저히 숨기고 ≪민족정론≫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있으나 정녕 민족정론지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면 먼저 스스로의 민족반역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지 않으면 안된다. 독립운동가를 불령선인으로 매도하고 일황에 갈진충성(몸을 다하여 충성하자는 뜻)할 것을 선동했으며 선량한 젊은이들을 일제의 정신대와 총알받이로 내모는데 앞장섰던 조선일보의 친일행위를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과거는 흘러갔다거나 지금 잘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자기 변명과 합리화는 역사의식 부재와 조선일보의 반민족적 역사관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과거를 분명하게 청산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세계인들의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나 계속되는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은 역사를 바로세우지 못한 우리 자신의 잘못에 기인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 우익세력의 망언과 망발을 막으려면 우리가 먼저 일제잔재를 일소하는 등 과거사청산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본의 진지한 과거성찰과 반성, 그에 따른 충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일본 우익세력의 망언과 망발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역사적 소명을 완수함에 있어 너나가 있을 수 없다는 믿음 아래 조선일보의 변화를 촉구하는 3차지식인 선언을 발표하며 조선일보를 거부하는 지식인 명단을 공개한다. 우리는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와 함께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음해와 왜곡, 진보적 인사에 대한 매도와 이념공세 등 조선일보의 시대착오적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거듭 천명하는 바이다.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

2001.3.5







조선일보거부 3차 지식인 선언 명단

- 조선일보거부 3차 지식인 선언 명단을 공개하며 -

기자회견 당시 발표한 명단에서 누락된 분 추가한 총 471명의 명단입니다.

이후 추가된 인사를 포함하여 531명으로 수정되었습니다.

3차 선언자 명단(총 531명)

1. 학계 (75명)

강영환(울산대 건축학), 구자록(울산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국순옥(인하대 법대), 김경신(전남대 가정학과), 김덕현(경상대 지리학), 김두현(울산대 사학), 김명균(울산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 김민남(경북대, ≫**대구참여연대 대표**), 김민수(전 서울미대 디자인학부), 김보현(울산대 철학), 김봉겸(옥천상고 교사), 김상기(경북대 농업경제학), 김상봉(철학아카데미, 전 그리스도신대), 김성수(연세대 법학과), 김세균(서울대 정치학), 김수행(서울대 경제학), 김승석(울산대 사회과학부), 김연민(울산대 산업경영정보공학부), 김이두(울산대 건축학), 김진균(서울대 사회학), 김태만(해양대 동아시아학과), 김호연(울산대 사학), 김희섭(부경대 국문학), 노경희(충북대 중어중문학과), 노중기(한신대 사회학), 노진철(경북대 사회학과), 류석환(울산대 화학), 문성학(경북대 윤리교육학과), 박경석(울산대 전기전자 및 자동차 공학부), 박무호(울산대 불문학), 서정훈(울산대 사학과), 성범중(울산대 국문학), 손병우(충남대 신방과), 신광영(중앙대 사회학), 신동인(옥천고등학교 교사), 신태섭(동의대 광고홍보학과), 안중환(부산대 기계공학부), 양운진(경남대 환경공학), 오세철(연대 경영학), 오장미경(성공회대 사회학과), 유초하(충북대 철학과), 윤석길(울산대 재료금속공학과), 윤종일(서일대학 민족문화과), 이갑영(인천대 경제학), 이규환(이화여대 교육학, 명예교수), 이기영(동아대 사학과), 이노형(울산대 국문학), 이덕화(평택대 국문학), 이병천(강원대 경제학과), 이상금(부산대 독문학), 이성철(창원대 사회학), 이영석(광주대 서양사학), 이재봉(원광대 정치외교학), 이재승(국민대 법학), 이정덕(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 이정우(철학아카데미), 임영일(경남대 사회학), 장남수(울산대 영문학), 전국서(울산대 영문학), 정지원(울산대 디자인학부), 정태인(한국사회과학연구회 연구위원, 전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진행자), 조광제(철학 아카데미 대표), 조만희(옥천중학교 교사), 조세열(서일대학 민족문화과), 조형제(울산대 사회과학부),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 주종환(동국대 명예교수), 주창윤(서울여대 신방과), 차정식(한일장신대 신학), 최갑수(서울대 서양사학과, 민교협 공동의장), 최영묵(성공회대 신방과), 최병두(대구대), 한규만(울산대 영문학), 한상범(동국대 법학,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한상진(울산대 사회과학부)

2. 종교계 (47명)

개신교 (11명) 권장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처장), 권찬규(목사, 인덕교회), 김종희(기독교주간지 ≪뉴스엔조이≫ 편집인), 류연창(목사, 반부패국민연대대구본부 상임대표), 문대골(목사,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 상임대표), 박광희(목사, 진주평강교회), 송경수(목사, 한우리교회), 지유철(기독교윤리실천운동 건강교회 운동국장), 홍근수(목사, 향린교회), 홍석용(목사, 우리교회), 홍성현(기독교시민사회연대 공동대표)

불교 (25명) 도각, 도관, 명진, 법광, 법성, 법안, 법타, 보선, 삼각, 선재, 설곡, 설웅, 성법, 수경, 원경, 재원, 장적, 정도, 지선(전 백양사 주지), 지원, 지홍, 진옥, 청화, 한우(실천불교승가회대구지회 회장), 효림

천주교 (10명) 김영식, 김인국, 김재열, 리수현, 백남해, 신성국, 이범석, 이상원, 조해인, 함세웅

성공회 (1명) 김대원

3. 문인 (9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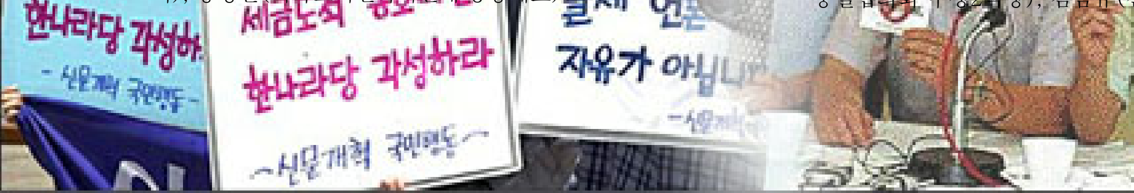
강경호(시인), 강형철(시인), 고재종(시인), 고현철(문학평론가), 권경엄(시인), 김경복(문학평론가), 김경윤(시인), 김곰치(소설가), 김규성(시인), 김기연(시인), 김기홍(시인), 김 목(아동문학), 김선태(시인, 평론가), 김성장(시인), 김성철(시인), 김성호(시인), 김인호(시인), 김재석(시인), 김정숙(시인), 김참(시인), 김청미(시인), 김충규(시인), 김하기(소설가), 김하경(소설가), 김해화(시인), 김현주(소설가), 김형효(시인), 김혜니(문학평론가), 김호균(시인), 김희수(시인), 나갑순(수필가), 남송우(문학평론가), 문성수(소설가), 류신(문학평론가), 리명한(소설가), 문순태(소설가), 박관서(시인), 박두규(시인), 박명호(소설가), 박몽구(시인), 박정애(시인), 박태순(소설가), 박호재(소설가), 백민석(소설가), 방현석(소설가), 배재경(시인), 서정원(시인), 서정홍(시인), 서형석(소설가), 송태웅(시인), 신동호(시인), 신철하(문학평론가), 안준철(시인), 엄영희(시인), 오정환(민족문학작가회의 부산지회 의장), 유종화(시인), 윤석진(시인), 윤정주(소설가), 윤정현(미술평론), 이대환(소설가), 이대흠(시인), 이민숙(시인), 이선관(시인), 이수행(시인), 이영수(시인), 이영진(시인), 이정주(시인), 이택권(문학평론가), 이학영(시인), 임종일(소설가), 장세진(소설가), 장애선(시인), 장주섭(시인), 전기웅(시인), 전성태(소설가), 정경이(시인), 정안면(시인), 정양주(시인), 정영주(시인), 정윤천(시인), 정재학(시인), 정태규(소설가), 조갑상(소설가), 조성래(시인), 조명숙(소설가), 조진태(시인), 조태진(시인), 정우련(소설가), 진명주(시인), 최영철(시인), 한상준(소설가), 한미성(시인), 홍관희(시인), 홍광석(소설가), 황광수(문학평론가), 황현(문학평론가)

4. 문화 · 예술계 (7명)

강금복(화가), 김천일(화가), 류상욱(영화평론가), 박창근(가수), 변영주(영화감독), 변정수(미디어평론가), 이효인(영화평론가)

5. 시민 · 사회 · 노동 · 농민 (151명)

강광희(영동군농민회), 강창덕(경남 민언련 대표), 강창일 (제주 4.3연구소소장), 강현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사무국장), 고은광순(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운영위원), 고창화(영동군농민회), 공동길(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홍보국장), 곽은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천위원회 교과사업부장), 곽태영(박정희기념관 반대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권순주(창원 YMCA총장), 권처홍(울산민주시민회 지도위원), 김귀식(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고문), 김규복(전 민중교회선교연합 대표), 김길섭(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투쟁2국장), 김남규(전북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김





두현(희망의시민포럼 사무국장), 김부호(영동군농민회), 김상천(민주개혁국민연합 부산본부 상임의장), 김상훈(언론노조 정책실장), 김선실(천정연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대표), 김성윤(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 김승국(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홍보위원장), 김승균(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김영만(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대책위 공동대표), 김영제(민주노총 통일위원회 통일국장), 김용택(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원호(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김은경(성폭력예방치료센터 소장), 김재권(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집행위원장), 김정규(전교조 경남지부장), 김종관(영동군 농민회), 김종일(매향리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김준섭(전주 경실련), 김지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마창진지부장), 김지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 김진백(울산민주시민회 조직위원장), 김진석(울산민주시민회 공동의장), 김진희(제주4.3연구소사무국장), 김창후 (제주4.3연구소부소장), 김태근(울산참여연대 사무국장), 김판태(소파개정 국민행동 사무처장), 김형태(천정연 천주교인권위원장), 남상헌(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의장), 노중선(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감사), 노진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도광록(울산참여연대 공동대표), 류기주(영동군농민회), 류문수(시민자치 문화센터 사무국장), 류충렬(천정연 열린신앙인사회학교 운영위원장), 맹주형(우리밀살리기운 동본부 사무국장), 문국주(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공동대표), 문병란(이철규 열사 추모사업회 회장, 전 조선대 교수), 문현숙(마창민사랑청년회 회장), 문홍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 박기학(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정책위원장), 박명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박민(전북민언련 정책실장), 박석률(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 박석분(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총무국장),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박성호(천주교 도시빈민회 부회장), 박성철(노동사회교육원 사무국장), 박순경(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고문),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공동대표), 박용규(전교조 마산지회장), 박용배(전주 YMCA 사무총장), 박정기(전국민족민주유가족 협의회 회장), 박지극(희망의 시민포럼 대표), 박운식(영동군 농민회), 박유순(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차장),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박현준(천정연 우리신앙연구소 소장), 방의천(발해뗏목탐사대 탐사대장), 배다지(민주개혁국민연합 부산본부 대표상임의장), 배영식(영동군 농민회), 백순록(시민행동21) 변연식(천정연 국제연대위원장), 변의수(영동군 농민회), 서경원(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고문), 서기철(민주개혁국민연합 부산본부 사무처장), 석규관(백범 독서회 이사장), 소순관(전국빈민운동연합 의장). 손문선(익산시민센터사무국장), 손석형(민주노총 경남도본부장), 손용준(천정연 열린신앙인사회학교 부교장), 신귀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무국장), 신대운(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공동대표), 신명찬(울산민주시민회 집행위원장), 신미영(천정연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사무국장), 심기보(울산민주시민회 사무국장), 안자석(전주경실련 조직위원장), 안하원(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양준석(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사무국장), 여이기(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공동대표), 오숙영(전북민언련 사무국장), 오종렬(전국연합 의장),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위인백(5·18 기념재단 후원회장), 유영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 유현석(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고문), 이관복(박정희기념관건립반대 공동대표), 이규재(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이돈명(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고문), 이만희(전 전교조위원장 권한대행), 이명선(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 이세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이수갑(민족정기수호협의회 회장), 이수금(천정연 카톨릭농민회 대표), 이수원(울산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순영(천정연 열린신앙인사회학교 부교장), 이완재(울산민주시민회 공동의장), 이원배(울산민주시민회 지도위원), 이윤정(김준배추모사업회 회장), 이인원(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 이정석(울산 YMCA 부장), 이필립(언론지키기 천주교 모임 헌대표), 이종린(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이철우(안티조선 ≫**우리모두**≫ **대표**), 임기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 임경란(열린사회희망연대 공동대표), 임승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 임종철(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 장여경(진보넷 정책실장), 장학익(영동군농민회), 정완용(영동군농민회), 전영일(언론노조 부위원장), 전정표(옥천조선일보바로보기운동대표), 전혜영(전교조 산하 전국영어교사모임 사무국장), 정귀남(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고문), 정기숙(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이사장), 정용화(5.18 기념재단 사무처장), 정현찬(민주주의민족통일서경연합 의장), 정형호(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 조현종(민주개혁국민연합 부산본부 상임의장), 진영우(울산민주시민회 상임의장), 차동길(울산민주시민회 정책위원장), 천영세(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채우식(민주개혁국민연합 부산본부 공동의장), 최문순(언론노조 위원장), 최상기(민주개혁국민연합 부산본부 고문), 최현숙(천정연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감사), 황 건(사월혁명회 상임의장), 황 완(4월혁명회 공동대표), 황철하(마창통일자료실 대표), 황치홍(울산민주시민회 지도위원), 홍광석(박승희추모사업회 회장), 홍대극(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운영위원), 홍성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감사), 홍준표(영동군농민회), 홍창의(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고문)

6. 법조계 (5명)

금병태(변호사), 김기왕(변호사), 김택수(변호사), 정채웅(변호사), 송철호(변호사)

7. 언론 · 출판인 (14명)

강기원(출판인), 김경태(전주방송), 김동렬(사이버 컬럼니스트), 김선경(방송작가), 명성천(전주방송), 문한별(대한매일 뉴스넷 칼럼리스트), 민명기(인터넷 웹진 더럽 편집장), 박병완(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서수권(전주방송), 석원혁(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사무국장),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 최경준(오마이뉴스 기자), 최기우(인터넷 웹진 토로 발행인, 소설가), 최용철(두리출판사 대표)

8. 전문직 (136명)

약사 (43명) 강봉주(건약 회장), 김동균, 김병학, 김선기, 김선아, 김현주(건약 울산지부장), 남정아, 리병도(건약 부회장), 류정태, 박준용, 박혜경, 변은영, 류수진, 송미옥, 신권희, 신형근, 심정아, 안정민, 오상숙, 오수미, 오정아, 오현주, 윤승천, 윤영철, 이경훈, 이성미, 이용석, 이주영, 임옥란, 임종철, 장영혜, 정동만, 정애랑, 정현주, 천문호, 최봉규, 최선화, 최인순, 최정윤, 하성주, 현수미, 홍준





택, 황해평

한의사 (66명) 권태식, 길호식, 김경훈, 김규필, 김길중, 김동수, 김상진, 김순신, 김의태, 김용덕, 김용성, 김인범, 김일영, 김정필, 김주영, 노영범, 박경호, 박소영, 박용신, 박재수, 박정출, 박찬욱, 서은미, 손인환, 송기율, 송윤경, 신현종, 안철호, 양계환, 양선호, 양회정, 엄종희, 오광수, 유성기, 유인수, 윤종서, 이경규, 이경로, 이기태, 이래춘, 이민정, 이병관, 이병순, 이상운, 이석철, 이승구, 이윤심, 이재성, 이찬구, 임병묵, 임범수, 장건발, 정경진, 정동주, 정명수, 정채빈, 조기열, 조원준, 지정옥, 진상해, 최문석, 최연성, 추경수, 한익규, 한창호, 홍학기

의사 (26명) 김미정, 김소선(진단방사선과 의사), 김종명, 김진국, 김해룡, 김현숙, 변혜진, 백재중, 백한주, 손영래, 우석균, 유영진, 이민창, 이상윤, 이중규, 임동규, 임부돌, 임미영, 임정수, 임 준, 정기현, 정상훈, 정 윤, 정일용, 주영수, 최중철

기타 (1명)

지현미(정보처리사)

이장희 외대 교수의 안티조선 일인시위

침묵의 무게로 조선일보를 짓누르다.

5월 14일 안티조선 시민연대 일인시위자로 나선 사람은 외국어대 이장희교수다. 평소 통일문제를 이야기하면 현 상황을 ≪이념적으로 불안한 동거가 시작됐다≫고 표현해온 이교수의 일인시위는 보수언론의 총화라할 조선일보앞에서 깊은 침묵으로 시작되어 깊은 침묵의 무게로 조선일보를 짓눌렀다.

이장희교수(한국외국어대 법대)는 97년 9월 20일 ≪월간조선≫(97년 7, 9월호)과 조선일보가 ≪나는야, 통일 1세대≫를 용공서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경실련 통일협회와 함께 조선일보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5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반론보도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월간조선≫에 이 교수의 반론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던 인물로 잘알려진 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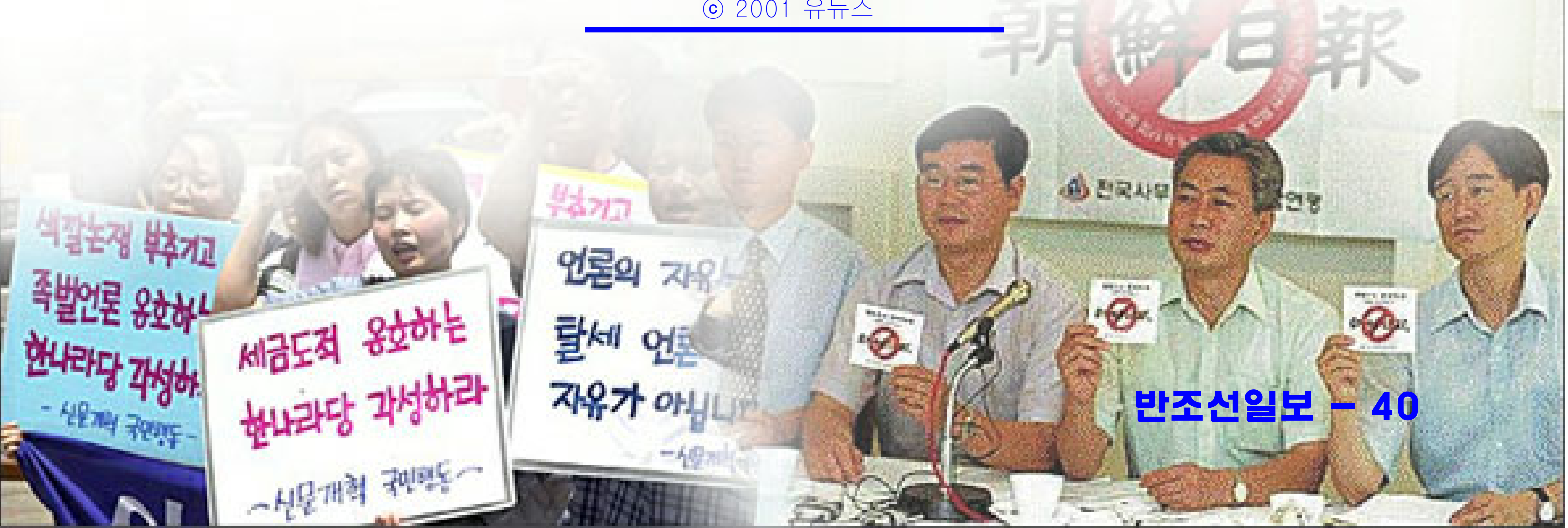
특히 이장희교수는 진보적인 학자로서 학계는 물론 통일문제 전반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갖는 학자로 정평이 나있다. 이 교수가 조선일보의 폐해에 대한 심각성과 함께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에 평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사실이다. 그러한 관심속에 통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계에서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우리의 현실여건이 진보와 보수가 ≪불안한 동거≫를 ≪편안한 동거≫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남북 통일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중요한 화두로 삼아 이야기하곤 한다.

그런 학자가 오늘 조선일보 앞에서 무거운 침묵의 입을 굳게 다물고 펼친 일인시위에 지나가는 행인들의 관심도 깊었다.

≪아니, 조선일보가 정말, 이런 신문이었나요?≫ 무거운 침묵에 응답하는 안티조선 시민연대 일인시위를 총괄하고 있는 문한별 님의 응답, 예!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틈만 나면 거짓을 일삼고 일제시대에는 천황폐하 만세를 외쳤던 신문입니다. 그런 조선일보에 대해 일본에 의해 강제 폐간된 신문으로 민족지라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즉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본의 정책에 동의해서 폐간한다는 40년 조선일보의 자진폐간사를 소개한다. 지나가던 시민, ≪정말 모르던 일인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주 나쁜 신문이네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시민들의 관심 속에 이장희교수의 무거운 침묵은 12시 55분 끝을 맺으며, 이제 조선일보가 올바로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이번 안티조선 시민연대의 일인시위의 마지막 주 첫 일인시위자의 시위는 조용한 마무리를 보았다. 오늘 시위는 피해당사자로서의 일인시위가 무게를 더한 느낌이다.

김형효 기자 tiger3029@hanmail.net
2001-05-15 01:44:00





대학신문, 이색시위 ≪조선일보 제사≫

2호선 지하철 44개역에서 1인시위도 진행



전대기련 고윤정 의장이 조선일보를 위한 제사상에 절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옥 옆 서울특별시 의회 앞에는 단출하면서도 특별한 제사상이 차려졌다. 조선일보의 영정 사진 앞에는 ≪오징어 좋아하여 오보, 족발 좋아하여 족벌, 대파 좋아하여 편파보도≫라며 조선일보가 생전 자주 찾던 음식이 제물로 놓여 졌다.

한총련 출범식기간인 6월 2일 오후 2시 40분 조선일보 반대 행동의 날 집회가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하 전대기련)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 공동주최로 4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안티조선 게릴라 콘서트≫를 통해 알려진 힙합 가수 DZ(DeeGie)의 공연이 시작되자 ≪신문 그 이하의 신문≫, ≪조선일보는 거짓말쟁이≫ 등 형형색색의 피켓이 학생들 속에서 물결쳤다.

이날 사회를 맡은 고수봉(한신대 편집국장) 전대기련 경인지부 지부장은 ≪작년 6. 15 공동선언 이후 민족적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는 속에서 조선일보는 안보 강화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개정을 부정했다≫며 조선일보의 살아 생전 죄상(?)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간간히 흘러나오는 곡소리에 맞춰 전대기련, 안티조선시민연대(이하 안티조선), 연세대 안티조선 모임 대표자들이 제사 상에 절을 했다.

≪시대의 목소리는 없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역사 속에 죽어버린 정신을 가진 너! 일제 시대 친일 단체 신문으로 태어나, 천황 폐하를 외치고, 해방 뒤에는 유신과 전두환을 찬양했던 너!≫라며 고윤정(부산대 편집국장) 전대기련 의장이 조선일보 제문을 낭독하자 조선일보신문 화형식이 이어졌다.

이날 안티조선 대표인 김동민 교수는≪군사독재가 앉았던 권좌에 조선일보가 앉아 민족의 운명을 벼랑 끝에 몰고 있다≫며 안티조선운동은 제 2의 민주화운동임임을 밝히기도 했다.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기 위해 인도를 따라 행진을 하던 도중 인도를 점거한 전투 경찰들로 인해 이를 저지 당했다. 현재 학생들은 지하철 2호선 전 역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대기련은 지난 4월 6일 서울 느티나무 카페에서 ≪조선일보 반대투쟁≫ 기자회견을 가진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안양, 마산, 청주 등 전국 10여개 도시에서 ≪조선일보 평생구독 거부≫캠페인을 펼쳐왔고, 각 대학 신문사에서 ≪조선일보 바로보기≫ 전시회와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전대기련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진행된 ≪평생구독거부≫서명운동에 참여한 6663명의 대학생 명단을 각 대학신문에 공동게재할 계획이다.

전대기련 공동기자단 unews@unews.co.kr
2001-06-02 21:58:00





날로 확산되고 있는 조선일보반대운동

구국의 소리 방송 / 주체 90년 8월 7일~8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지금 경향각지의 각계 민중들 속에선 말이죠, 극우반공보수언론의 대표지인 조선일보에 대한 구독거부운동이 유화불길 마냥 타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관한 걸 가지고 얘기 나눴으면 하는데요. 먼저 이 운동이 왜 각계각층 속에서 날이 감에 따라서 확산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언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정원 : 조선일보는 지난 일제시기에 창간된 신문으로써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부수를 놓고 볼때도 첫순위에 드는 거대언론매체죠. 이런 신문사가 전민중적인 지탄과 배격을 받고 있는건 상당한 원인이 있는거죠. 말하자면 조선일보에 대한 민중의 외면이 뿌리에 깊은 반감에서 비롯됐다고 볼수 있죠. 조선일보의 방우영일가는 외세의 찬미와 **선전, 반통일행적으로 얼룩진 죄악의 역사라고 말할수 있죠.

일제치하시기에 조선일보는 지면에 천황폐하만세를 공공연히 게재했고 독립운동가들의 의로운 혈전을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일로 매도했습니다. 광복후엔 정권에 들어앉은 친미역대독재자들을 영웅으로 찬미하면서 조국통일과 사회의 민주화,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민중들을 악랄하게 비방중상했어요.

특히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후 급격히 높아가는 민족의 통일열기에 질겁한 조선일보는 객관보도라는 언론의 사명마저 완전히 벗어버리고 반통일적인 언론, 극우보수지로써의 추악한 몰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놨죠.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로부터 지금까지 발행된 조선일보와 그 자매지들을 보노라면 그들이 이북과 이땅의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하는지 잘 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향각지의 각계 민중들속에선 조선일보를 더이상 용서할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았고 마침내 조선일보반대운동의 전민중적 봉화가 타오르게 된거예요. 조선일보에 대한 민중의 적의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은 이 운동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걸 예고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자 : 지금 조선일보반대운동을 가장 활발히 벌이고 있는건 민주노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이 이 운동에 참가한 시기는 지난 6월 25일인데요. 당시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은 노동자의 정당한 생존권투쟁을 악의에 찬 왜곡, 허위, 편파보도로 매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구독중지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을 했죠. 다음날인 6월 26일엔 조합원 100여명이 조선일보사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구요,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산하 6개 지부에 구독중지통보서를 조선일보사측에 전달을 했어요.

7월 16일에는 사무금융노조의 조선일보구독거부선언이 있었고 19일에는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20일에는 택시노조가 조선일보반대선언을 했죠.

민주노총에서는 조합원과 친지는 물론 시민들을 상대로 조선일보구독거부를 호소하고 또 산하지부에 대한 조선일보기자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이들의 취재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기사에 문제가 있을때엔 곧바로 언론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회자 : 조국통일과 사회의 민주화,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주력군의 역할을 하는 이땅의 천만노동자들이 극우의 나팔수 조선일보를 반대해 적극적으로 투쟁하는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불길은 이 운동을 처음으로 일으킨 지식인들과 대학가에서도 기세충천하게 타번진다고 봐지는데요.

윤정원 : 정의와 진리를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건 지식인들의 특징이라고 하겠는데





군중운동으로 확산

요. 이런 그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조선일보의 사이비적 행태를 용납할수 없는거죠.

안티조선의 부활을 남먼저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주요 3차에 걸치는 조선일보거부지식인선언문을 발표했어요. 지난 3월 5일 3차 지식인선언문을 발표한 서울대 김진균교수는 조선일보가 남북관계에 대한 음미와 왜곡 등 시대착오적인 보도를 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펴나갈 것이라고 주장을 했죠.

대학가에서도 조선일보반대운동이 눈에 띄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126개의 대학신문사의 대학생기자들이 망라되어 있는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은 지난 4월 6일에 조선일보반대와 언론개혁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여기서 그들은 현시기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것은 비뚤어진 반쪽짜리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며 민족자주와 민족화해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시대의 역사적 사명이라면서 앞으로 조선일보평생구독거부 등을 통해 조선일보의 죄악을 공개하는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에 참가한 대학생기자들을 포함해 대학생 6천명이 조선일보를 평생 구독하지 않겠다고 서명했어요. 지난해 조선일보사 주최 고등학생 논술대회에서 대상을 받고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거부한 서울대 1학년생인 한윤형은 ≪**조선일보는** 공국에 진보인사가 있어선 안된다며 빨갱이 사냥을 하고 있다, 이런 신문이 1등행세를 하는 사회에서 산다는건 너무 삭막하다≫고 말했어요.

조선일보반대운동이 대학가에서 세차게 일어남에 따라 이 신문사에 들어가려는 입사준비생들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조선일보기자 모집지원생은 620여명으로써 비슷한 기간 동아일보 지원자 1,500명보다 절반도 안됐습니다. 앞으로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대학가의 투쟁은 전역의 대학들에서 더욱 세차게 벌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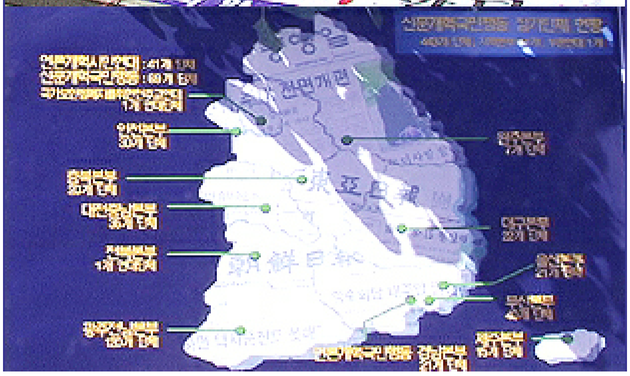
사회자 : 지금 각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선일보반대운동에서 주목되는 것이랄까 하는 건데요 이 운동이 비단 노동자, 학생들뿐 아니라 각계각층 시민들도 망라돼 있다는 것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윤정원 : 그렇죠. 조선일보반대운동은 어느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에 한정된 게 아니거든요.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조직적인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발전되는 것이라고 할수가 있어요.

그 사례가 바로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의 결성인데 여기엔 각이한 시민사회단체가 56개나 망라돼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라는 안티조선 인터넷사이트는 지난해 1월에 개설된 이래 지금까지 153만명이 넘는 가입자들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안티조선모임으로써 ≪**월간 인물과 사상 독자모임**≫**은 전국** 13개곳에 지역모임을 가지고 4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이 아니예요. ≪조선일보바로보기 옥천시민모임≫**엔 지역내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 전교조지회 등 다양한 성향의 단체가 가입하고 시의회 의원들까지 참여한 시민단체입니다. 이런 광범위한 계층을 망라하고 있는 이웃군인 영동군에서도 조직돼 있다구요.





이런 추이는 법조계뿐 아니라 심지어 종교계에서까지도 찾아볼수 있겠는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7월 3일에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일보가 국세청세무조사결과 거액의 탈세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면서 이 운동을 벌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도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언론개혁과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지난 10일 서울의 *****에서****까지 이 운동이 벌였습니다. 이 운동이 대중적으로 진행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사회자 : 고려대의 최장집교수는 얼마전에 ≪**우리 사회에서** 기득구조를 가장 전투적으로 유지하고자하는 이데올로기부문을 극우라고할때 조선일보는 그 중심에 서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와 양심의 대변자로써의 본래의 사명을 망각한채 반민중적이고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악선전을 구태의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마땅히 각계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귀중히 여기고 통일을 절절히 염원하는 이땅의 애국민중이 있는한 극우보수지로써의 조선일보가 발붙일 곳은 그 어디도 없을 겁니다.

그럼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죠.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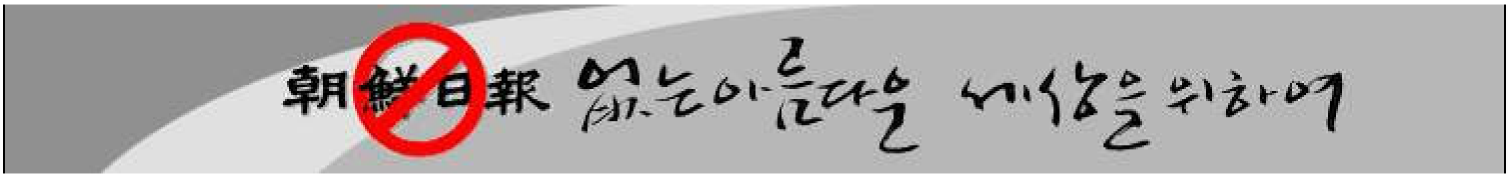
윤정원 : 감사합니다.





≪옥천≫ 조선일보독자 절반감소

충북 옥천에 안티조선 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안티조선운동 1년만에 조선일보 독자가 절반으로 줄었고 최근에는 이 지역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이 ≪옥천의 안티조선운동은 대단하고 자랑스런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오는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옥천에서는 전국의 ≪반조선일보 독립군≫들이 모여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 옥천신문: 심규철 의원 인터뷰 기사

심규철 의원 ≪조선일보는 친일행위 사죄해야≫

임시국회에서 ≪한겨레 · 대한매일 처첩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충북 영동 · 보은 · 옥천)이 언론개혁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기존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 화제다.

국회 등원 1주년을 맞아 마련된 ≪옥천신문≫(7월 28일자)과의 대담에서 심 의원은 ≪세무조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악의적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일제치하 조선일보의 반민족 행위에 대해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단언한 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규철 의원은 또 지난해부터 옥천 주민들이 전개해온 ≪조선일보 바로보기 운동≫과 ≪조선일보 안보기 운동≫에 대해서도 ≪자랑스럽고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했으며 ≪적극 지지하며 간접적으로 돕겠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바로보기 옥천시민모임≫ 전정표 대표는 ≪처첩 발언 이후 심 의원의 반개혁적인 모습이 몇 차례 보도되면서 우려를 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인터뷰에서 보여준 심 의원의 분명한 입장이 조선바보 운동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다음은 ≪옥천신문≫에 게재된 오한흥 편집국장과 심규철 의원의 일문일답.

– 요즘 언론개혁 문제가 아주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국회 문광위에 소속된 심 의원께서는 등원초기 소신발언 등으로 개혁적 이미지가 부각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초 한겨레 처첩 발언 이후 반개혁적 모습이 자주 소개되고 있는데….

≪오 해

가 있다고 봅니다. 당시 한겨레에 처첩발언을 했던 건 언론을 아끼는 충정으로 국민여론을 전달한다는 게 그렇게 된 겁니다. 제 마음은 등원초기 그대로입니다.≫

– 언론개혁 문제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정권유지 차원의 음모나 의도가 문젭니다.≫

–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언론개혁이나 세무조사는 하되 정치적 의도가 없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 ≪조선일보바로보기 옥천시민모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운동 차원의 언론개혁 운동은 적극 지지합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 그런 생각이라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의향은 없나요? 예를 들면 독립군(자원봉사자) 가입 말입니다.

≪공인으로서 어느 한 단체에 소속된다는 건 부담이잖아요?≫

– 이미 독립군에 가입한 군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은 공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리고 앞서 심 의원께서 주민들의 왕성한 의견이 있는 곳에 늘 함께 하시겠다는 견해를 밝히셨잖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 같아서요.

≪(조금은 어색한 듯 큰 소리로 웃으며) 중앙에서 정치하다보면 애로가 있거든요. 다른 쪽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 조선바보 운동에 대해 경의를 표하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요.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이슈를 우리 지역에서 이끌어냈다고 봅니다. 대단한 일이죠.≫

– 일제치하 조선일보의 반민족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선일보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를 전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봐요. (사죄를 않고) 왜 이러고 있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조선일보 관계자들을 만나면 이 같은 제 심정을 전달할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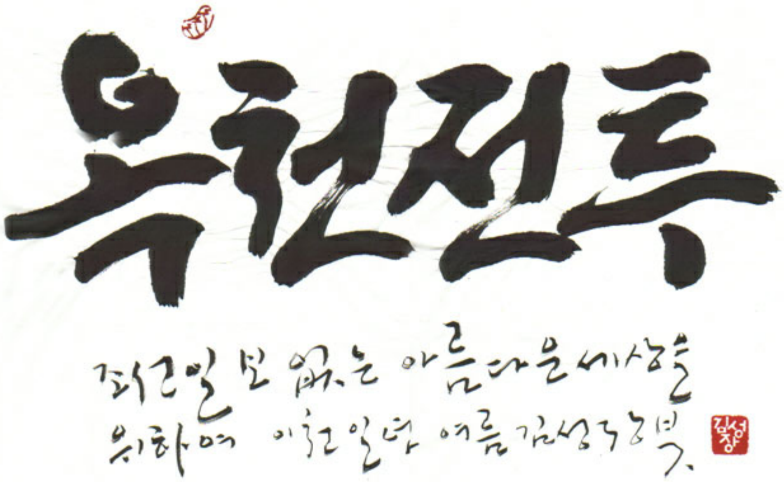
– ≪정권 차원의 악의적 의도가 배제된 언론개혁이나 세무조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 지금 옥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선바보 운동이나 시민운동 차원의 언론운동은 적극 지지한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심 의원님 입장을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 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조선일보투쟁
군중운동으로 확산



옥천지역 안티조선 1년만에 조선일보 독자 절반으로 줄어

한편 충북 옥천에서 시작된 ≪조선일보 바로보기 운동≫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옥천 주민 33명은 작년 8월 15일 ≪조선일보 바로보기 옥천시민모임≫을 결성한 뒤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사람들을 맨투맨으로 만나서 절독을 권유하는 운동을 전개해 지금까지 5백~6백부(조선일보 옥천지국장이 밝힌 수치는 4백50부. 절독운동이 직접적 원인이된 부수가 3백부이고 간접적 영향 때문에 끊긴 부수가 1백50부라고 함)를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참고로 현재 옥천에서 배포되는 조선일보는 약 1천2백부인 것으로 전해진다.

옥천 주민들의 ≪조선바보운동≫은 조선일보의 사회적 해악을 알리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친일행각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 현재 군의원 9명 전원과 도의원 1명이 가입한 것을 비롯해 회원수가 4백여명에 이르는 회원들이 서로를 부를 때 ≪독립군≫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옥천 ≪독립군≫들은 조선일보 절독을 위한 맨투맨 작전은 물론이고 자신들이 직접 조선일보의 친일행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단행본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옥천≫을 보급하는 운동도 벌이고 있다. 옥천읍 5일장 때마다 좌판을 벌리고 주민들과의 일상적 접촉도 지속하고 있는 이들은 조선일보 절독운동의 전 과정과 성과를 자신들이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 ≪물총닷컴≫에 실명으로 낱낱이 공개하고 있다.

옥천에서 성공한 이 운동사례는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다. 현재 영동, 속초, 남해, 대구, 광주, 서귀포, 서울, 대전, 창원, 전주, 청주, 홍성, 원주 등 13개 지역으로 확산된 상태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물총닷컴을 공유하고 지역별 전투일지 네트워크를 형성한 이들은 이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주민운동으로서의 언론개혁운동≫을 전국의 모든 시 · 군 · 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8월 14일 옥천에 전국 ≪독립군≫ 총집결

한편 13개 지역의 ≪독립군≫들은 오는 8월 14일 충북 옥천에서 모여 1주년 행사를 갖는다. 이날 밤에는 옥천 야외 가설극장에서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이자 독립영화감독인 황철민 씨가 지난 7개월 동안 현지에서 제작한 1시간 45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 ≪옥천전투≫ 시사회도 열린다. 베를린영화제 등 국제영화제에 수차례 초청되는 등 한국독립영화의 1세대로 평가받는 황씨의 이 영화는 오는 11월 부산영화제에도 출품될 예정이다.

정지환 기자 jhjeong@digitalmal.com
오마이뉴스 2001/08/04





조선일보 구독 중지 운동 지침

민주노총 지침

1. 취지

조선일보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이 있을 때마다 이를 왜곡 허위보도하며 노동자 탄압에 앞장서 왔다. 조선일보는 올해 6.12 민주노총 연대파업에 대해서도 이 가뭄에 웬 연대파업이냐며 되풀이해서 파업을 매도하고, 일반 국민과 노동자들끼리 대립하도록 조장해 노동자들을 고립시키고, 고임금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여 외국자본을 내쫓고 경제를 망치려 한다며 경찰병력으로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엄중 처벌하라고 자본의 나팔수 노릇을 해왔다.

조선일보는 파업에 대한 왜곡허위보도 뿐 아니라 80년 광주학살 당시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죄 없는 광주시민을 학살한 신군부를 옹호했으며, 일제시대에는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며 친일언론 노릇을 해왔다. 더구나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엄청난 세금을 포탈하고도 반성은커녕 거꾸로 언론탄압이라며 세금도둑임을 부정하고 있다.

물론 왜곡편파허위 보도를 일삼는 게 조선일보 만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악의에 찬 보도를 일삼고 전체 신문의 왜곡보도 분위기를 선도하는 조선일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만 한다. 중요한 생존권 투쟁 때마다 왜곡보도를 일삼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에 강력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수언론 가운데서도 가장 악의에 찬 왜곡 허위 편파보도를 일삼는 조선일보에 대해 모든 조합원의 힘으로 강력히 대응해 허위 왜곡보도를 뿌리뽑아야 한다.

하지만 조선일보에 대한 대응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끈질기게 추진해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모든 조직은 비상한 각오와 끈질긴 자세로 밀고 나가야 한다.

2.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과 언론개혁운동 적극 참여 방침

1) 6.12 총력투쟁을 전후한 (조선일보 뿐 아니라) 모든 언론보도에 대해 해당조직은 6월 안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이후 왜곡허위 보도에 대해서도 바로 중재를 신청한다. (중재신청은 보도 후 한 달 안에만 가능함. 단위노조가 언론중재 신청을 할 때 어려운 점은 연맹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할 것) 악의에 찬 보도에 대해서는 총연맹과 협의를 거쳐 민형사상 소송를 제기한다. (언론중재 신청서 양식 덧붙임)

2) 6월29일로 예정된 신문개혁 국민행동 주최 신문개혁 선언자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언론개혁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3. 조선일보 구독 중지와 거부운동 방침

1) 총연맹은 6월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선일보 구독중지 운동 방침을 안팎에 선포하고, 6월26일 서울 조선일보 본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왜곡 편파보도에 강력히 항의한다.

2) 6월27일부터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산별노조 및 지부와 지회, 단위노조는 조선일보 구독을 중단하고, 구독중지 통보서를 조선일보 해당지국과 조선일보 본사에 팩스로 보내며, 이 통보서를 연맹에서 모아 총연맹으로 집중한다.(통보서 양식은 덧붙임. 추후 선전물처럼 활용할 수 있는 더 모양 있는 통보서를 보내드릴 때까지는 이 양식을 사용할 것) 각급 조직은 각급 회의와 의결단위에서 조선일보 구독 중단을 결의해나간다. 총연맹은 우선 6월말까지 연맹, 지역본부의 구독 중지 통보 현황을 집계 발표하고, 7월10일까지 단위노조 구독 중지 통보 현황을 집계해 발표한다.

3) 6월28일부터는 모든 조합원과 가족, 이웃, 친인척의 조선일보 구독 중지 운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구독 중지 통보서 모으기 운동을 전개해 이를 적절한 기간 별로 공개해 효과를 높인다.

4) 각급 조직은 각종 집회와 행사 때마다 왜곡허위편파 보도를 일삼는 조선일보 구독중단 운동을 적극 홍보한다.

5) 모든 단위노조는 노사협의회에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선일보 구독 중지≫를 정식안건으로 요구해서, 회사도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실종시키는 조선일보를 구독 중단하도록 노력한다.

6) 이후 민주노총 조합원 뿐 아니라 각계각층으로 조선일보 구독중지운동을 확대해나간다. 각급 조직과 노조 사무실, 조합원 집집마다 현관이나 대문 앞에 ≪조선일보 구독중단 통보서≫ 붙이기 운동을 벌여나간다.

7) 민주노총 모든 조직은 조선일보의 모든 취재에 응하지 않고 투고나 기고를 하지 않으며, 사무실 출입도 허용하지 않으며, 왜곡편파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해당 기자와 편집국장, 언론사에 e-mail,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강력히 항의한다.

8) 총연맹이 추후 마련하는 별도의 방침에 따라 왜곡편파허위 보도를 일삼는 조선일보에 항의하는 사이버 시위를 전개한다.







공공연맹, 조선 구독거부 선봉대 2백명 결성

≪피서가서도 ≪조선≫거부운동 하겠다≫

≪파업≫과 ≪생산력 및 경제활성화≫는 반비례라는 언론의 보도 태도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집단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언론투쟁에 나서지는 않았던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

이들이 지난 달 26일 조선일보 구독중단운동을 선언한 뒤 실제 20일 만인 7월 16일 59개 사업장에서 202부 구독을 중단하고, 연이어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들이 구독중단 선언을 발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늘 조선일보사 길 건너편에서는 민주노총산하 공공연맹이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조합원 구독거부운동을 끈질기게 펼쳐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왜곡보도신문이 ≪언론탄압≫운운하는 건최대의 희극

이들은 ≪6·12 연대파업에서 노선일보가 노사관계를 왜곡 보도함으로써 건전한 노사관계의 형성을 방해했다.≫며 ≪천문학적인 금액의 세금포탈혐의에 따른 검찰조사에 대해 ≪언론탄압≫운운하는 조선일보의 작태는 21세기 한국사회 최대의 희극이다≫고 말했다.

이날집회에서 이들은 ≪조선일보 구독거부 선봉대 200여명≫을 조직해 8월31일까지 1차적으로 구독거부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피서지를 십분활용해 조선일보 구독거부동참 운동 할 터

이들은 8월 바다, 산, 강등의 각종피서지, 재래시장 등을 찾아다니며 조선일보 구독거부 운동동참을 촉구하고, ≪조선일보 끊는 방법≫이란 글자가 새겨진 부채 10.000개를 시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또, 전국 지하철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대자보를 부착하고, 공공연맹산하 고속도로 휴게소, 항공사 등 직접 신문을 판매하거나 나누어주는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판매금지와 배부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완전 오보도 정정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조선일보고소할 수밖에

한편, 공공연맹은 오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방상훈 조선일보사장 등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요지는 지난 6월 19일자 조선일보 3면 ≪노사 새로 시작하자≫라는 제하의 기획연재 기사에서 ≪12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연맹이 ≪파업전야제≫를 가진 서울역 앞은 온통 쓰레기로 뒤덮여 버리기도 했다≫는 오보를 냄으로써 공공연맹 조합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

이들은 ≪그날 집회가 끝난후 자발적으로 전단지들을 모았으며, 공공연맹에서 30만원을 지불한 용역을 통해 청소를 했다≫면서 청소용역 지급증 사본을 첨부하기도 했다.

또 6월 20일 문제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했지만 정정보도를 한 다른 언론사들과 달리 조선일보는 ≪직접현장에 나가지 않고 남대문 경찰서 출입기자에게 확인했는데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잘못을 시인하고도 정정보도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조종사, 한국전력기술노조는 중앙, 동아도 절독

오늘까지 집계에 의하면 공공연맹만 147부가 구독중단된 상태다. 특히 공공연맹산하 대한항공조종사, 한국전력기술노조는 조선일보외 중앙31부, 동아24부를 절독해 눈길을 끈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보건의료노조가, 20일에는 민주택시연맹이, 24일에는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가 조선일보구독거부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조선일보 구독중단 운동방침 특별결의문≫을 통해 절독외에도 △사업장 조선일보 기자출입금지 및 취재, 인터뷰 사절, △노사협의회를 통한 조선일보 광고게재금지, △왜곡·편파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신청 및 민형사소송방침 등을 세부 행동지침으로 정하기도 했다.

서유상 기자 swpress1@hanmail.net







군중운동으로 확산

≪우리는 조선일보 입사를 거부한다≫

전국신문방송학과 학생회장단 11인 신문개혁 촉구



대학가가 순풍에 돛 단 듯 연이어 ≪조선일보 반대와 언론개혁≫ 실천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달 7월 18일 각 대학내 ≪조선일보 반대 모임≫과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 1차로 ≪조선일보 구독거부 대학생 8031인 선언≫을 한데 이어 지난 7일은 동아일보 김병관 전명예회장, 조선일보 방우영 명예회장이 재단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 연대 학생회장단 102명이 2차선언문을 통해 ≪부도덕한 탈세자는 상아탑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오늘(8)은 전국신문방송학과(신방과) 학생회장단 11인이 서울 한국언론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차 조선일보 반대와 신문개혁 촉구 대학생 선언을 했다.

서울지역 대학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에서 동아대 신방과 학생회장 이상현씨는 선언문을 통해 ≪오늘은 고발된 비리사주가 소환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전국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을 대표하는 우리는 족벌체제를 형성하고 천문학적 규모의 비리까지 저지른 언론사를 그대로 두고는 한국언론의 미래는 없으며 동시에 사회개혁도 없다는 것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미래의 언론인으로서 ≪회생불능의 중환자 상태에 있는 조선일보 입사를 거부한다.≫고 밝히고 ≪전국 신방과 학생들이 조선일보를 보지 않는것은 물론 인력재생산 구도를 과감히 끊는 운동에 동참할 것이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앞으로 각 대학내 조선일보 반대모임, 전대기련 등 언론개혁에 뜻을 둔 단체와 연대해 △전국 신문방송학과 학생 전원 조선일보 입사거부 선언운동 확대 △2학기 각 대학 학술제 조선일보 반대와 신문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개최 △정기간행물법 개정촉구 운동동참 등을 통해 대학사회전체에 조선일보 반대와 언론개혁 열풍을 주도할 계획이다.

한편, 2학기 개강과 함께 대학사회 전체구성원이 언론개혁 화두로 들끓고,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들의 선언이 연속성을 가져야하고, 대학내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단체나 이미 조직된 단체들이 자치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은 물론 조선일보 반대와 언론개혁을 위한 범 대학생조직이 발족돼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정미 기자 josuna@unews.co.kr





대학가 조선일보 반대 열풍 전국적 확산

≪전대기련≫, ≪**우리모두**≫ 비롯 단일조직결성 채비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의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 등 조선일보반대와 아울러 한국사회언론개혁운동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적극적 행동실천을 선포하고 나섰다.

전국대학생 8천여명 조선일보 반대 서명

오늘(18) 고려대, 서울대, 부산대, 연세대, 전북대내 조선일보 반대모임,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 청년우리모두(조선일보반대사이트)는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에서 신문개혁촉구와 조선일보 반대를 위한 전국 대학생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에 8천여명 대학생 공동명의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함께 제2의 한국 민주화운동이라 일컬어지는 언론개혁 운동속에 전국대학신문기자 연합이 지난 학기 전국9개 도시에서 조선일보 반대 행동의 날을 개최한 이후 일반대학생들이 조직적으로 나선 건 처음이다.

이들은 이번 선언운동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반성은커녕 여론을 호도하고 자신들에 대한 비판에 오히려 히스테리컬하게 반응하는 신문이하의 신문 조선일보를 반대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략적 시도를 배격하고 ≪신문개혁≫의 대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언론사주의 노예로 전락한 현직언론인들은각성하라≫

또한 전대기련과 각대학생모임이 받은 9개도시 63개 대학의 8173명 서명자 명의의 전국대학생 선언서에서 ≪우리가 족벌수구언론과의 전쟁을 시도한 절박한 이유는 기득권 세력의 이익만 대변하고, 한국사회를 광신적 반공주의 시대로 복귀시키려는 사상공세와 냉전과 분단을 영속시키려는 수작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었다≫ 며 ≪**그 전쟁의 일차적 대상인 조선일보의 개혁이 곧 신문개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또 ≪천문학적인 세금탈세와 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당당한 족벌수구언론의 파렴치함 뒤에는 언론사주의 노예로 전락한 현직 언론인들과 지식인들의 굴종의식이 있다.≫**며 현직언론인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격려사를 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최민희사무총장은 ≪**학생운동이 사회개혁의 기폭제임에도** 그동안 한국사회개혁의 전제인 언론개혁운동에 소홀히 해서 아쉬웠다≫며 ≪지금 언론개혁운동은 단순한 언론운동이 아니라 기득권자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하는 족벌언론과 족벌언론뒤에 웅크리고 한국사회의 개혁을 반대하는 소수 기득권자와의 싸움이다.≫**며 학생들이 언론개혁에 앞장서주기를 당부했다.**

이들은 앞으로 △전국에 있는 대학의 각 기관에서 구독하는 ≪조선일보≫절독운동, △**릴레이** 1인시위, △**전국적인 규모의 ≪조선일보반대 전국대학생 조직체≫ 및 매체건설** △8월1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규모 집회 △현재 6개 대학 조직에서 나아가 각 대학의 조선일보반대 언론개혁 모임건설 견인등의 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언론개혁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기자회견후 이들은 조선일보까지 거리행진을 하고, 연세대 차기현군이 항의서한을 조선일보 독자투고 담당이라고 밝힌 박용근기자에게 전달했다.

≪언론자유는 사주의 자유도 탈세의 자유도 아니다≫

≪주식회사 조선일보와 그 종사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이들은 ≪초등학생도 아는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명제가 이리 뒤틀리고 저리 왜곡되어 ≪남이 지은 죄는 반드시 처벌하되 내가 지은 죄를 거론하는 것은 탄압≫이라는 해괴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곳이 조선일보≫다≫며 ≪조선일보 기자들이 언론자유수호를 외치는 지금은 역사상 그 어느때보다 언론의 자유가 만개하고 있음을 조선일보의 지면을 통해 확인한다. 그들은 밤의 대통령을 엄호하는 슬픈 삐에로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자유≫이지 ≪사주의 자유≫가 아니고, **≪말할 권리≫이지 ≪탈세의 권리≫가 아니다.** 조선일보의 젊은 기자들은 ≪편집권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라≫ 고 말했다.

≪대학가 조선반대모임으로 언론개혁 폭풍전야≫

한편, 현재 조선일보 반대를 위한 대학생모임을 꾸리고 대내외적인 활동에 나선 대학은 고려대, 서울대, 부산대, 연세대, 전북대, 조선대 등의 대학이다. 앞으로 이 대학들을 중심으로 다른 대학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연세대에서 조선일보 반대 모임(조반연, www.freechal.com/cby)이 꾸려진 계기가 된 건 수업중 교수와의 논쟁끝이다.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차기현(현재 조반연에서 만드는 ≪조선바보≫편집장, 신문방송 3))씨는 ≪교수가 ≪신문역사≫라는 강의도중 조선일보가 항일투쟁을 하고 민족지라는 등의 말을 했다. 이에 발끈한 몇몇의 학생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항의하는 와중에 나와 뜻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모임이 만들어 졌다≫고 전했다. 이들은 5월말경 연세대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조선바보≫라는 타블로이드판 4면짜리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현재 커뮤니티를 통해 가입한 회원수는 180여명이다.

서울대는 ≪관악조선일보반대 범서울대인모임≫(관악조반모)으로 4월경 안티조선 사이트 우리모두에서 활동하던 서울대 학생 5명이 기숙사에서 결의를 맺고 ≪관악개떼≫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르다가 최근≪관악조반모≫**로 개명했다.**

고려대도 지난주 연세대 학생(조반연)들의 제안으로 우리모두에서 활동하던 고대생들과 고대 내에 있던 ≪까탈≫, ≪**생활도서관≫ 등의 조선일보반대에 뜻을 같이하는 동아리들이 모여 연합체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이들의 첫 활동은 서명운동. 고려대 모임대표인 강연준군은 ≪**서명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언론사 세무조사와 언론개혁을 대부분 지지하고 있다고 느끼게 됐다.** 방중이라도 많이 동참했고, 희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의 경우 월간 인물과 사상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 중 전북대생들이 모여 대자보로 회원을 모으고 모임을 발족했다.

박정미 기자 josuna@unews.co.kr
2001-07-18 17:35:00





주식회사 조선일보와 그 종사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우리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은 미래의 주인으로서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염원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신문개혁 촉구와 조선일보 반대를 위한 전국 대학생 선언≫에 동참하였다. 자신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을 항상 ≪익명의 뒤에 숨어있는, 특정 정치세력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로 부당하게 매도해온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번 기회에 소속을 밝히며 각자의 실명을 걸고 본 서한을 보내게 되었으니 귀담아 들어주기 바란다.

우리는 당신들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탈법 · 탈루 세액을 접하며 사회를 비판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스스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이런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을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다. 초등학생도 아는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단순한 명제가 이리 뒤틀리고 저리 왜곡되어 ≪남이 지은 죄는 반드시 처벌하되 내가 지은 죄를 거론하는 것은 탄압≫이라는 해괴한 모습으로 바뀌어 버린 곳이 있으니 바로 당신들이 매일 만들어내고 있는 ≪조선일보≫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비판언론을 압살하려는 권력의 음모≫ 운운하며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는 기자단 명의 성명서이다. 비장함마저 엿보이는 당신들의 언론자유수호투쟁 선포를 보며 우리는 묻고자 한다. 과연,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정권을 비판할 수 있었던 때가 우리 역사에 있었다면 그게 언제인가. 우리는 묻고자 한다. 우리의 선배들이 최소한의 언론자유마저 빼앗긴 채 목숨걸고 도서관에서 줄을 타며 독재정권을 향해 ≪민주주의≫를 외칠 때 당신들 ≪조선일보≫는 어디에 있었는가.

독재자에게 아부하고 광주시민을 폭도로 몰았던 ≪조선일보≫가 ≪언론자유수호투쟁≫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서 있는 기막힌 현실 앞에서, 결국은 당신들의 ≪밤의 대통령≫을 엄호하려 한 목소리로 합창하는 삐에로의 슬픈 얼굴을 본다. 또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언론의 자유가 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조선일보≫의 지면을 통해서 확인한다. 하기에 당신들이 ≪언론의 자유≫를 말할 때, 되려 우리는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 묻고자 한다. 공적인 매체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상을 조직적으로 변호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당신들이 그토록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디에나 있기 마련인 젊은이의 싱싱한 ≪지성≫과 ≪의기≫가 ≪조선일보≫에 만은 없는가라는 씁쓸한 조소를 머금게 된다. 우리는 ≪조선일보≫의 젊은 기자들에게 촉구한다. 이제라도 ≪편집권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라. ≪조선일보≫가 스스로 쇄신하지 않는다면 다가올 우리들의 시대에는 결국 ≪조선일보≫가 기피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 경고한다.

또한 당신들이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또다시 한나라당과 파트너가 되어 ≪지역감정≫과 ≪색깔론≫으로 본질을 흐리려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 우리는 묻고자 한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바로 지금 그런 ≪오래된≫ 분탕질을 성토하는 목소리들이 정녕 들리지 않는가? ≪조선일보≫는 과거에 대해서 국민앞에 사죄하고 사주 일개인의 신문이 아닌 국민의 신문으로 거듭나는 ≪정공법≫을 취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충고를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진정한 ≪언론자유≫를 위해서라면 ≪조선일보≫보다 앞장서서 싸울 것임을 이 기회를 빌어 천명하는 바이다. 이런 우리가 ≪탄압을 받고 있다≫ 주장하는 당신들에게 되려 각성을 촉구하는 까닭은 단순하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자유≫이지 ≪사주의 자유≫가 아니기 때문이며, 언론의 자유는 ≪말할 권리≫이지 ≪탈세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 이렇게 상식적으로 단순한 진실을 말하는 우리를 또다시 ≪홍위병≫으로 몰아간다면 ≪조선일보≫는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는 바이다.

신문개혁 촉구와 조선일보 반대를 위한 전국 대학생 선언
참가자 일동
2001년 7월 18일







≪부도덕한 탈세자는 상아탑을 떠나라≫

고대 · 연대 학생대표102인 김병관, 방우영 사퇴 촉구



≪몇 백억의 세금을 포탈한 최고경영자가 버젓이 학교운영의 최고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현황이 과연 건전한 사학의 모습인가? 이 부정비리 인사들은 자신들의 행적을 반성하고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 그 운영의 요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라.≫

언론사 세무조사로 인한 언론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과 조선일보 방우영 명예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고려대, 연세대 학생 대표자들이 이들의 정당한 법집행과 이사장직 사퇴를 촉구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늘 고려대 부총학생회장 정우성(97)씨와 연세대 총학생회장 장정규(97)씨는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양대 학과, 동아리, 단과대, 총학생회등의 학생대표자 102인이 선언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신문개혁 촉구와 조선일보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사립대학의 학교운영이 재단 이사회, 그 중에서도 이사장의 직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들 세무비리의 총 책임자들이 아직도 학교 이사장 직책을 맡고 있는 상황은 우리 나라 대학교육의 현주소를 역설해 주고 있다≫며 ≪그들이 운영하는 신문사가 그만큼의 부정부패를 저지른 현실에서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신뢰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양 이사장이 언론사를 통해 ≪기여입학제 도입≫을 위한 여론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며 ≪탈세자와 교육자의 자질도 구분하지 못하는 학교가 기여입학제 도입과 그 대가로 대대손손 입학증을 내주어 세계 100위권 대학규모의 자금이 확보된다고 과연 학교가 발전할 것인가?≫라며 꼬집었다.

이들은 앞으로 학내 조선일보 반대모임 단체들과 연대해 학생들은 물론 대학가 지역시민을 중심으로 ≪조선일보 구독중지≫를 위한 여론화작업과, 조선일보반대를 위한 전국대학생 모임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양 대학학생들은 지난달부터 조선일보사 앞에서 ≪조선일보 반대≫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정미 기자 josuna@unews.co.kr
2001-08-07 19:57:00





광복절, 태극기 아래 비맞으며 찢어진 민족지(?)

조선일보 반대 전국대학생 2차 행동의 날



전국의 대학언론인이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조선일보 반대를 위한 전국 대학생 2차 행동의 날≫을 조선일보 사옥 맞은 편에서 진행했다. 이는 지난 5월 28일 있었던 1차 행동의 날에 이어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하 전대기련), 전국대학신문방송학과 연석회의(준, 이하 신방과 연석회의), 전국대학생 조선일보 반대모임을 비롯한 대학언론단체들이 여전히 계속되는 친일행각, 왜곡 편파보도를 일삼는 조선일보를 규탄하는 두번째 행동의 날이다.

40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 사회를 맡은 정건영(한국외대 신방과 회장)학생은 ≪민족을 등진 반역 조선일보를 근절하기 위해 이 자리를 가지게 되었다≫라며 행사취지를 설명한 후, 묵념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집회를 시작했다.

이날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 공동대표 김동민 교수는 연대사를 통해 ≪거짓말쟁이 조선일보는 수구세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백만 학도는 민주주의 왜곡, 민족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신방과 연석회의 고은상군은 지금까지의 안티 조선일보 성과 보고를 통해 ≪역사로 증명된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를 선전과 투쟁을 통해 대중화하고 시대요구에 상응하는 활동을 벌려나가야 할 것≫을 강변하기도 했다.

전대기련 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지부 동부지부 백정락(한양대 편집국장) 지부장은 무대에 조선일보 한부를 가지고 나와 던져버리면서 ≪이번 민족통일대축전과 관련해 조·중·동에는 단 한줄의 기사도 없었다≫며 분노하기도 했다.

한편, 부산울산지역 대학신문 기자들은 ≪조선일보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보수적인 시각을 젊은 세대들이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집체극을 선보이며 주위의 관심을 끌었다.

이후 각 언론단체 대표자들은 ≪조선일보 규탄≫ 선언문 낭독을 통해 이번 행동의 날을 계기로 실천적 활동을 가져갈 것을 다짐하며 ≪역사왜곡과 족벌언론 행각을 스스로 반성하고 각성할 때까지 학내외에서 더욱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며 조선일보는 역사와 민족앞에 참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행사 중 즉석 육행시(조선일보 반대)를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 신라대학보사 강수경(01)양의 내용을 소개한다.

조 조선일보야
선 선전 똑바로 해라
일 일일이 설명해 줘야 되나
보 보도 똑바로 해라
반 반통일 수구세력 니!
대 대가리 확!

전대기련 공동기자단 unip2000@hanmail.net
2001-08-15 19:14:00





조선일보 앞 민족고대 1인시위 7월분 총화서입니다.

조선일보앞 민족고대 1인시위는 8월 3일 현재 11일째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24일(화) 조선일보 앞 민족고대 1인시위 4일째

≪방학 중에 특집 세미나로 조선일보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면서 조선일보의 만행에 대한 규탄의지는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반민족적, 매국의 행각은 개개별의 단편적인 사안이 아닌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참가자≫ 동아리 연합 99학번 조기훈

1인 시위에 대한 참가 열기가 높아지는 와중에 동아리 연합에서 한번 더 시위에 참가하고 싶다고 하여서 이틀 연속으로 1인시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연합에서 힘내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졸업을 앞두신 선배분들도 직접 시위현장인 광화문 조선일보 본사 정문까지 오셔서 후배의 결의를 높여주셨습니다.

그간 여러 시민단체의 꾸준한 투쟁으로 국민적 여론은 이제 조선일보 규탄의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선일보에 입사 시험을 보는 것이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고 있고 실제로 이번 조선일보에 입사응시를 한 사람은 600명밖에 되지 않고 결시율도 40%나 된다고 합니다. 동아일보에 1500명, 중앙일보에 700명이 지원한 것과 비교해보면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의 개혁의 문제는 단지 하나의 언론사를 바로잡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모순지점을 고쳐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더 높은 결의와 책임감으로 이번기회야 말로 반통일, 반민주 언론기관 조선일보를 격파해냅시다.

≪**왜 불난 집에 부채질이야**! 만만한게 조선일보야?! 너 넨 양심도 없어?≫

경비 아저씨의 가시돋힌 말이었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이냐≫는 그 분의 말이 크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 거만하고 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조선일보의 자만심은 온데간데없이, 그들은 지금 스스로의 생존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천 전지역에서 주민들이 조선일보 구독거부 운동을 벌여내어 조선일보로부터의 해방구를 건설해내고, 민주노조에서 합심해서 또한 조선일보의 구독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언론사를 책임져나갈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지식인들이 조선일보를 거부하고 나서기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학생들은 뭘 모르고 하는 것이지! 시간은 진실을 증명해줄 것이다!≫**라고 말했던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진실을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역사는 드디어 심판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50여년의 뒤틀린 역사를 거부하고 민중들은 역사 발전의 정방향은 어디인지 깨닫게된 것입니다.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발악하는 조선일보를 기어이 개혁하려고하는 움직임은 이러한 역사 발전의 과정에 서있는 정당하고 당위적인 역사의 물줄기입니다. 이를 거스르려는 조선일보와 보수반동세력들의 발악은 그저 ≪시대착오적인 망동≫일 뿐입니다.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 바로 길건너 편에서는 공공연맹에서 주최하는 ≪조선일보 구독거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있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던 1인 시위를 단지 거슬린 눈으로 보았던 조선일보 관계자들은 길 건너편에서의 시위를 보자 이제는 아주 질려버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에서 오늘 우리가 한 일에 뿌듯해하며 공공연맹에서 나눠준 티셔츠를 손에 들고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7월 26일(목) 조선일보 앞 민족고대 1인시위 5일째

≪조선일보 반대시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의 지지가 엄청나다는 소식을 듣고 들뜨는 마음에 1인 시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를 많이 드신 몇몇의 어른분들을 제외하고는 조선일보 앞을 지나가는 대부분의 행인들의 태도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참가자≫ 문과대학 00학번 유지훈, 01학번 조규화

즐겁게 시위를 진행하던 도중에 하나의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적대적이고 날카롭게 신경을 곤두세운 경비아저씨였습니다.

7월 27일(금) 조선일보 앞 민족고대 1인시위 6일째

≪민족의 반쪽을 적으로 돌리고,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위해서 외세와 손잡고 민족을 팔아먹은 조선일보가 민족지임을 자처하는 현실은 분단민족의 비극을 가장 첨예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중이 일궈낸 언론개혁의 소중한 기회를 져버리지 말고 진정한 민족지로 태어난다면 그제서야 한국의 역사는 바로 설 수있을 것이다.≫

≪참가자≫ 생명환경대학 01학번 이용호





민족고대 1인시위는 이미 조선일보의 경계 대상이 되었다. 누가 조선일보의 경비원이 아니랄까봐 이미 나는 그들에게 1인시위의 ≪주동자≫, ≪**조종자≫로 불려지며 매일매일의 활동이 감시되고 있었기에 조선일보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을 모두 씻어줄 반가운 얼굴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1인 시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중이라는 오마이뉴스의 기자가 와있었던 것이다. 그는 지난 일주일간 전국을 돌면서 안티조선일보 투쟁을 벌여낸 안티조선 우리모두 동지들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힘차게 시작된 그와의 인터뷰에 단순간에 기분이 좋아짐을 느끼면서 시위는 시작되었다. 오마이뉴스의 기자와는 조선일보 반대운동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운동 방향은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와의 인터뷰 중에서 1인 시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칭찬할만한 일이지만 그 시작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냐는 따끔한 지적이 있었다. 순간순간 변화하는 대중의 정서를 정확히 읽어내고 그에 걸맞는 투쟁을 벌여냈느냐를 고민해볼 때 분명히 이번 조선일보 1인 시위는 조금은 뒤늦게 시작된 것이 분명하므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대신에 보다 많은 대중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1인시위의 장점을 살려 여론을 정확히 읽어내고 앞으로 조선일보 구독거부운동과 조선일보 반대서명운동을 성황리에 벌여내어 사회의 암과 같은 조선일보를 뿌리뽑겠다고 다짐하며 인터뷰를 마쳤고 오늘 1인 시위는 그렇게 마감하며 마침 방한한 파월에게 계란하나라도 던지겠다는 심정으로 외교통상부 공관앞으로 향했고 결국 닭장차 신세를 졌다.

7월 30일(월) 조선일보 앞 민족고대 1인시위 7일째

조선일보가 위기의식을 느끼며 1인시위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다다른 하루였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1인 시위자에게 조금의 위협이라도 가하고 싶은 심정이었는지 조선일보 경비원이 그 지역 담당 정보과 형사에게 신고를 한 것이다.

보안과 형사가 도착하자 1인 시위 참가단에게 뭔가 불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심정이었는지 조선일보 경비원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기에 형사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고대 가방을 맨 학생이 다가와서 우리학교 학생 좋은 일 하는데 힘내라고 캔 음료수를 하나 손에 쥐어주고 갔다. 형사와 경비원들의 얼굴은 이내 일그러졌다. 그후 비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힘들게 수고한다며 쏟아지는 박수 갈채에 당혹스러웠는지 형사는 도착한지 5분도 안되어서 조선일보 건물 안으로 들어가버렸다.

하루하루 승리의 기운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론은 우리의 승리를 예감한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몰아쳐서 통일조국 건설의 한길로 달려가자.

7월 31일(화) 조선일보 앞 민족고대 1인시위 8일째

≪참가자≫ 정경대학 00학번 채종원, 김정환, 01학번 김태형, 99학번 신주원

비가 내렸다. 미처 참가자들이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시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는 없었다. 비를 맞으며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참가자들을 본 한 분이 자신이 쓰고 가던 우산을 건네주고 당신께서는 비를 맞으며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갔다. 너무나도 큰 고마움을 느끼며 이 감동을 돌아가서 꼭 동무들에게 전하리라 마음먹었다.

물론 이날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들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맹목적으로 조선일보를 옹호하고 참가자를 꾸짖는 몇몇의 할아버지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일텐데 사전에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은 말만을 늘어놓는다는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된다.

≪**지금 이 싸움의 구도는 조선일보와 김대중정권의 싸움이다**. 그리고 조선일보반대시위를 하는 학생들은 김대중정부의 하수인이다. 옛날 학생운동의 선배들은 독재정권에 대항해서 용감한 싸움을 했었는데 지금 학생들은 정권의 사주를 받아서 연약한 언론사나 괴롭히는 몹쓸 짓을 하고 있다. 그럴 바에는 북한 동포 돕기운동이나 수재민 돕기나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이 사람들의 말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말이다. ≪**하수인**≫, ≪**사주**≫, ≪**선배들은** 안그랬다≫, ≪그럴바에 딴일이나 해라≫ 너무도 똑같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래기 마련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정권에 도움을 준다는 논리도 아니고, 언제나 정권만을 공격해야하는데 왜 다른 곳을 공격하느냐는 말도 안되는 조선일보식 논리와 학생들은 정권의 사주를 받은 하수인이라는 근거없는 조선일보식 추측과 그럴바엔 다른 좋은 일을 하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은 정의롭고 선량한 사람인냥 행세하는 조선일보씩 깔끔한 마무리가 이들에게 철저히 학습되어 있다. 과연 열독률 1위라고 자랑할만하다.

이 사람들에게는 학생들이 조선일보를 규탄하는 것이 김대중과 조선일보의 싸움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매국 행위를 역사청산의 차원에서 단죄하는 것이라는 것을 백번 말해도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그들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수많은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숨어있는 그 전제들을 찾아내 부수어주는 것은 너무도 힘들다. 적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학생들이 더욱더 단련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느낀다.

그리고 또한 할아버지들과 생각이 같을지언정 할아버지들에게 어떠한 직접적 이익도 가져다주지 않는 조선일보일텐데 그렇게 필사적으로 감싸고도는 것을 보면 조선일보의 그 마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이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헤쳐야 하겠다는 과제를 남기고 오늘의 시위를 마친다.

조선일보 앞 민족고대 1인시위 주체 이상렬
2001/08/04 (00:06)





서울서부지역통일연대 조선일보 반대 1인시위 총화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부지역 통일연대



지난주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되었던 ≪서울서부지역 통일연대≫ 차원에서 대표자 1인시위를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단체들이 순번을 정해서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신촌지하철역 퇴근시간을 이용해서 지역차원에서 조선일보 반대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위는 지금시기 확산되고 있는 조선일보 반대여론을 보다 확산시켜내고 지역차원에서 반통일 매문지 조선일보에 대한 정치적 압박과 규탄을 서부지역에서 실질화 해내기 위해서입니다.

△ 1인시위 첫날 7월 30일 서울서부통일연대 집행위원장 이상훈씨(서부청년회 준비위원장)가 맡아서 해 주셨습니다.

△ 둘째날 8월 1일은 서울서부통일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는 우득종(서부지역 노점상연합회 지역장님)님께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 셋째날 8월 3일은 서부지역 총학생회연합 이경민 의장이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그 투쟁의 총화입니다.

비를 피해 지하철 역안으로 들어왔습니다. 6시!

퇴근시간이 시작되어서 그런지 많은 인파들이 출구를 향해 오고가곤 합니다.

한동안 무심코 지나가는 인파들을 바라보면서 심호흡을 해 봅니다.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나의 이 기이한(?) 행동에 대해서 행인들이 바라보는 정치적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반사적으로 드는 대중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이 스치고 지나칩니다.**

사실(　)을 사실(　)로 만드는 탁월한 재주로 분단유지의 도구로, 지배정권이 항상 곁에두며 통치기구의 하나로 이른바 ≪제4의 권력≫으로 일컬었던 그들!

그들을 발가벗긴 모습은 그들이 민중들을 유린하고 사기를 쳐왔던 세월만큼이나 썩어있었고 그들의 냄새는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그들은 우습게도 정부의 언론탄압이라는 단어를 서슴지 않고 써댔습니다.

그들은 또한 언제나 그랬듯이 반통일세력들과 연대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한을 앞둔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라며 색깔론을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역한 냄새가 온 사회를 뒤흔들며 이제는 국민들의 코까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나가다 제가 들고 서있는 문구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민들을 보면서 앞선 두려움은 자신감으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주치는 눈빛 하나하나속에 담긴 그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의 1인시위를 마쳤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부지역 통일연대
2001/08/03 (03:18)





영화인도 ≪안티조선≫ 동참

30개 영화단체 12일 ≪조선반대영화인선언≫
정지영 · 이창동감독, 배우 명계남씨등 합류



영화단체와 영화인, 연극영화학과 대학생 등이 대거 '조선일보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2시 남산 감독협회 시사실에서 '조선일보 반대를 위한 영화인 선언'을 갖고 옥천지역의 조선일보 반대운동을 담은 황철민 세종대 교수의 다큐멘터리 '옥천전투'를 상영했다.

이날 선언에는 독립영화협회 · 문화학교 서울 · 서울영상집단 · 푸른영상 등 30여개의 영화관련단체, 정지영 · 장윤현 · 이창동 · 김홍준 등 영화감독, 명계남 · 권해효 등 영화배우, 김소영 · 이용관 · 이용배 · 이충직 · 황철민 등 교수를 비롯해 평론가 제작자 스텝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대구단편영화제, 인디포럼 작가회의, 인디다큐페스티발, 서울퀴어영화제조직위, 시민영상제 등의 영화제도 합류했다.

이들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권력집단의 곡필과 만행을 규탄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조선일보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왜곡보도로 언론권력을 유지하려는데 앞장서 왔다"고 지적하고 △조선일보 구독 및 기고 · 인터뷰 거부 △언론개혁이 굴곡 · 좌절되지 않도록 감시 △수구언론을 위해 매명행위를 하는 일부 인사에 대한 경고 △정간법 개정촉구 등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영화의 호황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적으로 과도한 광고를 책정하여 신문사에 막대한 자금을 지불하면서 기자들에게 촌지 · 향응 등도 제공해 언론의 부패와 곡필을 조장해온 점"에 대한 모든 영화인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영화인들이 영화문제를 제외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직접 목소리를 내기는 87년 6월항쟁 이후 처음이다. 특히 제작비의 절반이 마케팅에 쓰일 정도로 언론홍보의 비중이 커진 영화계가 특정 언론을 반대하고 나서기는 쉽지 않아 그 파장도 크다.

이와 관련, 한 참여자는 "그만큼 조선일보가 주는 폐해가 심각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철민 교수는 이번 선언을 '의병궐기'에 비유하며 "나라의 걸림돌이 될 만한 사안에 앞뒤를 따지면 아무 것도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선언에 동조는 하지만 언론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작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장의 사람들은 공개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비영화인인 전국연극영화학과 학생회협의회도 같은 날 '조선일보 반대선언'에 동참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권력집단의 곡필과 만행을 규탄하며

- 조선일보 반대 영화인선언

1987년 6월항쟁 이후 우리사회는 비록 형식적이긴 하나 민주화의 일정한 진전을 이루어 왔다. 동시에 민주화의 진전을 가로막는 보수 기득층과 그들을 대변하는 보수 일간지들의 현실왜곡에 분노하며 언론개혁 없이는 진정한 민주화가 불가능하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시대적 사명으로 요청되는 언론개혁에 각계 지식인들, 종교인 그리고 대학생 및 여러 사회 단체와 개인들과 함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냈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김대중 정권의 언론사 세무조사는 물론 언론개혁을 위한 순수한 노력은 아니었다. 그러나 조사결과 발표된 언론사들의 탈세액과 탈세방법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만큼 엄청난 규모이며 교묘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 분노를 느끼며, 이번 기회에 언론들의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권력들은 자신들의 탈세에 대한 반성은커녕 정부여당의 언론탄압이라는 망발과 함께 외신을 조작 인용하는 등 왜곡보도를 일삼으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호도하고자 캐캐묵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정부와 개혁적 인사들을 공격하고, 온겨레의 통일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보도행위로 일관하면서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우리 영화인들은 영화제작에 전념하기 앞서 이 음험하고 이기심으로 가득찬 언론권력에 맞서 싸울 결의를 다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곡필과 악론으로 여론을 호도하며 국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언론사들에게 우리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 영화인들은 언론권력 신문들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개혁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 남과 북, 동과 서, 계층간의 갈등들을 부추키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하게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언론사들의 이런 반역사적이며, 수구적인 작태를 뿌리뽑지 않고는 어떠한 공공의 이익도 달성될 수 없음을 결연한 의지로 확인한다. 특히나 일제시대때부터 계속되어온 자신들의 역사적인 과오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만행에 가까운 왜곡보도로 영원한 언론권력을 유지하려는데 앞장서온 조선일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자 한다.

1. 우리는 조선일보를 구독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진심으로 우려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조선일보 구독거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 우리는 조선일보에 글을 기고하거나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3. 우리는 모처럼 무르익는 언론개혁의 형세에서 정부가 외압이나 정치적 계산에 의해 굴곡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4. 우리는 조선일보가 최근 8.15 방북 행사에서 빚어진 지엽적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자신들에 닥친 비판여론을 무마하려는 책동을 중지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5. 동시에 우리는 수구 기득권 언론을 위해 매명 행위를 하는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자 한다.
6. 왜곡된 언론환경을 바로잡기 위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불공정한 신문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의 적극적인 시행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촉구한다.

덧붙여 한국영화의 호황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적으로 과도한 광고비를 책정하여 신문사에 막대한 자금을 지불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모든 영화인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1년 9월

현재 서명자 (가나다 순)

공수창(시나리오 작가), 김동원(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김영진(영화평론가), 김우형(촬영감독), 김윤태(영화감독), 김응택(촬영감독), 김이찬(다큐멘터리 감독), 김소영(영상원 교수), 김현숙(서울산업대 강사), 김홍준(영화감독), 김혜준(영화진흥위원회 정책실장), 권해효(영화배우), 남인영(영화평론가), 명계남(영화배우), 민동현(영화감독), 변영주(영화감독), 심광진(영화감독), 심광현(영상원 원장), 안영진(영화인회의 사무차장), 안해룡(비디오 저널리스트), 양윤모(영화평론가), 염찬희(영화평론가), 유창서(영화인회의 사무국장), 윤인호(영화감독), 윤재우(애니메이션 감독), 원승환(한국독립영화협회 배급팀장), 이두일(EBS PD), 이명인(영화평론가), 이미영(다큐멘터리 감독), 이민용(영화감독), 이상인(영화감독, 용인대 교수), 이승훈(EBS PD), 이영진(씨네 21 기자), 이용관(중앙대학교 교수), 이용배(계원조형예술대학 애니메이션과 교수), 이주영(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차장), 이지상(영화감독), 이창동(영화감독), 이충직(중앙대학교 교수), 이효인(영화평론가), 임창재(영화감독,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원), 장윤현(영화감독), 전승일(애니메이션 감독, 동국대 교수), 정도상(시나리오 작가), 정병각(영화감독), 정지연(영화평론가), 정지영(영화감독), 조범구(영화감독), 조영각(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조종국(조우필름 대표), 조준형(영화인회의 편집실장), 조재홍(다큐멘터리 감독), 주유신(영화평론가), 최인기(프로듀서), 허동우(영화감독), 홍성원(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정책실장), 홍효숙(다큐멘터리 촬영), 황윤(다큐멘터리 감독), 황규덕(영화감독), 황철민(영화감독, 세종대 교수)

<단체 서명>

강릉 씨네마떼끄, 노동자영상사업단 희망, 딴짓영화, 대구독립영화협회, 대전독립영화협회, 문화학교 서울, 부산독립영화인협회, 빨간눈사람, 서울영상집단, 스튜디오 꿈틀, 영상기록 다큐인, 영상창작집단 결, 영화제작소 빛살무늬, 영화제작소 CP16R, 영화진흥위원회 노동조합, 온고을 영화터, 전주단편영화협회, 젊은영화, 지하창작집단 파적, 푸른영상, 한국영화과학생협의회

<영화제>

대구단편영화제, 인디포럼 작가회의, 인디다큐페스티발, 서울퀴어영화제 조직위원회, 시민영상제



백양로에 수놓아진 노란깃발 ≪안티조선≫

다채로운 볼거리로 시민 · 학생들 눈길끌어

조선일보 회개촉구 노상기도회 ≪신문개혁 기독교연대≫ 13일 발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교회와 사회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등 20여개 단체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정문 광장에서 ´신문개혁 기독교연대´를 발족하고 ´조선일보 회개 촉구 노상기도회´를 연다.

´신문개혁 기독교연대´ 공동의장에는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공동의장인 김광수 목사, 교회와 사회위원회 위원장 문대골 신부 등 5명이 선임됐다. 집행위원장은 전국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정진우 목사가 맡는다.

2001-09-15 13:56:00
ⓒ 2001 유뉴스
최종숙 기자 mir@mediaonul.com



오늘은 19일(수) 안티조선 문화제 첫째 날, 연세대를 가로지르는 백양로 길가는 조선일보 반대 마크가 새겨진 깃발로 노랗게 수놓아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끌고 있었다.

먼저 백양로에서 펼쳐진 안티조선 거리 전시전. 조선일보의 친일, 친독재 역사, 그리고 지난 6월 민주노총 총력 투쟁때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를 상대로 한 왜곡 보도 실상을 고발하는 전시물들이 길가에 주욱 늘어섰다. 한편에는 조선일보의 실상을 알리는 조선일보를 아십니까?, 우리는 왜 조선일보를 거부하는가? 등의 책과 북한 시인 55인의 시를 수록한 분렬의 장벽은 무너지리라. 를 정가보다 2 ~ 3 천원 싸게 할인해 판매하는 가판대도 등장했다.

연세대 학생들과 멀리서부터 찾아온 시민들이 거리전에 관심을 가지면서 서적을 구입하기도 하고, 이번에 준비한 안티조선 문화제 자료집이나 연세대 조반모 소식지 조선바보 를 손에 손에 한권씩 받아갔다.

또한 학생회관 앞에서는 조선일보 회장이자 연세대학교 이사장이기도 한 방우영씨의 퇴진 서명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져 하룻만에 2백여명의 연세인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조선반대 연세인 모임 대표인 오승훈씨는 "연세대 출신 저항시인 윤동주가 후쿠오카의 감옥에서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비참하게 죽어 갈때, 온갖 친일 행적을 통해 부귀 영화를 누렸으면서도 항일을 했다고 거짓말하는 조선일보의 회장 방우영이 이사장으로 있다는 사실은 연세대 학우들 입장에서 수치이기 때문이다"라며 이번 서명운동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오후 6시에는 조선일보의 역사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기자라기보다는 조선일보 전문가 가 더 잘어울리는 말 지 정지환 기자의 강연회가 있었다.

강연회장에 온 청중 중에 응용통계학과 강사라고 밝힌 한 시민은 안티조선 운동에 대한 책을 구입하면서 판매가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조차 사양하는 등 안티조선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격려과 지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2001-09-20 18:02:00
ⓒ 2001 유뉴스
서유상 기자 swpress1@hanmail.net





지식인 720명, 조선일보 거부 4차 선언 발표

조선일보 거부 4차 지식인 선언 발표



20일 오전 참여연대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는 조선일보 거부 4차지식인 선언발표및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이 열렸다.

오종렬(시민연대상임대표), 염찬희(영화평론가), 박경양(참교육학부모회장), 임기란(민가협공동대표), 임종일(시민연대집행위원장), 양윤모 (영화평론가), 황철민(영화감독,세종대교수)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조선일보 4차 지식인 선언을 발표하였다.

참가자들은 그간 조선일보 시민연대가 활동을 시작한지 1주년이 되면서 1년 동안 조선일보가 친일, 친독재를 통해 구축한 소위 무소불위의 신문권력이라는 마의 성벽을 무너뜨릴 작은 구멍을 뚫었다고 선언하고 앞으로도 5차 6차 계속해서 국민들과 조선일보의 허위 왜곡과 오만과 위선에 끈질기게 싸워 나갈것이라고밝혔다.

또한 이유경간사는 4차 명단이 학계 곽노현교수등 43명, 교사 김영석등 49명, 의사.약사 고병년 등 124명, 영화인 조준형 등 68명 변호사 20여명 등 총 739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최근 미국테러와 관련한 조선일보의 반북저널리즘에 관해 김은주 안티조선연대 모니터 팀장의 긴급비평이 있었다.

2001년 9월 20일





조선일보 거부운동은 계속된다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조선일보거부 4차 지식인 선언을 하며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가 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1주년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부담과 우려 속에 출범한 본연대의 조선일보반대운동은 실로 시대적 요청이었으며, 이제는 사회적 대세가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는 조선일보가 친일, 친독재를 통해 구축한, 소위 '무소불위의 신문권력'이라는 마(魔)의 성벽을 무너뜨릴 작은 구멍을 뚫었다고 감히 자부하는 바입니다.

대학생들의 조선일보 바로보기 운동에 이어 지난 6월 파업과 가뭄에 관한 편파왜곡보도를 계기로 민주노총이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을 선언한 것은 조선일보반대운동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식인과 시민단체 중심의 움직임에 강인한 팔과 다리가 더해져 조선일보반대운동이 바야흐로 실천성이 강하게 담보된 운동으로 발전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12일 양심적 영화인들이 조선일보반대선언을 했고, 오늘 1주년을 기념하여 저희가 발표하는 조선일보거부 4차 지식인 선언에는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법조인, 의료인들이 대거 참여한 것은 조선일보반대운동의 당위성과 함께 한층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적 접촉 면적이 큰 영화인들의 조선일보반대선언은 역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우선 영화인들의 조선일보반대선언이 갖는 '결단의 측면'을 저희는 높이 평가합니다. 영화가 가지는 상업성으로 인해 영화인들은 거대신문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때로 신문에 의해 영화의 상업적 성공이 좌지우지되는 현실에서 조선일보반대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참으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영화인들의 조선일보 반대선언은 '영화인들이 더 이상 조선일보가 유포하는 냉전적, 수구적 논리에 좌우되지 않겠다'는 문화적 자기선언이었습니다. 조선일보의 수구냉전 논리에 무의식적으로 매몰되고 그 것이 작품에 반영되는 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대전지역의 제 사회 및 노동단체'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와 '민족문학작가회의 지역단체', 그리고 의료인들의 조선일보반대선언 동참은 조선일보반대운동의 대중적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들의 뜻은 조선일보가 친일, 친독재를 통해 저질렀던 과거의 죄악을 사죄하고 참다운 언론으로 거듭나라는 진심에서 우러난 질책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무대응의 대응'을 원칙으로 세웠던 조선일보가 최근에는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조선일보는 사외보 '독자와의 대화'를 통해 친일, 친독재 곡필행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외보 독자와의 대화는 "조선일보가 민족지였다"고 뻔뻔스럽게 주장하는가하면 "오히려 부수가 늘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추정되는'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조선일보는 부수확장을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무리수를 두어 그 과정에서 타 언론사와 또다시 마찰을 빚는 일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일보의 이런 행태를 '위기의식의 발로'에 따른 파행적 대응행태로 규정합니다.사실 저희는 조선일보 기고 인터뷰거부 운동을 시작한 얼마후 '조선일보가 필자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바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일보에 대한 거부움직임에 대해 조선일보가 겸허한 태도로 자신을 돌아보기를 기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곡필과 수구냉전적 보도태도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의 조선일보반대운동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조선일보 구독거부 운동이 시작되면서 끊은 1천여부의 조선일보는 조만간 몇 만부, 몇 십만부로 늘어 조선일보의 대오각성을 이끌어내는 견인차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출범 1주년을 맞아 조선일보에 기고 및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무려 700여명의 명단을 또 공개합니다. 이로써 조선일보 거부 지식인 선언자는 4차에 걸쳐 1576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앞으로도 5차, 6차 계속될 것이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조선일보의 허위 왜곡과 오만과 위선에 맞서 끈질기에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2001년 9월 20일







<<조선일보 거부 4차 지식인 명단>> 총 739명

1. 학계 / 92명

교수 / 43명

곽노현(방송대 법학) 김광호(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김사열(경북대 미생물학) 김순태(방송대 법학) 김양주(배재대) 김용원(대구대 경제무역학부) 김종서(배재대 법학) 김진업(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김창록(부산대 법과대학) 김춘동(경북대) 류진석(충남대 사회복지학과) 문진영(서강대 사회복지학과) 박경태(성공회대 사회과학부) 박노영(충남대 사회학과) 박 령(신라대) 박성규(조선대 화학과) 박성택(외대 대학원 강사) 박오복(순천대) 박재묵(충남대 사회학과) 박정순(경북대 신문방송학) 서공석(광주여대 교수) 서정근(창원대 독어독문학과) 손호철(서강대 정외과) 안정선(공주대) 엄재열(경북대 농생물학과) 오수성(전남대) 유병로(한밭대) 유재건(부산대 사학과) 유재일(대전대 정치외교학과) 이강서(전남대 철학) 이경수(연세대 국제어문학부) 이은진(경남대 사회학과) 이재현(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장수찬(목원대) 장회익(서울대 물리학부) 조경만(목포대) 조승래(청주대) 조태영(한신대) 주강현(통일문화학회 대표) 진수미(경북대 사회학) 최용식(경제학자) 최정우(목원대) 한진만(강원대 신방과)

교사 / 49명

가명현(대전서부초) 권선술(청란여중) 권혜련(동산초) 김기정(충남고) 김남홍(산홍초) 김신희(새일고) 김영석(대전전민초) 김영주(대전중원초) 김영진(진잠중) 김옥동(동방여고) 김용식(대전문지초) 김원영(유성생명과학고) 김우진(대전관저고) 김정혜(동대전초) 김주선(대성여자정보고) 김주영(대전어은중) 김중태(대전대성고) 김혜영(덕송초) 김혜영(동대전고) 남궁미선(대전가오중) 문성호(대전남선중) 박병관(대전대암초) 박영미(탄방중) 박윤희(대전백운초) 박종근(서대전여고) 성광진(대전중) 송치수(청란여고) 신만수(서대전여고) 신용삼(대전중앙중) 신인섭(서일여고) 신정섭(호수돈여고) 양승운(대전남선중) 유근미(청란여고) 유현숙(대전문정중) 이상덕(대전동아공고) 이상수(신탄진고) 이이철(대전대암초) 이종순(대전여자정보고) 이종욱(대전정림초) 오완근(경덕공고) 오홍주(서일고) 전돈수(경덕중) 정권영(신탄진고) 정은형(대동초) 차재욱(새일고) 천용현(서대전공고) 최희민(대전어은중) 황영숙(대전관저고) 황정희(대전가장초)

2. 의사 · 약사 / 124명

고병년(고병년치과 원장) 김형돈(서울치과의원 원장) 문상원(광제한의원 원장) 신명식(푸른치과의원원장) 신현정(롯데가정의 원장) 윤종삼(윤종삼치과의원 원장) 이문희(서울가정의 원장)

정진호(약사) 신성진(기독병원 방사선과) 정형서(의사) 우승관 조관표 김성은 김규탁 위유민 노양균 정성국 최철용 김병무 정태환 김승태 김기현 손정수 고재민 김용주 김종협 곽성순 김명섭 김세일 김일훈 김효정 송필경 박준철 정제봉 정진구 홍석준 박현탁 홍석준 강윤모 이형구 김진범 정효경 조기종 김종민 차상조 박인순 오형진 이희원 전창화 전현주 이강주 하헌석 박태식 윤상석 한영철 김인섭 전민용 장교인 전성원 김동균 박남용 이상복 곽정민 박한종 김용진 이선장 김의동 김광수 신동근 김영희 정세환 전동균 김철신 고소영 고대호 배강원 박길용 소종섭 신이철 임종철 홍관석 홍원집 최덕형 김병오 서대선 김형성 송학선 안준상 유영재 이미금 이선영 정달현 정상호 이종상 이충엽 박태근 안재현 이채택 강동한 김영훈 박영규 김병재 최형림 조용훈 배석기 신희재 고승석 고영훈 공형찬 김유성 김재아 김호섭 박상태 이원준 이창호 장용진 장인호 정갑천 조남억 이강주 이성오 이상재 임재영 이 진 김성윤 (이상 치과의사)

3. 영화인 / 68명

조준형(영화인협회 정책실장) 최인기(프로듀서) 심광현(영상원 원장) 이용관(중앙대 영화과 교수) 심광진(영화감독) 이충직(중앙대 영화과 교수) 조재홍(다큐멘터리 감독) 윤인호(영화감독) 유창서(영화인회의 사무국장) 안창서(영화인회의 사무차장) 이용배(애니메이션 감독, 계원예술대학 애니메이션학과 교수),김홍준(영화감독/ 영상원교수) 노종윤(프로듀서) 황철민(영화감독/세종대학교 교수) 김동원(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김미현(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원) 김수미(여성영화인모임 사무국장) 김소영(영상원 교수) 김영진(영화평론가) 김예령(영화배우) 김우형(촬영감독) 김윤태(영화감독) 김응택(촬영감독) 김이찬(다큐멘터리 감독) 김현숙(서울산업대 강사) 김혜준(영화진흥위원회 정책실장) 권해효(영화배우) 남인영(영화평론가) 명계남(영화배우) 민동현(영화감독) 박홍진(영화감독) 박희성(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원) 변재란(순천향대 교수/영화평론가) 심산(시나리오 작가) 신다영(영화진흥위원회 국내진흥부) 안해룡(비디오 저널리스트) 양윤모(영화평론가) 양인화(대전독협 대표) 염찬희(영화평론가) 오정훈(다큐멘터리 감독) 윤재우(애니메이션 감독) 원승환(한국독립영화협회 배급팀장) 이두일(ebs pd) 이명인(영화평론가) 이미영(다큐멘터리 감독) 이상인(영화감독/용인대 교수) 이순진(여성영화인모임 정책팀장) 이승훈(ebs pd) 이주영(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차장) 이찬현(대전참교육영상집단) 임창재(영화감독,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원) 전승일(애니메이션 감독/동국대 교수) 정도상(시나리오 작가) 정지연(영화평론가) 정지영(영화감독) 정승희(애니메이션 감독) 조범구(영화감독) 조영각(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조종국(조우필름 대표) 조준형(영화인회의 편집실장) 주경중(영화감독) 주유신(영화평론가) 허동우(영화감독) 홍성원(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정책실장) 홍효숙(다큐멘터리 촬영) 황윤(다큐멘터리 감독) 황규덕(영화감독) 황동미(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원)

4. 변호사 / 20명

강문대(민변 노동위원회) 여영학(민변 환경위원회) 김준곤(법무법인 삼일) 최봉태(법무법인 삼일) 오충현(법무법인 삼일) 송해익(법무법인 삼일) 김석연(변호사) 김도형(″) 성상희(법무법인 대구 하나로) 조영보(변호사 조영보 법률사무소) 조민제(법무법인 KCL) 김기진(″) 차규근(원전 법률 특허사무소) 권정호(″) 김한주(서울 변호사회) 송선양(LS법률사무소) 유효석(민변 통일위원회) 최종모(법무법인 다인) 김연수 김주현

5. 문학 · 문화 · 예술 / 35명

김완수(시인) 김윤(만화가) 박형용(시인) 서형석(소설가) 손동연(시인) 송명석(국악인) 송재진(아동문학가) 양희정(방송작가) 이자숙(시인) 전양표(시인) 정천영(화가) 조현자(시인) 홍성규(시인) 김성희(극단 가인대표) 박연희(극단 함세상 대표) 송희정(″ **총무**) 임강훈(풍물굿패 소리광대 대표) 예재창(소리타래 대표) 박



창근(우리여기에 대표) 손영동(풍물패 버둘림 대표) 이정긴(틀사랑 대표) 남경숙(우리가락 얼쑤패 대표) 김영동(풍물패 버둘림 대표) 김영옥(예술공장 두레 단원) 김형택(모션&픽쳐 대표) 민병일(예술공장 두레 단원) 박찬희(예술공장 두레 단원) 유순웅(예술공장 두레 대표) 윤미경(예술공장 두레 단원) 이재남(예술공장 두레 단원) 이충하(예술공장 두레 단원) 이호근(풍물굿패 매구 단원) 이형우(좋은친구들 대표) 조재식(우리가락 얼쑤패 대표) 한은영(풍물패 버둘림 총무)

6. 종교계 / 8명

김봉길 목사(바로선장로교회) 이강석(목사) 이상록목사(경배교회) 정병선 목사(한길교회) 정성호목사(선목교회) 정영건(목사) 조영식(목사) 지승(옥천 가산사)

7. 언론계 / 5명

민형배(시민소리 편집위원) 오한흥(옥천신문 국장) 정은채(전 MBC 보도국장) 정지환('말'지 기자) 한종호(뉴스앤조이 편집인)

8. 시민 · 사회 · 노동계 / 382명 (단체별로 정리했음)

■ 민예총 / 43명

강 광(인천민예총 지회장) 강성률(월간 '민족예술' 편집장) 고광현(인천문화정책연구소 사무국장) 고찬재(충주작가회의) 김기현(청주민예총 부지부장) 김명종(충북민예총 기획부장) 김민형(충북민예총 사무처장) 김병균(인천민예총 사무국장) 김영기(경기민예총 지회장) 김준기(속초민예총 영화) 김창규(충북민예총 부지회장) 김태희(민예총 문예아카데미 사무국장) 김흥우(동해민예총 사무국장) 나명철(서울민예총 기획팀장) 남인숙(충북민예총 춤위원회 사무국장) 민병길(충북민예총 사진위원회 회장), 박미향(충북민화협회 회장) 박혜영(충북민예총 편집부장) 신동인(옥천민예총 지부장) 심상구(서울민예총 사무처장) 신상웅(충북민미협 사무국장) 안성배(민예총 정책기획팀장) 엄상빈(강원민예총 지회장/사진작가) 윤석위(충북민예총 지회장) 이균옥(대구민예총 지회장) 이동우(″ **부지회장**) 김헌근(″ **사무처장**) 강명희(″ **사무차장**) 신동호(″ **문화예술연구소 연구실장**) 이기택(민예총 남북교류협력위원장) 이병용(충북민예총 음악위원회 사무국장) 이주형(남부민예총 지부장) 이홍원(충북민미협 회장) 전태극(속초민예총 지부장) 정남준(민예총 사무총장) 정종진 장철기(예술공장 두레 단원) 정승각(충주작가회의) 정재현(충주민예총 지부장) 정종진(충북민예총 문화예술연구소 소장) 조동언(청주민예총 음악위원회 회장) 조영신(민음협 사무처장) 최광호(속초민예총 문학위원장)

■ 작가회의 / 16명

박상규(충주작가회의 회장) 허의행(충주작가회의 사무국장) 이안(충주작가회의) 이용문(″) 김영옥(″) 김창식(″) 김영대(″) 박윤규(″) 윤장규(″) 천병미(″) 최일선(″) 최종대(″) 정민(충북작가회의 사무차장) 김순영(″) 김희식(″ **사무국장**) 이종수(충북작가회의)

■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 36명

신현수(상임대표) 김동호(공동대표) 박미자(공동대표) 이원준(공동대표) 이정옥(공동대표) 홍현웅(공동대표) 박길상(사무처장) 김유성(협동사무처장) 김재복(협동사무처장) 민영환(협동사무처장) 유해숙(협동사무처장) 이도희(시민상담실장) 이혁재(청년위원장) 서경옥(여성위원장) 김현철(정보화사업단장) 강현희(편집실장) 정영주(부처장) 김원주(조직국장) 심진숙(교육국장) 박지아(여성국장) 조철호(회원사업부장) 안효국(정보통신국장) 이상범(계양지부 지부장) 이협(계양지부 사무국장) 배진교(남동지부 지부장) 권기태(사무국장) 정수영(남지부 지부장) 남승균(사무국장) 장금석(부평지부 사무국장) 김순종(서지부 지부장) 권정달(사무국장) 김영구(연수지부 사무국장) 전원문(중 · 동지부 지부장) 최경숙(시민문화센터 기획실장) 맹수현(내일 사무국장) 임태현(감사)

■ 전국연합 / 25명

이천재(공동의장) 노수희(공동의장) 한충목(집행위원장) 강희철(조직위원장) 박세길(편집위원장) 이용규(집행위원) 김동호(문예위원장) 조양원(정치위원장) 정대연(정책위원장) 김이경(집행위원) 차훈종(사무처장) 장대현(대변인) 이정미(여성국장) 강도수(기획국장) 안지중(총무국장) 김국상(투쟁1국장) 김광균(부대변인) 최영옥(선전국장) 강형구(조직국장) 정연욱(자통국장) 남언호(자통국장) 김정훈(정보통신국장) 조선희(기획부국장) 주제준(투쟁국장) 최영은('민' 독자사업국장)

■ 대전 / 175명

김광식(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종남(″ **시민환경기술센터 정책실장**) 김용분(대전시 서구의회 의원) 민명수(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 금홍섭(″ **연대기획국장**) 김제선(″ **사무처장**) 심규상(″ **기획실장**) 이외원(″ **집행위원**) 최교진(″ **공동의장**) 우희창(대전민언련 사무국장) 한진걸(대전흥사단 사무국장) 권성환(전교조대전지부 사무처장) 이권춘(″ **지부장**) 전양구(″ **부지부장**) 김용덕(인터넷신문 피알한닷컴 편집장) 오의숙(대전충남녹색연합 운영위원) 박정현(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국장) 김경희(대전여민회 사무국장) 김진연(대전여민회 사무부국장) 김미정(대전여민회 문화위원장) 장현자(대전여민회 부회장) 민양운(대전여민회 고용평등상담실장) 박병룡(대전지역건설노동조합 대표) 박영재(천안아산건설일용노동조합 대표) 황석곽(공무원연금관리공단노조 대표) 김세동(과학기술노조 과학기술원지부장) 양영호(과학기술노조 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장) 노재학(과학기술노조 과학재단지부장) 장인홍(과학기술노조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지부장) 이성우(과학기술노조 생명공학연구소지부장) 이강원(과학기술노조 생산기술연구원지부장) 엄주열(과학기술노조 선박해양분회장) 정승용(과학기술노조 에너지기술연구소지부장) 김홍태(과학기술노조 원자력안전기술원지부장) 박덕근(관학기술노조 원자력연구소지부장) 김예준(과학기술노조 전자통신연구원지부장) 박종원(과학기술노조 정보통신진흥원지부장) 홍성규(과학기술노조 지질자원여구원지부장) 한무호(과학기술노조 지질자원연구원지부장) 이상완(과학기술노조 표준과학연구원지부장) 이우필(과학기술노조 항공우주연구소지부장) 김영목(과학기술노조 화학연구소지부장) 이병혁(기계산업진흥회직업전문학교 노동조합대표) 한성무(농업기반공사노조 충남지부장) 서정



석(대전지역상용직노동조합 대표) 김용호(대한지적공사노조 대전충남지부장) 서종원(데이콤노조 아산본부장) 이건우(데이콤노조 연구소본부장) 이학성(이콤노조 충청본부장) 유재택(독립기념관노조 대표) 이경순(망향휴게소노조 대표) 김광수(사회보험노조 대전충남본부장) 김정환(서산환경미화노조 대표)박영수(송유관공사노조 중부지부장) 신동만(신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노조 대표) 이강본(신화엔지니어링 노조 대표) 박상섭(아산지역환경관리노조 대표) 곽영기(양지마을노조 대표) 김성진(예산지역환경관리노조 대표) 김창무(조폐공사노조 대표) 장준덕(천안대한송유관노조 대표) 이은형(태안환경노조 대표) 신현길(한국가스공사노조 대전지부장) 백병제(한국감정원노조 대전지부장) 전충호(한국선급노조 대표) 김기태(한국전기안전공사노조 대전충남지부장) 이춘하(한국통신계약직노조 대표) 남기평(한국통신노조 충남본부장) 최용택(한국원자력연료노조 대표) 이수정(경남제약노조 지회장) 박희화(기아자동차정비노조 지회장) 박영길(기아자동차판매노조 충청대전지회장) 고덕화(대우자동차정비노조 대표) 정봉규(대우자동차판매노조 대표) 장명국(대우통신노조 지부장) 한정규(대원강업노조 성환지부장) 이동원(대윤정보통신노조 대표) 이헌균(대한공조노조 지회장) 김용주(대한이연노조 지회장) 유영주(대한칼소닉노조 지회장) 심의혁(동양엘리베이트노조 천안지부장) 최용우(두양금속노조 지회장) 서용석(두울실업노조 지회장) 백두현(만도기계노조 아산지부장) 오창석(센추리노조 지회장) 이동운(수영산업노조 지회장) 정경수(신광기업노조 대표) 손항수(신창전기노조 천안지부장) 황선남(우진전자세라믹노조 대표) 윤영호(유성기업노조 대표) 김선일(이성엔지니어링노조 대표) 지승일(일진노조 아산지회장) 이웅영(한국로버트보쉬기전노조 지회장) 류안수(한국항공노조 지회장) 남재천(한국DTS노조 지회장) 최세철(한라공조노조 대표) 이승주(한벨헬리콥터노조 지회장) 송승욱(한보철강노조 지회장) 이우현(한일이화노조 대표) 문용민(해강휀스타노조 지회장) 전승일(현대자동차노조 아산지부장) 이걸성(현대자동차정비본부노조 대전지부장) 김현수(현대자동차판매본부노조 대전충남지부장) 전민석(효성중공업노조 연기지회장) 홍성철(효신금속노조 대표) 김영남(대학노조 남서울산업대지부장) 황의주(대학노조 대전대학교지부장) 심재곤(학노조 연암축산원예전문대지부장) 김지수(대학노조 충남대학교지부장) 신종희(대학노조 한국기술교육대지부장) 박영배(대학노조 호성대학교지부장) 이천한(대둔산CC노조 대표) 정현기(예산지역관광운수노조 대표) 최동희(유성CC노조 대표) 최동재(프레야노조 대표) 박홍규(호텔리베라노조 대전지부장) 김효진(민주버스노조 서진운수지부장) 이종민(민주버스노조 한밭여객지부장) 김주한(민주택시 대진운수노조 대표) 김상훈(민주택시 대창운수노조 대표) 이중하(민주택시 삼흥교통노조 대표) 김영길(민주택시 보령운수노조 대표) 노선균(민주택시 상호운수노조 대표) 이순택(서산민주택시노조 대표) 이원기(민주택시 승마육운노조 대표) 임정락(민주택시 신영택시노조 대표) 권순석(아산지역택시노조 대표) 이인호(민주택시 제일택시노조 대표) 김낙천(민주택시 중앙택시노조 대표) 최종오(민주택시노 천일택시노조 대표) 조능순(보건의료노조 공주의료원지부장) 배규필(보건의료노조 단국대의료원지부장) 김석주(보건의료노조 대전대한방병원지부장) 황점기(보건의료노조 대전보훈병원지부장) 박세웅(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적십자혈액원지부장) 전봉수(보건의료 보령병원노조 대표) 유상주(보건의료 서산의료원노조 대표) 오미영(보건의료노조 선병원지부장) 황현옥(보건의료노조 아산중앙병원지부장) 오창근(보건의료노조 대전중앙병원지부장) 이상호(보건의료 천안의료원노조 대표) 이종걸(보건의료노조 충남대병원지부장) 노세호(보건의료 천안의료원노조 대표) 이덕주(농협노조 당진지부장) 송종호(동양오리온투자신탁노조 대표) 안상헌(선영새마을금고노조 대표) 김희봉(축협노조 대전충남본부장) 양호천(축협중앙회노조 충남본부장) 박종필(베스콘노조 대표) 류형렬(대교노조 대전지부장) 안영기(CBS노조 대전지부장) 강동원(KBS노조 대전충남지부장) 이광원(MBC노조 대전지부장) 이오규(TJB노조 대표) 전서개(삼성운수노조 대표) 김영회(전교조 충남지부장) 이상근(대전충남지역골재원노조 대표) 조수미(목원대조교노조 대표) 성동훈(배재대조교노조 대표) 이창환(비벤디워터코리아노조 대표) 신형두(전자통신연구원신협노조 대표) 김태율(한밭케이블TV노조 대표) 고영복(대교교사노조 대전지회장) 정태진(대교교사노조 충청지회장) 홍성길(대륙화학노조 대표) 변윤성(대열기계노조 대표) 이종욱(미성노조 대표) 박용범(신암지역화학노조 대표) 박성훈(신호제지노조 대표) 백준현(아벤티스사이언스코리아노조 대표) 장오용(아세아산업개발노조 대표) 정순구(영일케미칼노조 대표) 황장연(유니레버코리아노조 대표) 차재현(한국피앤지노조 대표) 박종준(현대석유화학노조 대표) 권문현(동호화학노조 대표)

■ 울산 / 9명

최현오(민주주의민족통일울산연합 의장) 안승찬(″ **집행위원장**) 황재인(″ **사무처장**) 김창현(민주노동당울산광역시지부 지부장) 허석(″ **사무처장**) 서민태(전교조울산지부 통일위원장) 홍정련(현대중공업노동자가족협의회 회장) 고영호(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조직국장) 천병태(전 울산시의원)

■ 민주노총 / 19명

장현일(대외협력국장) 박선민(″) 오동진(쟁의국장) 박강우(정책국장) 이상학(″) 유병홍(″) 홍종일(정책차장) 오건호(정책부장) 근태상(선전차장) 이수경(조사통계차장) 현희경(편집차장) 차남호(편집국장) 정경은(편집부장) 박선봉(문화국장) 황혜원(선전국장) 한선주(교육부장) 손낙구(교육선전실장) 윤영모(국제국장) 임진희(총무차장)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10명

이종명(부회장), 박경양(″), 김정금(″), 박광희(영남권역위원장), 이희한(호남권역위원장), 진옥경(충청권역위원장), 황수경(상담실장), 송환웅(모니터국장), 이석재(총무국장), 최선희(교육자치지원국장)

■ 한국성폭력상담소 / 11명

김지선(재정부장) 김언정(교육부장) 임민희(인권홍보부장) 김영정(정보사업부장) 하은주(상담부장) 박신옥(상담부장) 유은주(연구부장) 안정현(미디어사업부) 문효진(사무국장) 안수진(자원연구위원) 목선희(″)

■ 매비우스 / 8명

김미애(매비우스 대표) 조은숙(매비우스 기획부장) 강에스더(매비우스 교육부장) 곽윤정(매비우스 모니터부) 정현아(매비우스 모니터부) 한규정(매비우스 모니터부) 이완석(매비우스 모니터부) 김아미(매비우스 모니터부)





■ 민가협 / 8명

임기란(상임의장) 박용길(공동의장) 권오헌(공동의장) 윤혜경(공동의장) 서경순(운영위원) 김정숙(운영위원) 조순덕(운영위원) 남규선(총무)



■ 인권운동사랑방 / 6명

류은숙(사무국장), 이주영, 이광길, 박범용, 김영원, 고근예(이상 활동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4명

김영두(연구위원), 홍주환(연구실장), 김광석(교육실장), 김태현(연구위원)

■ 기타 / 13명



고영삼(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지도위원장) 이승대(″ **중앙회장**) 김광훈(광주민언련 사무국장)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여인철(″ **대전지부장**) 양해진(광주민언련 부의장) 오승국(제주 4·3 연구소 사무처장) 오정택(민주개혁국민연합) 임근재(″) 최 철(YMCA 시민사업부위원) 박명식(부산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김기현(부산기독교윤리실천운동집행위원) 안미향(청소년문화센터 우리세상 원장)

9. 기타 / 5명

오동명(자유인) 문용민(대전지방법원 사무관) 고달령(동일텍스타일 총무과장) 전율호(영민문화사 대표) 유병구(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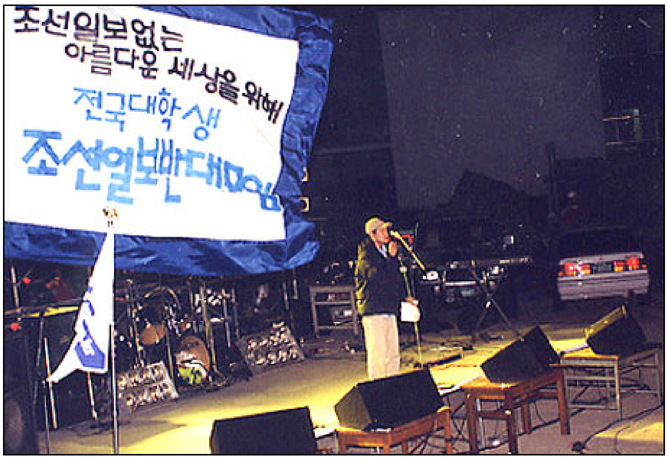








전국대학생조선일보반대모임 출범선언서



지난 우리 역사의 발전을 수놓았던 참다운 지성과 교양의 분출 속에서 언제나 앞장 서 온 사람들이 대학생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기리는 일에 그치지 않고, 자랑스러운 역사의 연장선상에 떳떳이 버티어 서서, 조선일보를 일본제국주의와 군사독재에 이은 불의(不義)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반대하고 거부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기형적인 언론권력에 대한 맞섬이 독립운동과 민주화투쟁을 잇는 일임을 확신하며, 또한 정의(正義)를 위해 주어진 이 시대 최고의 책무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조선일보의 과거와 오늘은 대한민국을 얼룩지게 했던 오욕의 역사에 완전하게 밀착되어있다. 그들은 일본 천황은 물론이며 나찌 독일의 히틀러까지 찬양한, 제국주의의 부역자였으며 해방 후에는 반공의 탈을 뒤집어쓰고서, 특유의 비뚤어진 융통성을 발휘하여 국가안보를 상업주의의 도구로 삼아 연명해왔다. 이에도 모자라 그들은 초지일관 반민주, 반민중, 반민족의 길을 걸으며 군사독재를 지지해왔다. 역대 독재정권들에 충성을 바친 덕분에 현재 조선일보는 최고의 구독률과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게 된 것이다.

군사독재는 국민의 거센 저항을 받아 패퇴하였으나 조선일보는 사죄를 하거나 심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권력으로 자리하여 민주화의 속도를 늦추는 제동장치로 남았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민간정부내의 개혁적인 인물들까지 몰상식하게 공격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탈냉전을 향한 남북의 화해협력, 지역화합, 제 몫을 누리려는 민중들의 움직임 등을 가차없이 짓밟고 있다. 거기에다가 언론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인,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드러난 엄청난 불법과 탈세를 부인하면서,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마치 불온한 음모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오도하였다.

민주사회의 명백한 적을 마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이제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조선일보라는 사회악을 그대로 두고서는 어떠한 올바름과 합리성도 제대로 설 수 없음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두말할 나위 없이 적극적인 거부를 표현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은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전위에 서서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미 조선일보 반대와 언론개혁을 내거는 각 대학교 모임들의 등장을 이끌었고, 광범위한 연대를 목표로 삼은 모색과 '신문개혁 대학생선언' 등을 거쳐 오늘을 만들었다. 우리는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좌시와 침묵이 가득한 사회에 희망찬 파문을 일으키기 위해 열정과 책임감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전국조선일보반대모임'의 출범을 선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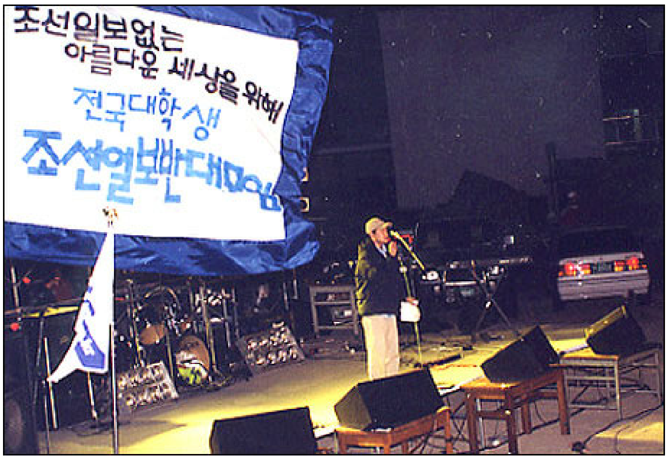
2001년 9월 21일
전국대학생조선일보반대모임





전국대학생 조선일보 반대모임 공식 출범

다큐멘터리 상영 · 강연회 등 다채로운 행사



제1회 안티조선문화제가 지난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3일간 전국대학생조선일보반대모임(이하 조반모)과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하 전대기련)주최, 연세대 · 고려대 총학생회, 전국신방과연석회의 주관으로 2백여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연세대학교에서 열렸다.

안티조선문화제는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정권에 아부하며 민주화를 기로막고 통일의 흐름까지 방해하는 반통일, 반민주 신문 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조선일보에 대한 반대운동(안티조선일보운동)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이번 안티조선문화제는 다큐멘터리 상영전과 방우영 재단 이사장 퇴진 서명운동, 안티조선일보운동에 관한 릴레이 강연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준비되었다.

특히 20일(목)에 열린 오한흥(옥천신문 편집장)씨의 안티조선과 옥천전투 라는 제목의 강연회에서는 최근 옥천지역에서 있었던 안티조선운동과 이로 인한 옥천의 변화가 이야기되었으며 더불어 옥천전투에 관한 다큐멘터리도 병행 상영되어 그동안의 안티조선운동의 과정과 성과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21일(금) 저녁 7시 연대공대 옆마당에서는 문화공연 및 조반모 출범식을 같이한 본행사가 있었다. 본행사는 1부 상반기 안티조선운동 결산 및 전국 조반모 출범식 과 2부 문화공연으로 나뉘어 열렸다.

1부는 이번 문화제가 안티조선운동 활성화에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는 장정규 연세대 총학생회장의 축하발언과 개회사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후 오승훈(조선일보반대 연대인모임)씨가 "조선일보 문제는 이제 사회적 개혁과제가 되었다"고 말하며 7월 18일 조선일보 반대 대학생선언 등 상반기 안티조선일보운동 동안 이룬 성과를 발표했으며 이어서 노래패 천지인의 한가지 생각만 하는 조선일보를 뜻하는 제목의 외눈박이 물고기 라는 노래도 선보여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어 곧바로 성유보 민언련 이사장과 임병일 조반모시민연대 집행위원의 격려발언이 있었다. 발언에서 성유보 씨는 "지금 우리는 제2의 민주화운동을 추진중"이라며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 언론이 떠오르게 된 지금 2차 민주화운동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서 공동주최자였던 전대기련의 고윤정 의장은 연대발언에서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조선일보를 규탄하며 수많은 민중들의 입과 귀를 막았던 조선일보를 향해 힘껏 투쟁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고윤정 의장의 발언 후 곧바로 올해 처음으로 정식 출범된 전국 조선일보 대학생 반대모임 의장 강영준씨의 전국 조반모 대표발언 및 출범선언문 낭독이 있었다. "올 가을에는 지난 여름 신문개혁을 외치며 힘들게 투쟁한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한 강영준 씨의 발언을 끝으로 1부 행사의 막이 내렸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음악평론가 성우진 씨의 사회로 진행, 다리미, 퍼플헤이즈, 히키클럽 등 인디밴드들의 공연이 준비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안티조선문화제의 개최로 대학생,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안티조선일보운동의 대중성이 증명되었으며 이에 좀 더 많은 이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시점이 되길 기대해본다,

2001-09-22 11:34:00
© 2001 유뉴스
홍익대 박미선 기자 puhaaee@hanmail.net



반통일세력의 준동을 투쟁으로 분쇄하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결단과 노력으로 역사적인 남북최고위급회담이 성사되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그 이후 정세는 급물살을 타며 자주민주통일의 바다로 거침없이 나아가며 매우 좋게 발전하고 있다. 온 민족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조국통일의 광명한 미래를 내다보며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다.

헌데 내외의 반통일세력들만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전환적 국면에 극도의 불안을 느끼며 이 통일대세를 뒤집어보려고 발악적인 반통일책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조국과 민중이 예속과 분단의 고통에 신음할 때 미일외세에 빌붙어 온갖 매국역적질로 호의호식해온 반통일세력들이 이제라도 자신의 과오를 뉘우칠 대신 또다시 반통일역적행위로 민족의 가슴에 칼부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통일세력의 준동은 미제국주의와 일군국주의의 조종과 비호하에 조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 희대의 사대매국노 김영삼이 미일외세의 낙점을 받아 반통일세력의 수괴로 나서며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으며 이에 고무된 조선일보반동매문지와 이회창, 조성태, 이정빈, 장충식, 김용갑과 같은 어중이떠중이 반통일분자들도 덩달아 겁없이 날뛰고 있다.

미중앙정보국의 말단통치기관이며 온갖 반북모략의 소굴인 국가정보원도 이에 질세라 프락치공작과 검거선풍에 미쳐 돌아가고 있으며 보안수사대와 국군기무사와 같은 반동기관들도 조작과 탄압에 광분하고 있다.

내외 호전세력은 통일지향의 평화정세를 흡수통합의 전쟁정세로 바꾸어보려고 ≪을지포커스렌즈≫, ≪**독수리**-2000≫ **합동군사훈련과 같이 전쟁전야에서나 볼 수 있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으며 심지어 이북의 영공**, 영해를 불의에 침범하는 위험천만한 도발책동마저 저지르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역사적인 서울방문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여 이 땅의 모든 애국적 민주세력은 반통일세력의 발악적 반역책동에 최대의 경각성을 가지고 강력히 대처하여야 한다. 반통일세력이 자행하고 있는 엄중한 도발책동을 조국과 민중의 이름으로, 광범한 대중투쟁의 철퇴로 준엄히 단죄하여야 한다.

반통일세력의 반통일책동은 죽음을 눈앞에 둔 자들의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하다. 개가 짖어대도 기차는 달린다. 한국의 애국운동대오는 반통일미친개들을 정의의 몽둥이로 때려잡고 통일행 기차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는 이런 정세의 요구를 반영하고 그간 통신상에 공개된 자료에 근거하여 참고자료를 준비하였다. 이는 최근 반통일세력이 자행하고 있는 도발책동들의 양태와 그 본질, 그리고 운동대오의 투쟁방도에 대한 우리의 견해이다.

1) 김영삼역도는 반통일세력의 수괴

희대의 사대매국노이며 천하의 망나니 김영삼역도가 반통일세력의 수괴로 나서고 있다.

김영삼역도는 당대 최악의 사대매국노인 이승만, 장택상의 수하에서 정치에 입문한 역적으로서 미제가 손때묻혀 키워온 숭미사대주의가 골수에 박혀있는 철저한 친미사대분자이다. 미제는 야심가이고 막무식꾼이며 겉으로는 기독교신자요, 속으로는 간통강간범인 약점투성이 김영삼역도야말로 다루기쉬운 앞잡이정상배로 낙점찍고 그 정치경력을 관리해 주었다. 특히 미제는 이 역도를 군사파쑈도배들에게 솜방망질을 하며 앙탈을 부리는 정치매춘부로 키우며 마치 민주투사인 듯 분장시켰다.

결국 미제의 전적인 사주와 비호하에 권좌에 오른 김영삼역도는 미제의 일급주구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보이며 전무후무한 매국역적질만 저질러 왔다.

김영삼역도는 조미관계를 전쟁국면으로 끌고가며 미제의 핵전쟁머슴꾼으로서 천추에 용납못할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미제의 가장 호전적인 주구로서 6.25전쟁의 전범 중의 하나인 이승만역도도 혀를 내두를 전쟁미치광이의 도발이었다. 또한 김영삼역도는 이북이 대국상으로 온 나라가 피눈물에 잠겨있을 때 이른바 ≪조문파동≫이라는 천하의 망나니짓, 패륜패덕만행을 저지르며 남북관계를 극한으로 치닫게 한 역대최악의 반공화국대결광신자였다.

김영삼역도는 미제의 사주아래 집권 첫 해에 한국농업과 민족의 생명을 ≪우루과이라운드≫로 끊어버리더니 집권 마지막 해에는 한국경제를 아예 통째로 국제통화기금의 경제신탁통치에 밀어넣었다. 역도는 수만개의 기업을 파산시키고 천만의 실업자를 양산하고 수많은 가정마저 파탄시켜 가장은 노숙자로, 주부는 매춘부로, 자식은 고아원으로 떠돌게 만든 희대의 경제학살자, 기업말살자, 가정파괴범이다.

김영삼역도는 역시 미중앙정보국의 공작하에 자주민주통일을 주장하는 의로운 청년학생들을 군화발로 짓밟으며 제2의 ≪광주사건≫인 ≪연대사건≫을 일으키고 한총련을 이른바 ≪,이적단체≫, ≪**폭력단체**≫**로 매도하였다**. 역도는 또한 조국통일기관차인 범민련을 역시 이른바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야수적으로 탄압하며 강희남의장을 비롯한 수많은 견실한 애국인사, 통일인사들을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역도가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를 비롯한 온갖 파쑈적 폭압도구를 휘두르며 애국운동, 민중운동을 탄압한 사례는 이루헤아릴 수 없이 많다. 김영삼역도야말로 전대 군사파쑈광들도 낯을 붉힐 문민파쑈광, 문민망나니인 것이다.

김영삼역도는 배짱이 딱 들어맞는 정태수와 야합하여 역대최대부정선거로 당선되더니 결국 한보비리를 저지르며 여기서만 무려 3조가 넘는 돈을 횡취했다. 역도가 그 무슨 ≪정치권 사정≫이다, ≪**금융실명제**≫**다**, 뭐다 하며 정재계에서 빨아들이거나, 공기업들에 심복들을 낙하산 인사시킨 후 여기서 횡령하거나, ≪**고속전철**≫**이다**, ≪**신공항**≫**이다** 뭐다하며 대형공사를 추진하며 받아먹거나,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경제신탁통치로 넘어갈 때 외국자본으로부터 챙기거나 해서 재임기간** 이렇게저렇게 축재한 검은돈은 1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수자라는 것이 외국언론들의 보도이다. 하여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김영삼역도를 단군이래 최대도적놈이라고 규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다.

희대의 사대매국노, 파쑈광신자, 반통일분자, 부정부패왕초인 김영삼역도는 권좌에서 쫓겨난 지금 자신의 대죄를 뉘우칠 대신 또다시 외세를 등에 업고 반북반통일행각으로 민족과 맞서며 통일대세에 역행해 나서고 있다.

김영삼역도가 미일외세를 등에 업고 반통일세력의 수괴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역도가 철저한 숭미사대매국노이며 반공반북반통일분자라는 점이다. 이는 역도의 전 정치역정과 집권기간의 행태가 입증하는 바이다. 그것은 또한 역도가 현집권자의 정치계의 맞수라는 것이다. 현집권자가 이북과 통일지향의 합작을 선언하고 나선 지금의 정세에서 이를 견제하고 통일정세를 바꿀만한 인물을 내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역도가 아직 지역기반과 하수인들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조직을 관리할 충분한 검은돈을 축재해 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역도의 총알받이형 기질, 돈키호테식 성격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김영삼역도는 6.15공동선언 이후 ≪민주산악회≫라는 반민주반통일집단을 재조직하고 ≪기자회견≫이다, ≪**정치강연**≫**이다**, ≪**산**

행≫**이다 뭐다 하며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해외에까지** 돌아치며 분주탕을 벌이고 있다.

역도는 ≪000은 독재자다≫, ≪000은 6.25전쟁을 사과해야 한다≫, ≪**이북을 비판하는 것은 이북에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등 감히 이북의 최고수뇌부와 체제까지 시비를 걸며 천하의 망나니다운 막말과 황당한 궤변을 마구 늘어놓고 있다.

또한 역도는 ≪000이 회장이면 김대중은 전무다≫, ≪**북에 돈주는 것이 교류냐**≫, ≪**태풍으로 어려운데 이북에** 쌀지원해주는 것은 정신나간 것≫이라고 하는 등 온갖 망언을 줴치며 현정권의 통일지향적인 정책들에 일일이 딴지를 걸며 훼방을 놓고 있다.

또한 역도는 남북공동선언문의 통일방도조항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결국 집권기간 자신이 내걸은 이른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는 것마저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렸다.

심지어 역도는 이북의 최고수뇌부를 걸고들며 감히 ≪서울답방반대 2000만서명운동≫**이라는** 반공반북캠페인까지 벌이겠다고 떠벌이고 있다.

역사에 둘도 없는 인간쓰레기이고 반통일역도인 김영삼놈의 이러한 망언들은 대세의 흐름도 이남의 민심도 가늠하지 못하는 정치망나니, 반공이 골수에 배길대로 배긴 추악한 민족반역자만이 떠벌일 수 있는 쓸개빠진 넉두리이다. 역도의 이런 망발들은 1994년의 역사적인 평양상봉의 기회를 놓치고 이북과 대화 한번 해보지 못하고 밀려난 인간퇴물, 반공악질분자의 심술궂은 푸념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막말과 궤변은 응당 각계 양심인사와 언론의 지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한총련은 김영삼역도를 ≪반통일우익보수세력의 막가파 행동대장≫이라고 정당히 규정하며 ≪이번 반민족적 경거망동으로 김영삼당신이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아니 지구상에서 한치도 없음을 알린다≫라고 준엄히 단죄하였다. 민주노동당 김종철부대변인도 ≪**헌법 전체의 정신이 국민의 평화와** 안녕을 지켜주는 것임을 망각하고 일부 조항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해 현재 남북간의 화해국면을 대결국면으로 되돌리려는 김 전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준엄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원순변호사는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의 상호 이해와 양보에서만 가능하며**, 김 전대통령 자신이 주장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상대방 체제에 대한 부분적 인정을 기초로 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무모하고 사려깊지 못한 발언을 중단하고 위신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통일협회마저도 논평을 통해 ≪국가를 도탄에 빠트리고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장본인이 자중자애하기는커녕 수시로 기자회견을 해 엉뚱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일삼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통탄한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라≫ **고 규탄하였다**.

그런가 하면 고려대학교에서 그 무슨 강연을 한답시고 주접을 떨다가 정의로운 애국학생들의 단호한 응징에 호된 타격을 받고 열네시간동안이나 좁은 차안에서 온갖 추태를 떠는 망신만 당하였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반김영삼투쟁은 전민족의 지지와 찬사를 받은 훌륭한 모범으로서 널리 일반화되어야 한다.

한편 김영삼역도는 자신의 재임기간의 온갖 부정부패와 그릇된 정책, 그리고 현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파탄난 지역경제의 책임을 현정권에 돌리며 기만적인 언행으로 망국적인 지역감정까지 되살리고 있다. 도적이 매를 드는 식의 망언을 일삼으며 또다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역도야말로 지역감정에 기생하는 구시대 정상배의 전형이라 고 아니할 수 없다.

반통일세력의 우두머리 김영삼의 해괴한 망발과 반역행각은 어중이떠중이 반통일분자들의 궤변과 망동을 부추기고 있다. 게다가 그 무슨 ≪2천만서명운동≫까지 벌이겠다는 조건에서 김영삼역도에 대해서는 응대하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식의 소극적인 입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김영삼역도의 반통일망언과 행각의 본질을 대중적으로 폭로하고 철저히 분쇄하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

김영삼역도는 말그대로 희대의 사대매국노이며 선임군사파쑈광들을 능가하는 문민파쑈광이며 역대 최악의 반통일분자이며 단군이래 최대도적놈이다. 이런 역도가 있을 곳은 오직 철창안이고 사형장일 뿐이다.

이미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혀 온갖 악취를 뿜고 있는 천하의 망나니 김영삼역도에 애국운동대오는 준엄한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며 그 정치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김영삼역도를 내세워 감히 통일국면을 되돌려 세워보려고 책동하는 미제와 반통일세력의 기도를 초장부터 파탄시켜야 할 것이다.

2) 어중이떠중이 반통일분자들의 발악적 준동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고 김영삼역도가 반통일행각에 미쳐돌아가니 온갖 어중이떠중이 반통일분자들도 덩달아 날뛰고 있다.

먼저 야당당수라는 이회창역도이다. 이자는 김영삼역도의 손아래 하수인으로서 그 배경으로 국무총리를 해먹더니 여당대통령후보를 거쳐 지금은 야당당수가 되어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는 정치협잡꾼이다. 이회창역도가 야당당수로서 지난 3년간 보인 모습은 자주민주통일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편 사소한 쟁점에 사로잡혀 국회를 공전시키며 ≪식물국회≫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한치 앞도 못보는 역도는 기존 정치인을 능가하는 ≪말바꾸기≫**의 능수가 되었으며 현재는** 반통일행각과 망국적인 지역감정에 열을 올리며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회창역도는 지난 97년 대권싸움에 나서서 ≪흡수통일≫을 외쳐 국민의 비난과 조소를 받은바 있는데 이번에도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기반의 통일에서 양보나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국민이 환상에 젖어있다**≫**고 고아대면서** ≪**통일방안은 대한민국의 기본이념과 정체성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기반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절거림으로써 국민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역도는 또한 감히 이북의 최고수뇌부의 권위를 훼손시키려고 획책하였는가 하면 ≪북의 핵과 미사일문제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한다≫느니, ≪비전향장기수와 그 무슨 ≪납북자≫**들을** ≪**상호주의**≫ **원칙에서 교환하여야 한다**≫**느니**, ≪**국가보안법 개정에 반대한다**≫ **느니**, ≪**대북식량지원에 반대한다**≫**느니 하면서 남북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걸고 남북대결을 고취하는 망발을 마구 해대고 있다**.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실천에 한결같이 나서고 있는 때에 입만 벌리면 공동선언을 시비질하며 헐뜯고 그 이행을 가로막아보려고 발악하고 있는 이회창은 자신이 동족의 피도 없는 국적불명의 사생아, 둘도 없는 민족반역자임을 스스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회창의 이같은 언동들은 대세의 흐름과 이 땅의 민심도 분간못하는 정신병자, 남북의 긴장격화와 대결만을 바라는 악질 반통일분자의 단발마적 발악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행위이다.

지금 내외 여론이 이회창을 두고 민족의 탈을 쓴 역적으로, 질투심에 미쳐 시대감각도 느끼지 못하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천치바보, 철부지로 신랄히 조소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다음으로 극우매판매문지인 조선일보이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사대매국세력, 극우호전세력의 이해와 요구를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대표적인 반북모략지이다. 조선일보는 광복전에는 일제식민지정책의 나팔수로 적극 복무했고 광복후에는 미제와 친미독재권력에 아부굴종하고 그를 미화분식하며 반민족적, 반민주적 행로를 걸어왔다.

이 조선일보매문지가 지난 수십년간 일관되게 보여왔던 반북반통일역적질은 이루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군사파쑈정권시절엔 광주항쟁 당시 민중을 ≪폭도≫로 규정하는 등 온갖 반북모략사건을 선전하며 안기부의 언론창구역할을 하였다. 이런 반북모략사건은 언론공작이 더욱 노골화된 김영삼반역정권 시절에 보다 강화되어 97년에는 감히 이북의 최고수뇌부를 정면으로 걸고드는 천추에 용납못할 만행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제의 대북핵전쟁계획에 발맞추며 전쟁미치광이의 어용나팔수역할을 하며 반민족행각의 극을 달리는 특급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런 반북모략지, 반북매문지이기에 지금도 역시 6.15공동선언 이후 매우 좋게 발전하는 남북화해와 단합의 기류를 거역하고 이에 인위적 장애를 놓는 반통일행각에서도 앞장에 서고 있는 것이다.

이 반북모략지의 이북관련기사들은 대개가 이북의 존엄높은 체제와 이념, 사회상과 생활방식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헐뜯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이를테면 ≪북한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느니, ≪**북한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느니, ≪**정상회담의 성공여부도 북한의** 생존적 차원에서 자세를 취하는데 따른다≫느니, ≪**북의 남침으로** 6.25전쟁이 일어났다≫느니, ≪**남과 북의 주의와 이념에 따르는 두 체제의 통일방안이 절충해서 이루어지는 통일은 불가능하다**≫**느니**,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느니 하며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노골적인 방해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지난 8월7일 학계, 문인, 종교계, 시민운동권 등 사회각분야의 1백50여명 인사들이 조선일보에 대한 기고, 인터뷰를 거부하는 선언식을 가진 후 조선일보배척기운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 조선일보배척운동에 서명한 성공회대 김서중교수는 ≪**기업이 잘못된 물건을 팔면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정당한 행동이다**. 조선일보에 대한 기고나 인터뷰를 거부하는 것도 잘못된 물건에 대한 불매운동이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대기련, 전영기련, 전교련, 전국대학신문연석회의 등이 결집된 전국대학언론단체들이 반역사적, 반통일적 여론을 조성해온 조선일보반동지를 반대하는 ≪극우반동신문 조선일보 규탄을 위한 대학언론인 결의대회≫를 조선일보사 앞에서 개최하여 내외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사회각계에서 터져나오는 조선일보에 대한 이러한 비판과 배격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조선일보의 이런 반통일행각은 명백히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심히 배치되며 동족사이의 불신과 반목, 대결과 분열을 부채질하는 반민족, 반통일 범죄행위인 것이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저해를 주는 이따위 반통일행위는 언론의 ≪자유≫문제가 아니라 엄중히 다스려야 할 특급반역죄에 해당한다. 조국통일의 길우에 가로놓인 걸림돌인 이따위 반북모략지는 반드시 정의와 역사의 이름으로 폭파시켜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야 한다.

그밖에도 조성태국방부장관, 이정빈외교통상부장관, 장충식한국적십자총재, 김용갑한나라당의원 등과 같은 온갖 어중이떠중이 반통일분자들이 제 분수도 모르고 분별없이 날뛰고 있다. 그 무슨 기자회견이니 국회발언이니 하며 감히 이북의 존엄높은 체제를 시비걸거나 황당한 궤변과 망나니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군사깡패 조성태는 이미 6.15공동선언 이전에 이북을 ≪주적≫**으로 규정하며 자신의 호전적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바 있다**. 헌데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에도, 이번 10월 20일 국회국정감사에서 ≪북의 군대는 언제든지 도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고 떠들면서 감히 반북대결을 고취했다. 반북호전분자 조성태의 망발은 한마디로 6.15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도전이며 이북에 대한 용납못할 중상모독이다.

인간추물 이정빈은 여성비하발언의 장본인답게 사방에서 망언망발을 늘어놓았다. 특히 유엔총회의 연설이라는데서는 무엄하게도 지난 6월에 있은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한국정부의 ≪포용정책≫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망발을 한 것이다. 이는 유엔무대에까지 가서 떠들어댄 반통일일당들의 황당한 반북궤변이며 용납못할 모욕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정빈역도가 떠들어댄 ≪포용정책≫이라는 것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난 ≪햇볕정책≫의 변종으로서 외세에 의존하여 대화상대방을 어째보겠다는 반통일궤변이고 ≪**흡수통일정책**≫, ≪승공통일정책≫**에** 다름아닌 것이다. 그런가하면 이정빈역도는 일부 당국자들과 그 무슨 ≪미얀마≫사건 추모행사라는 것까지 벌여놓기도 하였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공작기관이 저지른 자작모략극을 이북과 관련지어 부각시킴으로써 이북에 들씌운 ≪**테러**≫ **고깔을 유지해보려는 교활한 여론조작책동인 것이다**.

반북반공분자 장충식은 한국에서 극우익언론으로 지탄받고 있는 월간 ≪조선≫과의 회견에서 숭고한 인도주의사업인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남북사이의 제도간의 대결문제로 공언하며 이북의 존엄높은 정치체제와 민중중심의 사회주의생활방식까지 비방중상하였다. 이는 적십자인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망발로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배치되고 인도주의문제해결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는 반통일행각인 것이다.

정치깡패 김용갑은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국가보안법개정에 앞장서는 것은 이북의 통일전선전략 수행에 앞장서는 격**≫**이라느니** ≪**민주당은 이북 노동당의** 2중대≫라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았고 한나라당은 대변인 권철언을 내세워 이를 적극 지지해 나섰다. 군사파쑈정권시절부터 망나니 정치깡패로서 분별없이 나서기 좋아하던 김용갑역도나 이런 놈을 비호하며 반북모략행각에 피눈이 된 망나니소굴 한나라당이나 민족, 민중의 이름으로 준엄히 단죄되고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그런가하면 지난 10월 5일에는 이남의 ≪건국회≫**를 비롯한 반공단체의 깡패** 100여명이 서울에서 그 무슨 ≪집회≫라는 것을 벌여놓고 이북의 최고수뇌부를 감히 걸고들며 6.15공동선언에 전면도전해 나서는 심상치 않은 난동을 부렸다. 반동깡패들이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 본격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온 세계가 이를 지켜보고 있는 때에 현정부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수도 한복판에서 백주에 공공연히 활개치며 이북체제를 모독해 나선 것이다. 이 사건은 몇몇 악질분자들의 우발적 사태가 결코 아니라 남북관계를 6.15공동선언 이전 상태로 돌려놓으려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죄행위인 것이다. 더 나아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서울방문을 막아보려고 발광하는 한편 실제 답방이 이루어질 경우 어떤 식으로 반북난동을 벌일 것인지 생동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극익반공분자들의 발악적 준동이 어느 지경에 이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반통일역도들의 황당한 망발과 발악적 책동은 갈수록 그 도수를 더해갈 것이다.

겉으로는 산발적인 이런 반통일책동들엔 사실 내외의 반통일세력, 극우호전세력의 위험천만한 음모가 숨어있다. 분단기득권세력들은 당면해서는 6.15공동선언 이후 급속히 발전하는 통일평화정세를 막아보려고 책동하고 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정세를 완전히 전복시켜 전쟁도발의 극단적 망동마저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반통일일당들의 배후에는 반북반통일공작에 이골이 난 미중앙정보국이 있고 그 말단하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있다. 이들은 오랫동안 손때 묻혀 키워온 정치인, 언론인, 교수 등을 내세워 궤변과 망동의 경쟁을 시키며 차세대 반통일세력의 우두머리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온갖 어중이떠중이 반통일분자들이 상전 미제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앞다투어 백색충성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3) 반통일공작에 피눈이 된 국가정보원

악명높은 국가정보원이 반통일공작에 피눈이 되어 미쳐 날뛰고 있다.

잘 알다시피 국가정보원은 미중앙정보국 한국지부의 말단하부기

관으로서 미중앙정보국이 직접 만들었고 미중앙정보국의 졸개들이 지휘하며 미중앙정보국의 각본과 정보에 의해 운영되는 철저한 사대매국, 파쑈모략의 범죄집단이다. 현정권은 미제의 지령하에 악명높은 국가안전기획부, 곧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격상시키며 남산에서 내곡동으로 그 소굴을 바꾸었지만 개가 사람으로 될 수 없듯이 그 본질은 결코 바뀔 수 없다.

미중앙정보국의 현지 말단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국가안전기획부)이 그간 저지른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책동은 셀 수 없이 많다. 이 특급범죄집단은 상전이 시키는 대로 ≪문세광저격≫**사건**, ≪박정희암살≫**사건**, ≪아웅산테러≫**사건**, ≪칼기폭파≫**사건**, ≪이한영암살≫**사건 등의 테러사건과** ≪통일혁명당≫**사건**, ≪**남조선민족민주전선**≫**사건**, ≪**남한조선노동당**≫**사건**, ≪**구국전위**≫**사건**, ≪민족민주혁명당≫**사건**, 등 수많은 조직사건을 조작하여 미제와 그 주구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파쑈모략의 소굴 국가정보원은 이 과정에서 수많은 애국인사, 통일인사들을 고문과 폭력으로, 테러와 사형으로 학살하였다. 국가정보원의 고문과 테러에 의해 반신불수가 되거나 정신병환자가 된 사람은 셀 수 없이 많다. 국가정보원은 또한 돈과 향락으로 매수하거나 고문과 위협으로 배정환, 김영환과 같은 변절자들을 만들어내 운동대오 속에 깊이 박아넣고 프락치로 이용해먹고 있다.

이런 반북반통일집단인 국가정보원이기에 6.15공동선언 이후 통일과 평화의 정세가 도래하자 절대절명의 위기의식으로 사활적인 발악책동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우선 고문과 모략의 소굴 국가정보원은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사건을** 재조작하여 통일정세를 뒤집어보려고 간교하게 책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진수, 한용진씨 등 적지않은 애국운동가들이 고문을 받으며 철창 안에 수감되었다. 이 모략기관은 또한 희대의 변절자 김영환이나 조혁과 같은 너절한 반북분자들을 동원하여 반북모략극을 벌이는가 하면 운동대오를 분열와해시키려는 이간책동까지 벌이고 있다. 김영환이나 조혁과 같이 변절한 후 국가정보원의 개가 되어 반북모략책동에 나서고 있는 놈들도 앞서 열거한 반통일분자 못지 않은 인간추물들이며 반통일역적들이다.

조직사건을 조작하는 것은 모략기관 국가정보원의 대표적인 임무이다. 이 모략집단은 ≪민족민주혁명당≫**사건의** 재조작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제는 최소한의 분별력도 잃고 이른바 ≪충북지역간첩단≫**사건이니**, ≪백두청년회≫**사건이니 하는 조직사건을 터뜨려 통일정세**, 완화국면을 뒤집어보려고 획책하고 있다. 물론 이런 조작놀음에 속을 한국의 운동대오가 아니며 국민대중이 아니다. 국가정보원의 유치한 조작음모는 충북지역의 애국적 대중단체의 폭로투쟁과 지태환씨와 이은경씨의 영웅적인 아사단식단수투쟁, 완전한 묵비권행사로 철저하게 파탄났다. 빈깡통 김영환역도가 국가정보원의 고문맛을 보기 바쁘게 변절한 까마귀라면 최근에 구속된 청년여성영웅 이은경씨는 그런 고문을 묵비단식투쟁으로 이겨낸 백로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폭압수사는 오히려 한국의 새로운 청년영웅들을 탄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은 국가정보원이 보안수사대와 국군기무사를 조종하며 자행되고 있다. 백만학도의 대표조직이며 애국적인 대중조직인 한총련은 여전히 이른바 ≪이적단체≫로 매도되고 그 대의원들은 마녀사냥감이 되고 있다. 또한 정보모략기관이 심은 프락치들은 대학내에 잡입하여 선거를 훼방하고 학생운동을 분열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한신대조직사건≫과 같은 군입대한 운동권출신들을 묶어서 터뜨리는 해묵은 수법까지 재등장하고 있다.

출판보도분야에 대한 공안탄압이 빠질리 없다. 정보모략기관은 인터넷 ≪청춘≫을 탄압하고 그 대표 윤여창씨를 구속하더니 ≪살림터≫ 출판사의 송영현사장마저 구속시키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 사건들은 국가보안법의 이른바 ≪찬양고무조항≫을 어떻게든 유지해보려는 한편 만약 그 조항이 개정될 때를 대비한 사전정비작업의 일환으로서 완전히 시대를 역행하는 악질적인 반동공세가 아닐 수 없다.

감시와 모략의 소굴 국가정보원은 그간 ≪진보네트워크≫를 압수수색한다 뭐다 분주탕을 치더니 최근에는 손아래 행정기관인 정보통신부를 사촉하여 가상공간에서의 국가보안법인 ≪통신질서확립법≫**을 만들어 국민들을 가상공간에서까지 삼중사중으로 감시하려 하고 있다**. 만약 이 법이 실행된다면 운동대오의 컴퓨터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의 모든 ≪피시방≫, 전국민의 모든 컴퓨터는 국가정보원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고 그 안의 모든 정보는 국가정보원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다. 국가정보원이야말로 해킹을 반대한다는 미명하에 해킹 중에서도 가장 악의적인 해킹을 전면적으로, 합법적으로 자행하려고 하는 인터넷시대의 특급범죄집단이다.

국가정보원이 올한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공작은 무엇인가. 바로 통일운동대오에 대한 분열이간책이다. 그 결과 한국의 통일운동대오는 적지않은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해결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다. 범민련 분열의 원흉인 분파주의자들이 누구인지, 한총련 침체의 원인인 관료주의, 보신주의, 분파주의자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가려보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 대학선거 결과를 통하여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듯이 국가정보원의 분열모략책동은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머지않아 범민련과 한총련의 참다운 단결과 힘찬 투쟁은 예전의 모습을 훨씬 뛰어넘으며 비약을 맞이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김영삼역도를 비롯한 온갖 어중이떠중이 반통일분자들에 줄을 늘여놓고 반통일공작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해체될 때까지 반통일모략책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반통일모략책동은 국가정보원의 본업이며 사활적 과제이다. 내외의 반통일세력, 호전세력이 반통일공세를 다그치고 있는 이 때에 국가정보원은 더더욱 그 돌격대로, 모략기관으로 미쳐날뛸 것이다.

4) 내외 호전분자들의 위험천만한 전쟁책동

내외호전분자들의 준동이 심상치 않다.

≪**독수리**−2000≫**한미합동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긴장된 상황에 이남의 전투기와 전투함이 각각 이북의 영공과 영해를 고의적으로 침범하였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좋게 발전하며 조국반도에 통일과 평화의 기운이 높아져 가는데 극도의 위기의식을 느낀 내외의 호전분자들이 국면전환을 위한 제2의 ≪서해사건≫까지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침략과 약탈을 떠난 제국주의란 없다. 하여 제국주의의 사냥개들인 극우호전분자들은 하나같이 전쟁미치광이들이다. 미제국주의는 제1, 2차 세계대전과 쏘미냉전으로 비대해진 군산복합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라크전≫**이나** ≪유고전≫**과 같은 국지전을 매년 벌이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심각한 중증환자이다**.

조국반도는 이런 미제침략세력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책동하는 제1선이다. 미제침략세력은 이미 북침핵전쟁시나리오인 ≪5027작전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90년대 내내 ≪핵사찰≫이다, ≪금창리≫**다** 뭐다하며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구실만 찾아왔다. 급기야 작년에는 전쟁직전에서나 볼 수 있는 ≪서해사건≫까지 일으켰다.

만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활한 군사전략과 무적필승의 조선인민군이 없었다면, 일심단결의 조선인민이 없었다면 조국은 진작에 핵전쟁으로 불바다가 되어 전민족은 핵참화의 파국을 맞았을 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전략, 담력에 의하여 90년대의 조미핵대결전에서 패배한 미국은 본질상 조미수교와 평화협정을 의미하는 ≪조미기본합의문≫**과 이를 재확인한** ≪조미공동코뮤니케≫**에 항복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조국반도의 전쟁먹구름은 완전히 걷히지 않았으며 내외의 호전분자들도 여전히 악랄하게 발악하고 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선 제1차 세계대전처럼 총성 한발로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것이

다. 내외 호전분자들의 반북전쟁책동은 지금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우선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현대판 ≪트루만주의≫**인** ≪신냉전≫**정책을 세우며 ≪유고전쟁≫때에는 중국대사관까지 폭격하는가 하면 그 무슨 ≪동북아시아의 위협≫이니 하는 것을 조작하며 그 대응책으로 환상적인 ≪국가미사일방어체계≫**니 ≪**전역미사일방어체계**≫니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에 발표된 미공화당의 ≪**강령초안**≫이라는데서는 조선을 염두에 두고 조국반도에서 그 무슨 침략행위를 억제하고 대량살육무기의 전파를 막으며 효과적인 미사일방패들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였다.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미군수독점체들의 탐욕을 충족시켜주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하고 서유럽나라, 일본 등을 계속 손아래에 두기 위한 세계제패전략에 다름아닌 것이다. 하여 현존군사능력을 초월하여야 하므로 도저히 불가능한 환상적 계획을 가능하다고 여론을 조작하며 모험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군국주의의 전면적 발호와 전쟁준비의 완성이다. 최근 일본방위청은 ≪2000년 방위백서≫라는데서 조선이 핵무기개발의혹을 가지고 있으며 탄도미사일의 장거리화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을 뿐아니라 화학무기용화학제를 보유하고 있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전후 미국을 등에 업고 급속히 재생재무장된 일본군국주의세력은 이제 간이 부어서 핵무장화와 군사대국화를 열망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조선을 걸고들며 무장장비의 현대화, 장거리화, 전략무력화를 다그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미일방위협력지침관련법(전쟁법)≫**이 채택된 후 주변사태를 가상하여 진행되는 첫** 실동훈련인 ≪**미일공동통합연습**≫**이** 11월 2일부터 18일까지 일본영토에서 진행되었다. 일본은 한편에서는 대화니 협상이니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자위대≫육해공군과 일본주둔미군, 미태평양함대소속 무력까지 동원하며 사상초유의 종합적인 전쟁연습을 벌이는 양면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주변사태공동대처≫의 미명하에 일본을 저들의 전쟁수행에 동원하여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배와 통제를 실현하려 하고 있으며 일본반동들은 미국의 군사작전에 적극 참가하는 식으로 ≪자위대≫무력의 해외침략을 실현시켜 군국주의 야망을 이루어보려고 하고 있다. 이밖에도 모리총리의 ≪**신의 나라**≫**발언**, ≪히노마루≫**의** 국기화와 ≪**기미가요**≫**의** 국가화, 각료와 의원들의 ≪야스구니진쟈≫**공동참배**, 육상≪자위대≫의 무력개편, 수도 한복판에서의 열병식, ≪**종합재해방지훈련**≫, ≪방위청≫**의** ≪**국방성**≫**승격놀음**, 미국의 대일헌법개정요구, ≪**불심선**≫**추적사건**, 도꾜지사의 ≪**북선**≫**발언**, ≪**일본인납치**≫**시비**, 기만적인 재일동포의 ≪**참정권**≫**놀음**, 우익깡패들의 반조선, 반총련소동, 침략미화교과서편찬놀음, ≪**독도망언**≫ **등 일본의 국내** 파쑈화와 전시체제화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진행되어 이제는 완성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증거는 이루헤아릴 수 없이 많다.

다음으로 6.15공동선언 이후에 자행되고 있는 반북전쟁책동이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어 조국반도에 전례없는 통일과 평화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데 위기의식을 느낀 미일한 전쟁미치광이들은 연일 호전적인 발언을 해대는 한편 각종 합동군사훈련과 모험적인 대북도발책동까지 벌이고 있다. 한국의 군사깡패 조성태국방장관은 올해 5월 말에 일본에까지 날아가서 남북최고위급회담에 대처하여 미일간의 공조와 군사협력과 교류를 떠벌이며 회담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런가하면 6월말에는 한국임시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완벽한 안보태세가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는데 밑바탕이 되었다≫는 얼빠진 주장을 하였으며 심지어 이북을 ≪주적≫**으로 명시한 군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올해 8월21일부터 9월 1일까지는 ≪을지포커스렌즈≫**합동군사훈련이 벌어졌다**. 여기에는 유사시 한국과 미국 군대의 협동작전능력을 개선한다는 미명하에 한국강점미군 1만 3천명과 미국본토와 괌도, 일본 등지에 있는 예비군 3천 8백명, 한국군 5만 6천명의 방대한 병력이 참가하였다. ≪을지포커스렌즈≫**군사연습은 미국과 한국당국이 조선을 무력으로 압살하기 위하여 벌이는 대표적인** 북침전쟁연습으로서 ≪**팀스피리트**≫**훈련이 중지된 후 그 기능까지 포함시켜 발전시킨 하나의 종합적인** 북침공격훈련이다. 미국과 한국의 호전세력들은 9월 13일 대구부근의 ≪전투기념당≫이라는데서 6.25전쟁시기의 ≪전투50주년기념≫놀음을, 14일부터는 2일간에 걸쳐 ≪인천상륙작전 50주년기념≫광대극을 벌이기도 하였다. 또한 18일 서울에서 미국과 한국간의 ≪미사일사거리≫연장을 위한 모의를 벌였으며 20일에 열린 제22차 ≪미국한국군사위원회≫에서는 그 무슨 ≪연합방위태세향상≫이요, ≪**군사동맹관계강화**≫**요 하는** 대결전쟁넋두리를 늘어놓았다. 한국의 호전분자들은 전쟁에 대비한다고 하면서 비무장지대에서부터 서울까지의 전구간에 1백만개 이상의 지뢰를 매설하고 수많은 자폭식지뢰를 살포할 계획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10월에 들어서도 한국의 호전적인 군사당국은 지난해에 비해 6.5프로나 늘어난 내년도 국방예산의 세부내용과 이른바 ≪2001-2005년도 국방중기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군사당국은 이를 통해 7천톤급 이지스함과 4천톤급 구축함,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공중급유기들과 공격용직승기, 무인정찰기, 유도무기 등 현대적인 최첨단 전쟁장비들을 새로 실전배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반북호전분자 조성태는 국회국정감사에서 ≪북의 군대는 언제든지 도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고 떠들면서 반북대결을 고취했다. 그리고 이북의 거듭대는 경고를 무시하고 한국당국은 수많은 미국제 전쟁장비를 끌어들이고 있으며 10월 25일부터는 또다시 이북을 반대하는 대규모 ≪독수리-2000≫**이라는 합동군사훈련을 기어코 벌여놓았다**. 더욱이 ≪독수리-2000≫**합동군사훈련에 광분하던 미제침략군은** 10월 26일 11시 22분경 전투기 2대를 불의에 개성시 판문군 일대 북측 영공 깊숙이 침투시키는 엄중한 도발책동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11월 14일 8시 30분경에는 한국군해군전투함정 4척을 10척의 어선집단속에 끼여 장산곶 서쪽 이북측 영해 깊숙이 침투시켰다. 한국군해군전투함정은 조선인민군해군경비정이 긴급출동하자 어선들을 빼돌리고 전투태세를 갖추었으며 한국해군전투함선 3척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 이북측 영해를 침범하였다. 대규모 북침전쟁합동군사훈련이 벌어지는 즈음에 감행된 이 모험적인 도발책동들은 완전히 의도적이고 계획된 것으로서 6.15공동선언을 휴지장으로 만들며 제2의 ≪서해사건≫, 제2의 조국전쟁을 일으키려는 위험천만한 모험극인 것이다.

내외 극우익호전분자들의 모험적인 전쟁책동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방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새로운 공고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조국반도 만악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며 조국반도의 완전한 비핵지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우선 조미간에 체결하고 세계에 확약한 ≪조미기본합의문≫**과** ≪조미공동코뮤니케≫**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국반도와 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모험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 대결선동, 전쟁책동을 즉각 중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을 부추기며 벌이고 있는 일군국주의의 재무장화, 일본의 파쑈화정책을 걷어치워야 할 것이다.

미일한 호전분자들은 조국반도에서의 전쟁이 전지구적 최대재앙을 불러올 핵전쟁이 될 것이며 그 후과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본토에까지 미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인류대재난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제2의 조국전쟁은 미제의 간첩 박헌영이 남로당에 박혀 암약하던 6.25당시와는 180도 다르다. 우선 조선은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중심으로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들이 완전히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으며 이 지구상에 조선인민군의 섬멸적 타격을 피할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변혁의 사령탑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이 지난 수십년간 한국변혁운동을 현명하게 영도함으로써 내

외에 절대적인 권위를 이룩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변혁운동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향도이념으로 하여 각급 변혁적 대중단체를 조직하였으며 지금은 범민족통일전선을 건설하고 대규모의 민족민주전선건설을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로 변혁의 주체역량이 장성한 상황이다.

하여 조국반도에서 또다시 미제와 그 호전적인 주구들이 기어코 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오히려 우리 민족, 민중은 이를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아 미제와 그 주구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전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전쟁을 일으킨 미일호전분자들에게 천백배의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며 놈들이 그간 조국반도에서 저지른 온갖 학살만행과 범죄사건에 대한 대가를 천추만대를 두고 받아낼 것이다.

5) 반통일세력의 발악적 책동을 애국적 대중투쟁으로 분쇄하자

우리 애국운동대오는 이런 반통일세력의 발악적 책동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우선 반통일일당들의 수괴로 나서고 있는 김영삼역도에 투쟁의 과녁을 집중하여야 하며 김영삼역도의 정치생명을 완전히 끊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애국운동대오는 제한된 투쟁역량을 분산시키지 말고 먼저 반통일일당들의 수괴로 나서고 있는 김영삼역도를 집중타격하여 그 망나니기세를 꺾어놓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어중이떠중이 반통일분자들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역도가 겁없이 이북의 최고수뇌부를 걸고들며 그 무슨 ≪서울방문반대 2천만서명운동≫까지 계획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 기회에 희대의 사대매국노이며 파쑈광, 전쟁광이며 부정부패의 왕초인 반통일역적 김영삼의 정치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대중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

김영삼역도와 어중이떠중이 반통일분자들, 국가정보원과 같은 모략기관들, 내외호전분자들과 같은 온갖 반통일세력들이 지금 발악적으로 준동하고 있는 배경은 바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통일과 평화의 정세가 급격히 성숙되는데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하여 우리는 반통일세력들의 반통일책동들을 분쇄하는 한편 통일평화정세를 더욱 성숙시키는 적극적인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야 한다. 통일평화정세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한 투쟁은 다름아닌 6.15공동선언에 대한 지지와 그 이행이며 특히 머지않아 이루어질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서울방문의 성과적이고 안전한 성사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애국운동대오는 민족자주선언이며 통일지향선언이며 민족단합선언인 6.15공동선언에 대하여 그 역사적 의의를 널리 선전하며 그 구체적 이행을 위한 사업과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6.15선언의 이행을 가로막는 내외반통일세력들과 투쟁하는 한편 현정권이 그 이행사업을 성실하게 전개하도록 압박하여야 할 것이며 연방제통일방안을 널리 홍보하고 대중적인 자주교류활동을 적극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통일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수 있는 주체를 마련하는 것이 절박한 조직적 과제이다.

무릇 주체가 강화되어야 운동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는 법이다. 우리 애국운동대오는 반통일세력의 발악적 준동을 진압하고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통일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수 있는 통일운동연대조직을 건설함으로써 시급히 대열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는 반통일세력들이 미제국주의의 조종하에 조직적으로 준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는 더욱 절박한 과제로 된다.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범국민통일연대조직은 민화협을 제외한 모든 6.15공동선언지지세력을 망라하는 광범한 연대조직으로 건설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에는 민화협과 적극 연대하며 공동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애국운동대오는 ≪통일운동연대준비위≫**와** ≪**실천연대**≫**라는 두 개의**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연대조직을 건설하거나 준비중에 있다. 이 두 개의 연대조직은 그 목표와 방법에 있어서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며 투쟁해온 주체면에 있어서도 별 차이가 없다. 다시말하여 두 개의 조직으로 나뉘어 활동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헌데 양측은 어느 한쪽에서는 다른 한쪽을 보고 해소하고 들어오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식이라면 거부하겠다고 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마치 범민련이 이종린선생측과 강희남선생측으로 분열되어 다투던 양상이 확대재연된 지금의 상태를 바라보는 모든 운동가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이렇게 된 원인은 원칙을 견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범국민통일연대조직을 범추본처럼 범민련이 중심이 되어 6.15공동선언이행에 공감하는 광범한 세력을 단일하게 결집하며 건설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간 범민련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측은 이런 연대조직건설을 홀시하였고 상대측은 범민련을 중심에 두지 않고 일부 단체들만으로 조급하게 연대조직을 건설한 것이다.

또한 구동존이원칙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사 같은 목표를 가진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통성을 우선하고 차이성을 존중하며 통일단결과 실천투쟁을 지향하는 원칙을 견지한다면 사실 단결을 이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조직통합에 대한 진전된 소식은커녕 반통일세력들과의 공동투쟁 소식하나 들리지 않는다.

또한 투쟁을 우선하고 기층에 근거하는 원칙을 견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반통일세력들은 간악하게 준동하고 있으며 역사적인 서울답방도 멀지않은 중차대한 국면이다. 기층은 반통일세력과의 투쟁,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투쟁을 절절히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손잡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고 함께 투쟁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체없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결방도로 된다. 이제라도 이상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시급히 통일단결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운동에서 분열은 백해무익한 이적행위로서 여기에 기생하는 것이 국가정보원과 같은 모략기관이다.

모든 통일운동가와 기층단위는 과연 누구누구가 당면한 반통일역적들과의 투쟁을 태공하며 통일운동대오를 분열시키는가를 똑똑히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통일운동대오는 일체의 패권주의, 분파주의를 배격하고 당면한 반통일세력들과의 투쟁에 공동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반드시 해를 넘기지 말고 조직통합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반통일세력들의 반통일책동에 대한 투쟁에서는 폭로전, 대중전이 중요하다.

반통일세력들의 반통일책동의 본질과 죄악상을 제때 낱낱이 폭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폭로선전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광범한 국민대중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세의 요구와 대중의 정서에 맞지 않는 좌경적인 방식외에는 모든 수단과 형식, 방법을 동원하여 창발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반통일세력들의 반통일책동을 분쇄하는 투쟁을 대중자신의 투쟁으로 전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민족의 통일과 평화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반통일반역행위인만큼 우리 민중이 반통일역적들의 준동의 해악성을 깨닫기만 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운동대오는 이후 건설될 6.15공동선언지지연대조직에 의거하여 광범한 국민대중을 불러일으키는 대중투쟁을 적극 조직전개하여 반통일역적들의 범죄행위들을 철저히 분쇄하여야 할 것이다. 반통일역적의 수괴 김영삼역도를 규탄하는 대중투쟁을 14시간이나 완강히 전개

한 고대학생의 투쟁이야말로 널리 일반화되어야 할 가장 좋은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통일변혁구상과 세련된 영도가 있는 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반드시 실현된다.

제아무리 내외의 반통일분자들이 미쳐날뛴다고 하여도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하에 통일의 대하로 나아가는 역사의 대세를 돌이킬 수는 없다.

모든 애국운동대오는 반통일세력과의 정의의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반통일세력의 발악적 준동을 분쇄하고 통일애국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모두다 한몸한마음이 되어 힘차게 투쟁해 나아가도록 하자!

모두다 반통일세력과의 정의의 투쟁에 과감히 분기하자!
반통일일당의 수괴 김영삼역도를 처단하자!
어중이떠중이 반통일분자들을 투쟁으로 진압하자!
반북반통일모략기관 국가정보원을 해체하자!
내외 반북호전세력의 전쟁책동을 분쇄하자!
분파주의를 배격하고 통일단결을 실현하자!
범국민통일운동연대조직으로 자주민주통일을 앞당기자!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주체 89년 12월 8일





조선일보는 이회창패당의 기관지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논평(대변인 보도 3호)

최근 조선일보 사주가 천문학적 탈세비리로 구속수감되었다. 사실 그 비리라는 것은 조선일보가 저질러온 매국행각, 부정행각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하여 이 기회에 조선일보의 모든 죄행이 낱낱이 폭로단죄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이회창패당만은 조선일보를 ≪대쪽신문≫으로 찬양하고 있다. 심지어 세무비리조사를 두고 ≪언론자유유린≫이라며 궤변을 늘어놓는 상황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일보는 일제시기 친일로, 해방이후에는 친미로 성장한 매판신문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공반북으로 조국반도를 전쟁국면까지 충동질한 반통일모략지이다. 또한 역대 파쇼독재자들을 미화하고 민주주의탄압에 앞장선 파쇼매문지이기도 하다.

이회창은 부시정권의 특급주구가 되어 반북대결에 광분하고 있는 민족반역자이다. 이 놈은 지금 ≪주한미군철수불가론≫과 ≪주적론≫, ≪자유민주주의체제통일론≫으로 6.15공동선언을 파탄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상호주의론≫과 ≪퍼주기론≫으로 남북경제협력을 훼방하며 이북을 중상모독하고 있다. 과거 판사시절 ≪민족일보≫사장을 처형시키고 모자라 지금 ≪국가보안법개정불가론≫을 외치는 악질 파쇼광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선일보와 이회창은 그 본질에서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하기에 조선일보가 이회창패당의 기관지로, 이회창패당이 조선일보의 정치부대로 결탁하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 배후조종자가 대북강경책동에 광분하는 부시정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김대중정권은 이회창패당과 조선일보를 그대로 놔두어서는 6.15공동선언실현도, 심지어 정권유지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부시정권의 배후조종하에 이회창패당과 조선일보는 6.15공동선언파탄을 집요하게 획책할 것이며 이는 결국 김대중정권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회창패당과 그 기관지인 조선일보의 목적은 6.15공동선언파탄과 정권창출이므로 현정권과의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 현정권의 유일한 출로는 6.15공동선언실현과 반이회창, 반조선일보 투쟁을 일관되게 전개하고 있는 애국적 민주세력과 공조하며 함께 투쟁하는 길뿐이다.

현정권은 이번 사주구속을 계기로 조선일보의 지난 매국행위, 모략행위를 남김없이 폭로단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애국적 민주세력과 적극 공조하며 조선일보해체운동, 민주화운동을 동요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0(2001)년 8월 25일

서울